

2004.5

특 집 **총선 이후 한국경제** - 경제운영 방향과 과제

|경제정책해설|

- 국가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 도모
- 국가 원자력방재체제 구축



|국내경제 이슈|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경쟁력 분석

|이달의 초점|

청년실업, 해법 없나

|탐방|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세계경제의 현장|

- OECD 농업정책 논의 동향
- 싱가포르 이슈 논의 동향

나라경제

2004. 5 통권 제162호



2004년 4월호

| 탐방 |

04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우리나라 IT정책의 컨트롤 타워 / 백재현



| 특집 |

총선 이후 한국경제 - 경제운영 방향과 과제

- 12 수출·내수 간 균형발전에 힘 모아야
- 現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 신석하
- 16 기업이 경제 중심에 자리잡도록 해야 / 이언우
- 20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분배 개선을 / 박원암
- 24 경제정책의 초점이 분명해야 / 전주성
- 28 경제회생을 위한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 / 허찬국
- 33 인력 개발이 성장엔진 형성의 핵심전략 돼야 / 노진귀
- 37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주력 / 강호인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 이달의 초점 | 청년실업, 해법 없나

- 42 구조적 차원의 고용·산업·교육 연계정책 필요 / 이병희
- 45 포스트 산업사회에 걸맞는 교육·노동시장 연계를 / 장원섭
- 48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제고 시급 / 김석진
- 51 청년실업 탈출 십계명 / 신석호

| 경제정책해설 |

- 54 국가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김재홍
- 57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 김성하
- 62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방안 / 서석주
- 66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 도모 / 고철진
- 70 국가 원자력방재체제 구축 / 이인일
- 74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 임종규

| 세계경제의 현장 |

- 77 OECD 농업정책 논의 동향 / 김대근
- 81 싱가포르 이슈 논의 동향 / 박중환

| 경제동향 |

- 85 국내경제 동향 수출급증과 내수부진 양극화 속 물가불안 보이는 국내경기
- 91 세계경제 동향 회복세 심화되는 세계경기

| 경제이슈 |

- 97 국내경제 이슈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경쟁력 분석
- 106 **생활경제** 알아두면 득이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 '현재가치' / 한상언

발행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발행인 김종수 KDI 원장
편집인 한승희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장

편집위원

재정경제부 김홍진 경제홍보기획단 총괄기획과장
 외교통상부 신현석 통상기획홍보팀장
 과학기술부 류중익 정책총괄과장
 농림부 심상인 행정법무담당관
 산업자원부 박일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부 서병조 기획예산담당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부 강형신 정책총괄과장
 노동부 한창훈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부 정병윤 기획담당관
 해양수산부 우예중 기획예산제도과장
 기획예산처 정홍상 예산제도과장
 공정거래위원회 신호현 총괄정책과장
 금융감독위원회 박상조 기획과장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김흥빈 총괄조정팀장
 KDI 경제정보센터 김인철 정책홍보실장
 편집간사 이재영 재정경제부 경제홍보기획단

편집장 심재학 KDI 경제정보센터

편집자 이재열, 유성임, 이정미

배포업무 김석화

발행일 2004년 5월 1일(매월 1회 발행) 제15권 제5호(통권 제162호)

등록일 1990년 11월 14일(문화라 04859호)

발행처 KDI 경제정보센터 ISSN 1277-8033 5

주소 (130-012)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130-650)서울 청량우체국 사서함113

전화 02-958-4114

팩스 02-3295-0744

홈페이지 <http://epic.kdi.re.kr>

e-mail nara@kdi.re.kr

기사의문의 02-958-4634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02-958-4326

구독료 권당 2,500원, 연간 25,000원

인쇄 고려문화사

표지디자인 상상가가

『나라경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라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필자의 소속 기관이나 본지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앞줄 좌로부터 송유중 정책총괄과장, 서광현 기술정책과장, 최준영 정보통신정책국장, 최재유 지식정보산업과장, 뒷줄 좌로부터 권용현 정책총괄과 사무관, 오남석 산업기술과장, 이상진 소프트웨어진흥과장, 김광수 기술정책과 서기관

정보통신정책국은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보통신(IT) 부문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 IT 연구개발(R&D), 표준화, 법·제도 정비, IT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 국내 IT분야의 뼈대를 짜고 있다.

우리나라 IT정책의 컨트롤 타워

요

증 정보통신부의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중추적 역할을 맡을 부처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2.9% 성장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국내 정보통신(IT) 부문만 놓고 보면 생산 11%, 수출 24.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IT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6%로 0.9%p가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쯤 되면 IT를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제 IT산업의 명암은 곧바로 국가경제의 명암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이같이 중요한 IT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이다. IT 연구개발(R&D), 표준화, 법·제도 정비, IT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등 국내 IT분야의 뼈대를 짜는 곳이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지난해 정보통신부의 9대 신성장동력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품목별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IT산업의 건강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주력했다. IT M&A 펀드를 조성해 ‘될성부른’ IT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소프트웨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외산 제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과당경쟁으로 구조적 취약함을 보여온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사업환경 개선의 기초도 닦았다. 이와 함께 공급망관리(SCM) 모델을 도입, IT인력 수급체계에 시장경제 원리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 정부부처로서는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정에 민간 PM(Project Manager)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요즘 정보통신부가 민간기업 못지 않은 혁신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데는 정보통신정책국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올해 IT생산 240조원, 수출 70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정비한 각종 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함으로써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정보통신정책국은 정보통신부의 이 같은 올해 목표 달성에 핵심 역할을 할 조직이다.

정보통신정책국은 현재 국장(2급) 이하 5개課로 구성돼 있다. 인원은 6급 이하 21명, 기능직 7명, 5급 이상 31명 등 총 59명이다.

정보통신정책국을 이끌고 있는 최준영 국장(행시 20회)은 참여정부의 고위직 공무원 교환정책에 따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을 하다 지난 1월 26일 정보통신부로 왔다. 온화한 성품에 말수가 적은 최 국장이지만 그를 가까이서 지켜 본 사람은 ‘불도저’로 부른다. 그만큼 정해진 목표에 대해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는 뜻이다.

그는 부임 석달이 채 안됐지만 IT정책에 대해 뚜렷한 소신을 피력할 정도로 빠른 업무과외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중소기업청 벤처기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신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다. 진단체 장관이 중소기업육성과 관련 최 국장에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산업자원부 출신인 최 국장이 온 후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부처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있는 점도 그의 숨은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총괄과는 정보통신산업 육성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주무과로서 정보통신부의 'MIC 8-3-9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고 점검해 IT 가치사슬(value chain)의 성과를 높이는 일이 주된 임무다. 'MIC 8-3-9 프로젝트'란 8가지 서비스의 활성화와 3가지의 인프라 구축, 9가지의 신성장동력을 의미한다.

활성화할 8가지 서비스는 2.3GHz 휴대인터넷·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홈네트워크 서비스·텔레매틱스·무선 인식 시스템(RFID :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system)·비동기식 3세대 이동통신(W-CDMA)·지상파 디지털TV·인터넷전화(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말한다.

3가지 인프라는 광대역 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U(유비쿼터스)-센스 네트워크·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IPv6) 등이며, 9대 신성장동력은 차세대 이동통신·디지털TV·홈네트워크·IT SoC(System on Chip)·차세대 PC·임베디드 소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텔레매틱스·지능형 로봇 등이다(8페이지 화보 참조).

이와 함께 IT분야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을 통한 경제정책, 범국가적 과학기술 정책협력 등에 대한 정보통신부 소관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것도 정책총괄과의 임무다. 이 밖에 전기통신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화 촉진기금 합리화 대책 수립, 정보통신 관련 동향분석 등도 중요한 업무의 하나다.

송유중 정책총괄과장(행시 28회)은 정보통신지원국 부가통신과장, 통신업무과장, 체신금융국 보험과장, 기술정책과장 등 정보통신부의 주요 업무를 두루 거친 정통 IT맨. 그는 강한 추진력과 높은 친화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중책을 맡고 있으며 아래 위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

▲지식정보산업과는 정보통신인력 양성,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과 IT클러스터 조성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최근에는 IT인력의 질적 불일치(skill mismatch) 완화를 위해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39개

대학에 SCM 모델을 확산하고, 대학 IT연구센터를 중점 육성해 박사급 1,100명과 석사급 2,400명 등 고급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광대역 통합망 및 고성능·초소형·지능형 단말기의 등장으로 'Digital Life' 시대에서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제도의 개선, 지역 디지털콘텐츠 육성시설 확충, 신기술이 적용된 첨단 콘텐츠 개발 지원, 우수 디지털콘텐츠 발굴 등의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07년까지 서울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에 연면적 4만여평 규모의 첨단 IT콤플렉스를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설계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IT콤플렉스에는 해외 유명 IT기업의 R&D센터와 국내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입주될 예정이며, 컴퓨터그래픽 등 첨단 콘텐츠의 개발 및 관련 기술 표준화가 이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관련 통상대응 등도 지식정보산업과의 주요 업무다.

최재유 과장(행시 27회)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쳤다. 2년 남짓 만국우편연합에 파견근무도 했던 최 과장은 우정사업본부 출범 후 경영기획실 경영관리과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빈틈없는 업무처리는 물론 과원들의 자발적 업무 참여를 이끌어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소프트웨어진흥과는 공개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SI)·게임 등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 및 계약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해와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올 들어서는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및 관리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도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개소프트웨어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4개 공공 및 교육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리눅스 기반으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전자정부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일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및 소프트타운 운영 활성화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

이상진 과장(행시 32회)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으며 OECD에도 파견근무를 한 국제 감각을 갖춘 인물이다. 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업무과, 통신기획과에서 오래 근무해 기획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정책과는 정보통신 R&D를 총괄하고 유무선 통신사업 육성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과다. 특히 IT신성장동력 산업별 핵심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기술기획과 실무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기술개발 기획·평가·상용화 및 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선진관리시스템(PECOM)을 도입해 R&D프로세스 및 관리절차를 혁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올 들어서는 글로벌 R&D 환경에 부합되도록 국내 연구개발 지원체도를 개선하고 해외 R&D센터를 유치하는 일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IT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핵심부품을 국산화하는 중책도 맡고 있다.

서광현 과장(기술고시 18회)은 항공대학교 통신공학과를 나와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정통 기술관료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서 과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해 정보통신부 안팎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산업기술과는 IT중소벤처기업을 신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생적 기업군으로 키우는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IT중소벤처기업의 공동협업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구매, 공동콜센터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물적 담보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에 기술담보와 신용보증방식의 융자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정례 IR 개최, 국내의 벤처캐피털 CEO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는 물론 M&A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남석 과장(행시 33회)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나와 정보통신진흥국에서 오래 근무해 IT기업체의 실상에 밝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는 또한 국제협력관실 국제기구과와 APT(아태전기통신협의체) 통신전문가로 2년간 파견근무를 해 두터운 역내 IT 인맥을 갖고 있기도 하다. ■

글·백재현 아이뉴스24 기자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는 수많은 기기와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의해 하나로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IT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만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거실



주방▼



▲병원



학교▼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관(정보통신부 청사 1층)에는 미래 가정환경, 사무실, 카페 및 학교 등을 볼 수 있고, 현재의 기술에서부터 미래의 기술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디지털-TV, 지능형 서비스 로봇, 차세대이동통신 등 다양한 국내 선진기술들이 전시되어 있다.

노랑무늬붓꽃

(*Iris Odaesanensis* Y.Lee)



우리나라에서는 중부지방의 오대산에서 맨 처음 발견되었으나 지금은 오대산뿐 아니라 태백산·함백산·소백산 등의 고원지에서도 볼 수 있다.

붓꽃과의 여러해살이 풀로서, 가정에서도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등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높이가 20cm 안팎이고, 잎은 길이가 12~35cm로 곧게 선다. 4~5월에 지름 3.5cm의 흰 바탕에 안쪽에 노란 무늬가 있

는 꽃이 원줄기에 2개씩 달린다. 6월부터 8월에 열매가 익으며 벌어져 씨가 나온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이 밖에도 각시붓꽃·노랑붓꽃·난장이붓꽃·솔붓꽃·타래붓꽃 등 많은 종류의 붓꽃들이 자라는데, 5~6월에 앞다투어 피어나 가히 붓꽃의 계절을 이룬다.

글·사진 / 김태정 한국야생화연구소장

3 - ?

혹시 자녀의 반도 모르면서 반등수만을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난 다음날
아이가 두고간 도시락-
혹시 아이의 반을 찾지 못해
당황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학교 생활입니다.

몇반인지 친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조그만 관심에서 부터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그 이상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총선 이후 한국경제

-경제운영 방향과 과제



- 12 수출·내수 간 균형발전에 힘 모아야 / 신석하
- 16 기업이 경제 중심에 자리잡도록 해야 / 이언오
- 20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분배 개선 / 박원암
- 24 경제정책의 초점이 분명해야 / 전주성
- 28 경제회생을 위한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 / 허찬국
- 33 인력 개발이 성장엔진 형성의 핵심전략 돼야 / 노진귀
- 37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주력 / 강호인

총선이 끝난 후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중점 정책과제는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에게 들어본다. <편집자 주>

수출·내수 간 균형발전에 힘 모아야 - 現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sshin@kdi.re.kr)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연간으로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다소 부진한 반면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내수부문의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수출이 급증하면서 내수회복이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올해 3월까지 사상 최대 기록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수출은 최근의 급증세가 향후 다소 둔화될 가능성은 있으나 대체로 호조세는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도 점차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회복은 아직 미미

수출은 지난해에도 중국의 경기호황에 힘입어 호조세를 유지하였지만, 지난해 4/4분기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과 함께 수출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올해 1/4분기에 들어서는 일본경제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월간기준 200억달러를 넘어서는 수출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수출호황은 제조업, 특히 IT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산업생산의 증가세가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는 한편 재고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전형적인 경기회복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기회복이 IT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여타 제조업의 경우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재고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경기회복이 다소 지체되는 모습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관련 지표들도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취업자수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가 극심한 고용침체를 겪었으나 올해 들어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반전하였으며, 실업률은 높은 상황이지만 계절적인 요인을 제거하면 지난해 연

말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제주체들이 돌아오면서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크게 침체되었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은 아직도 지극히 완만한 회복세에 머무르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체감경기'는 수출부문보다 내수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수출관련 대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경제주체들 대부분은 아직도 경기회복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월중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자기대지수는 모두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다소 개선되고 있던 소비심리가 여전히 부진함을 시사하였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최근까지도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도소매판매 등 소비관련 지표들의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증가로 반전하고 있어 민간소비는 아주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소비 부진은 2001년과 2002년에 걸쳐 소비가 급증하였던 것에 대한 자연스런 조정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크다. 특히 2001년과 2002년에 신용카드회사를 통하여 외환위기 이전에 대충시장에 접근하기 힘들었던 가계부문, 특히 20대 이하 청소년층에 신용이 공급되면서 소비가 급증하였다가, 신용카드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계신용이 급감하였던 것이 소비 위축의 중요 요인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대출의 조정속도가 지난해 4/4분기에 크게 둔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금융적 요인에 의한 소비 침체는 점차 마무리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설비투자 회복조짐 보인다,

건설투자는 올 들어 빠르게 둔화돼

설비투자도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이나, 그동안의 극심한 부진에서 서서히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4/4분기에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다소 둔

화된 데 이어 올해 1~2월중에도 설비투자추계나 기계류 내수출하 등 설비투자관련 지표들의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증가로 반전되는 등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진에서 완만하게 벗어나는 모습이다. 한편 생산능력 대비 생산의 비율도 지난해 2/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의 상향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지속하며 연간으로 7% 이상 증가하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기성액 등 건설투자관련 지표들은 올해 들어 증가세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도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건설투자가 지난 3년간 호조를 보인 것은 외환위기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에 대한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2002~03년 기간 동안 건설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GDP 대비 비중도 크게 상승하였다. 이 기간중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건설투자 호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 이후 정부의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가격의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주택수요의 급증세도 진정되는 모습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급증하는 데 비하여 내수는 지극히 완만한 회복세에 머무름에 따라 대규모의 흑자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9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매월 20~30억달러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GDP의 6% 내외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이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1/4분기 동안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여 농산물 및 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말 이후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달러화로 표시된 국제 원자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점차 국내물가도 상승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까지 원/달러환율이 상승 내지 정체됨에 따라 달러화 표시 원자재가격의 상승이 수입물

정부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신속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내수와 수출 간의
과리가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를 높이기 시작하였으며, 그 여파가 국내물가에
도 부분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경기흐름을 감안할 때 최근의
경기 회복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세계경제 전망치를 상향조정하
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수출경기는 당분간
호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도 점차 회복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5%대 중반 성장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내수회복 속도 빨라질 듯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
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회복되면서 연간
으로 5%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
다. 상반기에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다소 부진한 반
면 수출이 높은 증가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반면 내수
부문의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소비 부진의 중요 요인이었던
가계신용의 조정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고 고용
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에
의한 소득 증가가 소비회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하지만 회복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간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
는 3%대 초반을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2년간 침체를 지속하여 왔던 설비투자는 기

업수익성 개선, 가동률 상승, 수출호조 및 경기회복
가능성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작용함에 따라 2004
년 연간으로 8%대 중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의 회복이 완만하겠
으나, 하반기에 경기회복이 가시화됨에 따라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설투자는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의 강화로 주택수요 급증세
가 진정되고 SOC 관련 예산이 감소함에 따라 연간
으로 1% 내외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반적인 경기회복을 반영하여 실업률은 지난해
보다 소폭 낮은 3.3% 내외의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
나, 상반기 동안에는 지난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회복에 기인하여 상품수출금액의 증
가율이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20%대 중반을 기록
하며 연간 상품수출금액이 2,500억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의 수출 증가
율이 높았던 점이 반영되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점차 낮아져 4/4분기에는 10%대 중반을 기록할 것
으로 보인다.

수입금액은 수출호조, 내수회복, 원화가치 상승
등에 기인하여 지난해보다 크게 높은 20%대 중반
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수
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회복속도가 빨라지고 원화가치 상승의 영향이 반영
되어 수입 증가율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동안 내수회복이 완만하게 진
행되는 반면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큰 폭의 흑자가 발생하여 연간으로는 지난해 123억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160억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
록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세가 다
소 둔화되고,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4분기에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
과 지난해 말 이후 발생한 원화가치 하락의 효과로
인해 비교적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
는 하반기에 들어 국제유가 및 원화가치가 안정되면

서 연간으로는 3.1%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연초의 일시적인 물가상승요인이 하반기에 상당부분 해소되더라도 경기회복에 따른 총수요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유가와 농산물가격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져 연간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2.9%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수-수출 괴리 축소에 정책역량 집중해야

향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들로는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지정학적 불안정,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세계경제는 올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미국의 대규모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 유로경제의 높은 실업률 지속 등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나 중국의 경기과열 부작용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낮은 수준의 국제금리로 인해 자산가격이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상승한 상태에 있어 경기회복과 함께 국제금리가 인상될 경우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부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미국 달러화 가치가 급락하는 경우 국제자본의 급격한 이동과 함께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

이라크 정세 불안이 지속되거나 국제테러에 대한 불안이 확산될 경우 국제교역의 증가세가 훼손되면서 우리 경제의 수출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급격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경우 국내물가가 상승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실질구매력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전망을 감안할 때 정부는 단기적으로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를 축소시키는 데에 정책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내수와 수출 간의 괴리를 반영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최근 GDP의 6%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

는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이 외환시장의 기본적인 수급여건에 의해 신축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수출과 내수 간의 괴리가 조정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내수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급증세를 유지하면서 경제 전반의 총수요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기부양정책의 필요성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물가의 경우 수입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총수요압력이 증가하고 있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관심을 높여 가며, 상황에 따라 신축적인 금리조절을 통하여 중기적인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㉔

기업이 경제 중심에 자리잡도록 해야



이언우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serileo@seri.org)

경제리더십을 조속히 복원하여 경제엔진을 다시 가동시키고, 개방·경쟁 확대 등 고통에 정면 대처해야 한다. 또한 창업 가능성과 성공확률을 높이고, 기존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격차 시정과 복지 확대 등 형평성 개선은 부담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핵과 선거 때문에 한치 앞을 점치기 힘들다가 이제 터널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내수부진이 여전하지만 수출 경기가 좋아서 2004년 5%대 성장이 무난할 전망이다. 수출과 내수간 연결고리가 작동되고 기업투자가 살아난다면 안정적 성장 궤도로의 복귀가 기대된다. 외환위기 이후 실로 7년 만의 희소식이다. 꽃과 신록이 한창인 계절에 경제도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미해결 현안과 돌발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실, 청년실업과 빈부격차가, 대외적으로는 테러 확산과 유가급등이 우려된다. 형평 위주 정책이 갈등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 치 권 이 겸 손 하 지 못 하 고 선 불 리 개 혁 을 추 진 할 경 우 경 제 심 리 위 축 이 불 가 피 하 다. 일 부 에 서 2005년 이 후 경 기 가 다 시 하 강 하 여 ‘더블 딥’에 빠 질 것 으 로 보 는 이 유 이 다.

주 가지 수 를 보 면 우 리 경 제 는 아 직 외 환 위 기 이 전 수 준 으 로 회 복 되 지 못 했 다. 1980년 대 후 반 3低 호 황 을 반 영 하 여 주 가 가 1천 포 인 트 로 급 등 했 다. 이 후 경 기 침 체 와 사 회 적 이 완 으 로 인 해 주 가 는 절 반 수 준 으 로 떨 어 졌 다.

외 환 위 기 직 전 과 직 후 1천 포 인 트 선 을 돌 과 할 뻔 했 다 가 내 려 았 다. 버 블 이 끼 어 있 었 고 편 더 멘 털 이 받 쳐 주 지 못 한 탓 이 다. 수 년 전 과 비 교 해 서 환 율 은 800원 대 에 서 1,100원 대 로, 금 리 는 10% 이 상 에 서 5% 로 유 리 해 졌 는 데 도 주 가 는 제 자 리 에 서 맴 돌 고 있 다. 경 제 상 승 의 에 너 지 가 미 약 함 을 보 여 주 는 증 거 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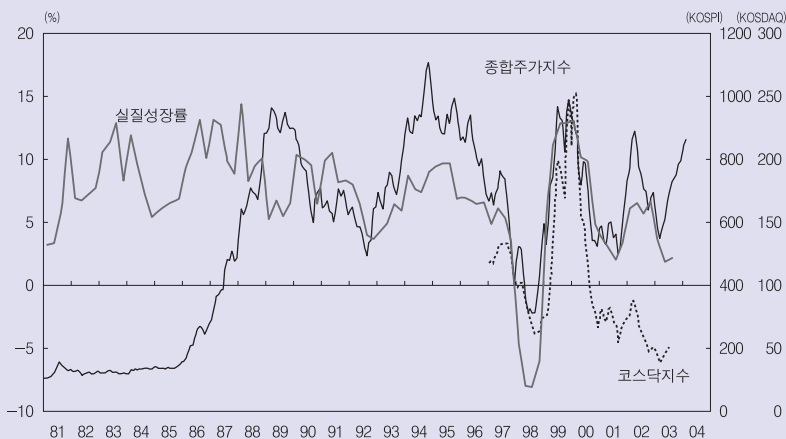
경제리더십 복원이 시급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는 2년 6개월간 430억원을 들여 공사를 마쳤다. 대통령이 돌관공사(突貫工事)를 진두 지휘했고 민원이 개재될 여지가 없었다. 서울-수원 간은 주변 땅을 미리 확보해 두어 나중에 손쉽게 확장할 수 있었다. 당시 물가수준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대단한 모험이었다. 고속도로는 이후 물류의 중심축이 되었고 중동건설 등의 구체적 성과를 냈다. 지도자의 의지가 확고했었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었다.

2004년 4월 시속 300km의 고속철도 개통으로 전국이 반일 생활권으로 통합되었다. 1단계 개통에 12년간 총 12조7천억원이 투입되었다. 건설중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개통 후에는 잔고장이 이어지고 있다. 사상 최대 국책사업이었는데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공기 연장과 공사비 증가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국토개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경제리더십을 복원하자. 고속도로와 고속철도의 차이는 리더십에 기인한다. 경제를 끌고가는 리더십이 약해서 문제이다. 한때 말만 많다고 하여 'NATO'(No Action Talk Only)가 유행했는데 지금은 계획이 무성한 'NAPO'(No Action Plan Only) 상태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차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그림〉 경제성장률과 주가지수 추이



생각해서 아는 것이 제일, 남의 말을 듣고 아는 것이 그 다음, 겪어보고 아는 것이 최하이다. 위기를 겪고서 무얼 할지 모르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우리는 몇년 전 발생한 경제위기를 벌써 잊어버렸고 교훈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 경제리더십을 조속히 복원해서 경제 엔진을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

고통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즘은 고통을 회피하려 들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벼움이 대세이고 부동산투자와 같은 손쉬운 돈벌이에 탐닉한다. 이공계 기피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 고통을 사양하겠다는 세태를 반영한 것이다. '대박집 vs 쪽박집'이라는 TV프로가 있다. 성공하고 실패한 식당을 찾아내 소개하는 것이다. 성공한 식당들은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고 주인이 오기로 밀어붙여 대박을 터뜨렸다. 쪽박 식당들은 그럭저럭 지내다가 사라져갔다. 어린아이는 아프면서 크고 영혼은 고뇌를 통해 성숙된다. 경제활동에는 필수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당장 괴롭더라도 고통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고통에 정면 대처하자. 상처가 깊었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 문제를 노출시켜서 관련자들이 고통을 직시하도록 해야 한다. 나누는 것을 우선하거나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은 해결을 연기시킬 뿐이다. 의도적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

다. FTA 체결 등을 통해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구조조정을 상시화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치유와 자기혁신 노력이 배가된다. 고통을 감수하자고 호소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다. 리더가 출선해야 구성원들이 고통을 감수하려 든다. 베트남戰을 다룬 영화에서 지휘관으로 출연한 멜 김슨은 이렇게

정부-기업, 노-사, 빈-부 모두
상대입장을 존중하면서 한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투명성 제고,
임금인상 억제와 해고 자제, 자활노력과 사회
공헌 등을 패키지로 풀어나가야 한다. 먼저
양보하고 솔선해야 문제가 풀린다.

외쳤다. “모두 살아 돌아오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제일 먼저 적진에 뛰어들 것이고 가장 마지막에 빠져 나올 것이다”라고.

“企業者 經濟之大本(기업이 경제의 근본)”

과거 중소기업 사장들은 번듯한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소망했었다. 이제는 “기업하는 부담을 왜 자식에게 물려주느냐”고 반문한다. 척박한 기업여건, 뿌리깊은 반(反)기업정서 때문이다. 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은 26세 때인 1935년에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노름을 하고 늦게 집에 돌아와 달빛 아래 잠들어 있는 아이들 얼굴을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되겠다. 보람있게 살자. 사업을 하자”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부자와 기업가는 다르다. 전자는 돈이 많은 사람, 후자는 사업에서 보람을 찾는 사람이다. 기업과 기업가의 기(氣)를 살려주자.

창업 가능성과 성공확률을 높이자. 창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손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예비창업자들에게 기법을 가르치고 기업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하자. 창업요건과 절차의 간소화, 창업자금 저리 대출, 법인세 감면, 조달시장 우대 등이 필요하다. 1인 기업, 재택근무(SOHO), 생계형·실험실 창업은 회사법·과세·공공시설 사용 등에서 예외로 다루어야겠다. 미국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과 같은 단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창업 컨테스트는 유망한 비즈니스모델과 신기술을 선별해내는 데 효과적이다. 초기 단계에 자금·기술·판로·전문가를 집중 지원할 경우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성장 단계에 맞추어 기술판매·M&A·상장 등으로 투자자금 회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기업 분사, 공공서비스 아웃소싱, 정부출연연구소 개발기술 상업화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부담을 줄여야 한다. 양도세 면제, 공공건물 무상이용, 무급휴직 인정 등도 요구된다.

대기업의 장점을 살리자. 기존 대기업이 가진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대형 국책사업과 해외 인프라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민관협력 모델은 외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세일즈외교 등의 추진력을 배가시킨다. 투명성을 높이되 오너경영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의 예외 인정, 우호적 지분 확보, 전문 능력을 중시한 이사진 구성 등이 그 방안이다.

개방적이고 느슨한 형태의 기업그룹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기업의 자발적 의사와 전략선택이 존중되어야겠다. 외국 투기자본의 매수 공격에 대한 방어책 마련도 시급하다. 정부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을 없애고, 기업은 수익률 제고, 윤리경영 등으로 신뢰를 높여야 한다.

경쟁력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형평성’을

이번 선거에서 이념과 빈부격차가 이슈화되었다. 양극화와 갈등 때문에 정책은 형평 위주, 규제 중심으로 흐르는 중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할 기업들이 국내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형국이다. 간디는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 갈등이 훨씬 고통스럽고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통합과 상호신뢰가 없으면 경제가 불안해진다. 정상적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외국자본은 등을 돌린다.

형평성이 지나치면 경쟁력과 효율성을 해친다. 이념적으로 형평성 강화가 옳을지 모르나 현실은 그

렇지 않다. 형평이 의욕 약화와 갈등 심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 임금을 인상하면 대체로 생산성이 낮아진다. 경쟁 열위로 높은 임금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임금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 경영과 경제의 오묘한 이치이다. 형평성은 성장력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강조되어야 한다. 경제가치를 창조한 다음에 나누어야 한다 (Create & Share).

형평성을 부담 가능한 선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하자. 소득격차 시정과 복지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부유층이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 증과는 단기적 충격을 주어 득보다 실이 많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하위층이 지원을 당연시하고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자활 노력을 연계시켜야겠다. 연금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징수액과 지급액간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의료보험·국민연금 등의 수혜자를 줄이면서 수혜 폭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의료보험·기업연금 등을 도입하여 정부 부담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공공복지의 비효율성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정치권과 정부는 적정선에서 복지 혜택의 효율성과 형평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시혜성 정책들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경제 활력이 유지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최소화된다. 의약분업의 예에서 보듯이 명분을 앞세우다 보면 국민부담만 늘어난다.

나부터 한 걸음 앞으로(tit for tat 게임)

경제활동은 과정이 힘들고 실패 리스크가 만만찮다. 여유를 갖고 즐기는 산보가 아니라 장시간 인내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다. 마라톤에서는 고통이 극에 달하는 어느 순간에 희열이 찾아온다. 요즘 소득

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의 의욕이 약화되고 있다. 총선 이후 정치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의 변화 욕구를 수용하되 점진적 개혁을 추진하자. 향후 몇 개월이 우리 경제의 최소 10년을 좌우할 것이다.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시기이다. 정부 주도와 고도성장의 관성으로 소득 1만달러까지 왔다. 기업 주도의 질적 고도화가 우리를 2만달러 고지로 데려갈 것이다. 기업이 의욕을 가져야 변듯한 일자리들이 생겨난다. 기업은 경제발전의 '엔진'이다.

우리 앞에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과거 잘못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고 서로가 얽혀 있다. 누군가 나서야 하고 어딘가에서 고리를 끊어야 한다. 게임 이론에 '맞대응'(tit for tat)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일단 상대를 믿고 행동하고 상대가 이쪽의 신뢰에 부응하면 계속 잘 대해 준다. 상대가 배반하면 철저히 응징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신뢰 기반의 전략을 구사한다.

정부-기업, 노-사, 빈-부 모두 상대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 발을 먼저 내딛어야 한다. 규제완화와 투명성 제고, 임금인상 억제와 해고 자제, 자활노력과 사회공헌 등을 패키지로 풀어내야 한다. 강 저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배삐를 내야 한다. 이편에 모여 서서 왜 가야 하는지 싸우지 말자. 도강세(渡江稅)를 상대에게만 전가시키지도 말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쪽에서 먼저 양보하고 솔선해야 문제가 풀린다.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분배 개선을



박원암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apark@hongik.ac.kr)

총선이 끝난 후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총선을 치르느라 소홀히 했던 경제현안과 민생을 챙기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총선이 끝났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 준 여소야
대를 바꾸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
한 가운데 끝났다.

**‘여대야소’로 정책수행 용이해졌으나,
그만큼 부담도 커져**

이번 선거는 지역대표를 뽑는 총선인데도 탄핵 문제로 대선처럼 진행되었다고 한다.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의도 지난 대선과 열추 비슷했다. 지역 차이도 여전하고 계층과 계층, 젊은이와 늙은이, 보수와 진보의 대립도 여전하다.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간신히 과반을 차지한 점도 지난 대선과 비슷하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과 총선의 결과가 비슷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가 탄핵 문제로 대선처럼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보여 준 민의를 이번에도 그대로 보여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민의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열망인 동시에 자신들의 지역별 또는 계층별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의 발현이기도 하다. 개혁과 변화의 과제에는 부정부패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의 실현 등과 같이 공감하기 쉬운 분야도 있지만, 이라크 파병, 자유무역협정, 교육개혁과 같이 진보와 보수가 대립과 진통을 겪어야만 하는 과제가 대부분이다.

이번 총선의 의의는 참여정부에 대한 다수 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로 국회에서도 여대야소를 이룸으로써 참여정부가 정책과제를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을 의회의 반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으나 이제는 정부 정책이 의회에서 견제를 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동시에 이제는 정부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안게 되었다. 잘못된 정책이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과거와 같이 야당에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명실공히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여당이 탄생되었다.

‘民意’를 만드는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린다는 보장 없어

총선이 끝난 후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정치권은 총선을 치르느라 소홀히 했던 경제현안과 민생을 챙기고 국민통합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이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경제가 어려워졌는데도 마땅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이번 선거에서도 각 당과 유권자들이 경제현안과 민생 및 경제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탄핵 문제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총선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힘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과정이므로 경제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마련이다. 특히 여소야대의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책수행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선을 통한 국면전환에 나서게 되므로 경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할 공산도 크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정부가 경제를 소홀히 하였다면 여대야소의 국면전환이 이루어진 지금부터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경제적으로는 큰 이득이 되나 정치적으로는 표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해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정책을 지금까지 미루어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정부는 미루었던 숙제를 삼시간에 해치울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으로부터 인기를 잃게 되더라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몸매 좋은 쓴 약을 처방하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는 출범하자마자 10대 국정과제를 마련

하고 과제별로 상세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로드맵만 작성하고 제대로 실행된 것은 별로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는데, 그 이유가 거대 야당의 빈번한 견제 때문이었다면 거대 야당의 장애물이 사라진 지금부터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기분으로 로드맵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중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개혁의 과제가 정치·외교정책 과제라고 한다면 나머지 8개 과제는 경제정책과제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와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융·재정 개혁과 경제시스템 개혁을 하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과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다.

한편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사회 구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분배를 개선한다. 주목할 점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로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참여정부도 경제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총선이 끝난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부진하였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등 국정과제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고통분담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소홀하였던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까 하는 점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시장경제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용 측면에서는 진보적 색채를 띠고 있다. 대선과 총선을 통해 표출된 민의도 진보적 정책을 원하고 있다. 진보적 정책의 내용은 여기서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천차만별이어서 어떤 종류의 진보주의 정책을 원하고 있는지 구체화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 보수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원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렇다면 민의를 만드는 경제정책이 경제를 살려낼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표출된 민의에 거슬리는 정책을 펼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역사적 과제이며 불확실성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 경제를

총선 이후 정책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성장전략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필수적인
정책과 제도에 의해 추구하고, 경제개혁은
압력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경제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살리려는 정책이 오히려 기업의욕을 떨어뜨리고 민
생을 걱정하는 정책이 투자여욕을 꺾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정책쟁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성장·분배’, ‘개혁’ 방향에 대한 논란 계속될 듯

참여정부의 국정과제들은 매우 포괄적으로 잘 선
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정된 과제들이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는가를 둘러싸고 이미 많은 논란이 있
었다. 참여정부의 정책쟁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 분배의 문제이다. 어떤 정책이든 성
장 또는 분배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성장 없는 분배
는 없으며 분배 없는 성장도 없다. 핵심은 성장과 분
배를 어떻게 적절히 조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
는가 하는 것인데, 양자간 배합도는 정부의 목표와
기호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 보수적인 정부는
성장을 강조하며 진보적인 정부는 분배를 강조한다.

문제는 진보적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성장잠재
력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 들어 수출이 호조
를 보이면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나 내수의
부진으로 경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가계
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기 양극화
를 감안하면 서민과 중소기업·신용불량자들을 지
원해야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자칫 기업들의 투
자의욕을 꺾고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둘째, 성장전략의 문제이다. 정부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였으
며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소득 2만달러 달성
계획도 발표하였다. 그러나 발표된 성장정책이 실효
를 거두려면 성장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은 일반적으로 초기 소득과 초기 인적자
본, 부존자원과 같은 구조변수, 정책과 제도, 외부충
격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1960년대 이후 우리나
라의 고도성장은 대부분 초기의 낮은 소득과 부존자
원의 부족으로 설명된다. 너무 가난하며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땀흘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의 경제를 일구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1만달러 시대에 들어선 이후 국민들
은 예전처럼 땀을 흘리며 하지 않으며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국민들은 땀흘려 일한 성과가 어떻
게 배분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며 종종 개혁의 이름
으로 생산성보다 높은 과실배분을 요구하기도 한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한 쟁점은 크게 보아 성
장과 분배와 관련되어 있지만, 참여정부가 성장기
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전략을 수립하는
차원에서는 혼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그럴 여
지가 많다.

셋째, 변화와 개혁의 문제이다. 새로운 시대를 갈
구하는 열원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새로운 술
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과 같이 현 부대
를 폐기 처분할 수도 있다. 문제는 비록 오래 사용한
부대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대는 매우 질기고 튼튼해
서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부대에 담은 새로운 술이 과연 맛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20여년간 세계 도처에서 진행된 개혁은 크
게 보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이었
다. 비록 그 과정에서 희생을 보게 되는 계층이 생겨
나고 그러한 계층은 글로벌화 개혁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글로벌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
환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의 변

화 발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분배 개선을 도모해야

참여정부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쟁점은 실로 다양하며 중차대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예전과 달리 제기된 쟁점들이 모두 정책노선의 기본방향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97년 갑작스럽게 외환·금융 위기를 맞고 IMF의 간여로 시장개혁을 단행했을 때에는 워낙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탓에 정책방향을 놓고 논란을 벌일 시간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과 총선으로 표출된 민의에 의한 새로운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으며, 그 논란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간의 활발한 의견교환 또는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는 시계추처럼 우측과 좌측을 왔다갔다하며 발전한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우파와 좌파 정권이 10여년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에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비록 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중진국에 불과하지만 역사의 시계추를 좌측으로 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부총리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국무조정실장은 “경제정책의 기조가 ‘좌회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번 총선 후에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총선 이후 경제정책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정부가 여소야대하에서 정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여대야소로 국면이 전환되어도 변화가 없다면 무엇을 위한 총선이었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향후 경제정책은 적어도 성장 중시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 진보적 정책을 수행하거나 기조를 좌회전하지 않는 선에서 좌측을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하고 기조를 상당히 좌측으로 돌릴 수도 있다. 아니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을 받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

다. 다만 과도한 제도수정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성장을 해치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성장과 분배와 관련하여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우리나라의 분배 악화는 미국처럼 부유층의 소득 증가보다도 성장 둔화에 따른 실업 증가와 고용의 질 저하에 더 크게 연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분배 개선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과 제도에 의한 성장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실증적으로 입증된 성장정책은 개방화 정책의 수립과 ‘룰’(rule)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개방화 정책은 특정계층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시장효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룰에 의한 지배는 정책운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시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법과 원칙은 올바른 정치·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필수적이다.

셋째, 경제개혁은 압력집단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경제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경제개혁은 목소리가 큰 집단에 의해 주도되면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결국 실패하게 된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관련된 목표와 원칙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합리적 리더십으로 개혁이 여론의 지지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경제정책의 초점이 분명해야



전주성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jjun@ewha.ac.kr)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목표 간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수단 선택에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노동시장의 성숙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다.

총선 결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으로 등장함에 따라 경제에 뭔가 돌과구가 열리지 않겠느냐는 희망의 목소리가 들린다.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정부와 여당이 좀더 책임 있는 자세로 경제 회생에 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이었건 아니었건 간에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뜻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다. 책임감이 커진 만큼 정책 수립이나 집행을 보다 신중하게 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참여정부 1년간의 경제 성과가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정책의 수준이 높아질 여지가 큼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당이 다수당이 되었다고 해서 경제정책

의 내용이 좋아지고 그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듯이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기업 설비 투자의 활성화다. 투자 부진이 경기순환적인 차원을 넘어 지속적 침체의 형상을 보인다면 이는 성장 잠재력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투자는 미래 지향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구조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 내부의 정책결정 메커니즘 정비가 일차과제

지난 1년 동안 이런 기본 과제들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적지 않았지만 충분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기업의 투자환경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결과가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북아 허브나 지역 균형발전 등과 같은 장기 국정과제에 밀려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치유하는 사안들은 별로 정책의 전면에서 부각되지 못했다. 한마디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기적 거시안정의 문제와 중장기적 구조개선의 문제가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무모함이 있었고, 당장 해야 할 사안과 차분히 순서를 밟아야 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앞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일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내부의 정책결정 메커니즘을 정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목표간의 우선순위 결정과 정책수단의 선택에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수립된 정책 로드맵들 중에는 도착지가 어디인지는 친절히 설명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부족하거나 목표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칫 다수당의 안이함에 빠져 기존의 정책결정 방식을 정당화하려 든다면 소수당 시절의 치열함마저 잃게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정치개혁 과제에 밀려 경제에 대한 여권 지도층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정권 초기, 소수정권으로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심의 지지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준비에 비해 의욕이 넘친 실험적 정책들로 인해 참여정부 1년의 민생 관련 점수는 낮았고 이에 비해해 정치나 경제 분야의 개혁을 추진할 힘 역시 소진되어 갔다. 뒤늦게 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을 배가했지만 한번 잘못 채워진 단추를 풀고 새로 잠그기는 쉽지 않은 법이다. 자연 초기 개혁을 주도하던 세력은 하나 둘 사라지고 기존의 정책 관행에 익숙한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어 갔다.

그런데 이번에 여당이 다수의석을 얻게 되었으니 경제는 아예 관료체제 중심으로 운영하고 여권의 힘은 정치개혁에 몰입해야 한다는 식의 유혹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미 주요 경제장관과 청와대 참모 자리에 정통관료가 자리잡고 있는데다 이번 총선을 통

해 전직 장관들이 국회에 진출한 터라 향후 여권의 경제운영이 관료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현실화될 확률이 낮지 않다. 이러한 선택은 적어도 단기적인 거시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의 집행이나 단기현안을 다루는 데 익숙한 관료가 경제 안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기존의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데도 외부인들에 비해 능숙할 것이다.

관료·외부전문가가 조화를 이루며 개혁 추진해야

문제는 관료체제의 보수성과 순환보직의 관행 때문에 기존의 틀을 깨거나 시간이 걸리는 개혁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금융시장 관련 정책의 경우 개입적 수단에 익숙한 관료가 시장 규율의 정착에 얼마나 적극적일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실제로 2003년 봄 신용카드사 문제가 표면화되었을 때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과거의 관치금융적 수단과 다를 바 없었다.

또한 개혁조치 중에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고 그 열매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 많은데 현직에서의 임기가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관료가 이런 일에 선뜻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개혁 중에는 정부 역할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 적지 않다는 점도 관료체제 중심 개혁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비전과 동력은 전문가·정치권·여론 등 정부 외부의 힘에 의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설사 특정 관료 개인은 매우 개혁적인 인물일지라도 관료체제의 구성원로서는 보수 성향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직업관료에게 경제운영의 틀을 넘어서 개혁의 주도권까지 맡기는 것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정권 초기와 같이 새로운 개혁 세력이 등장해 경제정책의 모든 주도권을 잡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이 경우 관료체제가 갖는 보수성은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 1년 동안 경

제대로 된 비전에 바탕을
둔 정책만이 기업투자를 살릴
수 있다. 투자가 살아나야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안정이 뒤따르고 나아가 소비
역량 역시 회복될 수 있다. 민생·경제를
생각한다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인식해야 한다.

힘했던 어려움이 반복될 소지가 없지 않다. 개혁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제도에 관행에 대한 이해, 개혁 조치의 정치적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계산이 앞서야 한다. 성장이나 분배나, 개혁이나 안정이나 하는 식의 이분법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한 나라의 경제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는 경제주체의 다양한 의사결정의 결과로서 움직이고, 경제정책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면적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정책목표 간의 우선순위를 장기와 단기에 걸쳐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정부의 정책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려면 경제 문제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용적 식견이 필요하다. 결국 구조개혁이건 거시안정이건 이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성향 못지 않게 기본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단기 안정이 없이 개혁 조치를 하기 힘든 상황도 있고, 개혁을 해야만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 보장될 상황도 있다.

이런 비전을 공유한다면 관료와 외부전문가가 조화를 이루며 개혁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세력에게 책임을 돌리는 식의 정책 파벌이 존속하는 한 의미 있는 개혁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구조개혁 통한 불확실성 제거를

기왕에 개혁 과제가 힘을 받는다면 그 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동북아 허브나 지역 균형발전과 같은 장기과제는 문자 그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

고, 또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로 가면 상충되는 세부 목표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시간을 두고 우선순위와 자원동원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적 힘이 생겼다고 설익은 정책을 집행하려 든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 그러나 설비투자의 회복과 같은 현안은 단기적 경기회복이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 등 여러 목표에 걸쳐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기왕에 정부와 여당이 정책을 선도할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런 분야에서부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투자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성 예측이 필수적이다. 정부로서는 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 분야인 노동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기업지배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우리 경제는 전통 제조업보다는 반도체나 휴대폰 등 정보기술에 바탕을 둔 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수출 수요도 여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부문 일수록 수요와 생산기술의 변혁에 따른 노동인력의 변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잦은 노사불안과 경직된 노동시장을 생산부문 의사결정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연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이는 다시 노조가입 근로자들의 자기보호 성향을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낳는다.

노동시장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미성숙이 투자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명시적·암묵적 보증이나 계열사 간의 상호지급보증을 위험분산의 담보로 행해지는 은행차입이 가능하지 않다면 안정적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직접금융시장의 발달이 필요하다. 그러나 투신사나 카드사 등 금융권의 구조적 불안 요인과 커져만 가는 신용불량자 문제가 금융시장 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망할 기업을 정부나 계열사가 나서 구제해 주는 그릇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시장규율에

의해 기업의 신용도가 선별되지 않는 한 금융시장의 성숙은 기대하기 힘들다. 단기적인 시장위험을 막으려는 조치가 장기적으로 시장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기업 경영을 신뢰하기 힘들고, 이는 곧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식자본을 조달할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융시장·노동시장의 성숙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근본적 처방을 소홀히 한 채 단기적인 수요 부양책에 의존하는 것은 정책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것이다. 어떤 규제가 좋은지 나쁜지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규제완화가 투자 활성화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원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비전에 바탕을 둔 정책만이 기업투자를 살릴 수 있다. 투자가 살아야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안정이 뒤따르고 나아가 소비 역량 역시 회복될 수 있다. 민생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인식해야 한다. 정치 지도의 변화가 당장 경제 성과를 좋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계기로 경제를 보는 눈부터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다. ■

용 어 해 설

매칭펀드(matching fund)

투자신탁회사가 국내 및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국내증권과 해외증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신사의 매칭펀드를 통한 간접적 투자방법에 의해 외국인에게는 국내증권 투자를, 국내투자자에게는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증권시장의 육성과 자본시장 국제화의 단계적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1990년 3월부터 국내 투신사에 매칭펀드의 설정 및 운용을 허용했다. 이러한 펀드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되 일정기간 동안 환매를 제한할 수 있는 단위형으로, 국내증권투자뿐만 아니라 해외증권투자를

병행함으로써 국내통화 증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재정용어로는 중앙정부가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 자구노력에 연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지방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학에서는 공동자금 출처라는 의미로 쓰인다.

경제회생을 위한 과감한 발상전환이 필요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chan_huh@keri.org)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연 어떤 일까지 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2년 전 대선을 둘러싼 정국불안으로 고조되었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지난해 초 새 정부의 출범으로 일단락되는가 기대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선정적인 정치로 이런 기대가 무산되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이런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선진국들에서 선거가 우리에게 비해 조용히 치러지는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얼마 전 대만에서 있었던 대선을 전후 해 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지는 것을 보면 아마도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낮은 탓에 정치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결국 안정을 희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이제는 모두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여 대다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다. 그동안 추진되어 온 주요 경제정책의 자가당착적인 측면을 직시하고 경제도약을 위한 결단을 생각할 때다.

기업경쟁력 저하시키는 불확실성 증대

정치란 것이 판을 뒤엎고 울고불고 소란스러워야 뭐가 되는 것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경제는 기본적으로 그런 식의 변화무쌍을 싫어한다. 물론 한번씩 주상복합아파트 청약 때 일확천금을 노려 눈 벌건 사람들이 아비귀환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일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제행위는 맛맛하고 드라마가 없는 상황에서 제일 잘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인위적 충격을 싫어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다. 미래가 더 불확실해지면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려는 경쟁력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앞으로 주변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더 노력을 경주하게 된다. 해당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눈치 잘 보는 기업이 많아지는 것이 국가경제의 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이 정치권 상황에 민감한 것은 정치가 기업의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이 정치판도에 지나치게 민감한 것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개선, 관급사업의 투명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치 지도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선이며 더 나아가 이들이 기업의 안위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현실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계화 추세와 기업의 無籍化 추세 심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는 많다. 가장 큰 과제로 고용확충을 통한 내수기반 다지기과 잠재성장력 제고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세계화 추세에 더 노출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는 기업의 이동성 추세를 의미한다. 점점 기업활동에 국적이 필요 없다. 즉, 제품이 어디에서 개발되고, 어디에서 생산되고 그리고 어디에서 판매되는가는 순전히 경제적인 결정이며 이런 각각의 활동이 한 국가에 제한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을 ‘無籍’(foot loose)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기업들의 생산시설·본부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들 기업이 ‘無籍’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표〉 임금근로자 비중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호주
1995	28.6	41.9	44.6	39.6	38.5
2000	28.4	42.2	47.9	39.6	40.3
2003	30.2	41.9	45.0	38.5	42.0

주: 임금근로자수/전체인구×100
자료: 통계청

선진경제의 다국적기업들은 이런 사실을 오래 전부터 터득하고 세계 곳곳으로 생산기지나 본부를 옮겨 왔다. 청바지 원조기업인 미국의 리바이스(Levi's)사가 얼마 전부터 미국 내에서 청바지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최근 호주의 대표적인 기업가인 머독(Robert Murdoch)이 자신의 언론지주회사의 본부를 호주에서 미국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경우도 몇몇 대기업들은 이미 다국적기업이 되었다. 국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면 우량기업들의 다국적기업화는 가속될 것이다. 물론 제품의 마케팅을 위해서 ‘오 필승 코리아’에 호소하지만 이런 마케팅은 한국기업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도 활용한다.

국내기업의 無籍 현상이 깊어져 해외로의 이전이 많아지더라도 비슷한 입장의 외국기업 생산 또는 본부기능의 국내유입이 있으면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문제는 유입은 없는데 해외이전이 많은 순수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다. 국내 임금·노사관계·규제 등의 면에서 기업활동 여건이 악화되면 우리 기업이든 국내진출 외국기업이든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은 산업공동화로 이어지며 바로 우리의 고용 기반을 줄인다. 이미 우리 경제의 고용사정은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취약한 우리의 고용구조 우려할 수준

우리 고용상황의 특징 중 하나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와 가사노동자가 많기 때문이다(〈표〉 참조). 그동안 15년 가까이 경기침체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의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의 피용자비율은 10%p나 작다. 여기에 비교대상인 나라들의 실업률이 우리의 3%대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실업률은 단순히 단기간내 노동시장의 일부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경제 전체로 보아 피용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으면 우선 임금근로자의 사적·공적 부담비중이 크다.

‘새로운’ 정치지도층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신선하고
건설적인 발상의 전환이며 고용기반 확충
이라는 목표를 향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하는 지혜로운 정책이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당 임금근로자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구당 소득발생자가 한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한 사람에
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장의 실직은 가구소득의 급
락을 초래한다. 가구의 유일한 소득원인 근로자 입
장에서는 가급적 빠른 임금상승과 일자리 보장에 대
한 욕구가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처지의 근로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 전체에서 임금과 생산성
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어떤 이유로든지 고용조정에
대한 저항이 높아질 것이다. 즉, 노동시장이 더 경직
된다는 것이다.

취약한 고용기반 규모와 더불어 고용의 질적 저하
도 우려된다. 임금근로자 중 비상용근로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어 고용의 내용이 악화되고 있는 추
세다. 우리가 되는 또 다른 추세는 제조업·비제조업
을 포괄하여 대규모 사업장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장별 고용비중을 보면 종업원수
5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7.2%)에 비해 2002년(8.7%)에는 반으로 준 반
면 19인 이하 사업장의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48.7%에서 55.9%로 늘었다.

규모가 영세한 서비스업종의 증가가 주요한 이유
인데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근무조건에 있어 소규모
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보다 열악하다. 우리 산업
구조의 변화라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일지 모르나 산
업구조가 경제적인 이유와 무관하게 변하지는 않는

다. 문을 닫는 기업에는 경쟁력을 잃게 하는 무엇인
가가 존재한다. 가장 쉬운 요인은 임금상승이다. 기
업의 비용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는 경
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대규모 사업
장의 감소에는 종사자가 많을수록 노사문제가 심각
해지는 것도 일조한다.

기업 활성화 통한 고용기반 확충을

공공분야의 고용증대는 임시방편이며 오히려 장
기적인 고용사정 개선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공기
업의 민영화 또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세계적인
대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공기업이 경제 전체
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
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어 왔다. 기존
의 인력만으로도 공공부문의 부가가치가 낮는데 만
약 이들을 고용증대의 주된 수단으로 삼아 인력을
늘린다면 종사자당 생산성 또는 부가가치는 더 낮아
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의 세금에 의존
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결
과가 된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당장 가시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분
야의 고용증대를 통한 고용사정 개선 시도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실질적인 고용기반을 확대하
는 것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처우개
선은 고용기반 확대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천천
히 풀어갈 사안이다. 얼마 전에 나온 연구결과에 따
르면 단기간에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리려면 약 20
조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만약 이런 조치가 강제
된다면 문을 닫는 사업장이 무더기로 나올 것이다.
이런 논의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얼
마 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생각하던
기업들이 향후 부담이 커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고용
계획을 포기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 기업들이 비정규직 대신 정규직 고용
을 늘리겠는가? 임금 수준이 다른 여러 일자리가 공
존해야 한다. 이런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구직자나



고용주 모두 능력이나 근로여건에 맞게 더 많은 인력이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과 최저 근로여건을 정하여 가장 기본적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모든 일자리를 임금이 높고 고급스러운 일자리로 만들려 한다면 결국 전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미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꼭 피해야 할 일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들의 문제가 많다는 일부의 시각이 공자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기업경영·고용형태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치적인 시민단체·노조가 별 훈수를 다하고 이런 훈수들을 거스를 수 없는 민의 내지는 전문가 고견으로 받아들이는 정부는 사사건건 개입하려 하고 있다. 특히 기업정책과 관련하여 경영투명성·재무구조·지배구조 등에 대해서 권고 이상의 여러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주로 영국·미국 등지의 행태를 중요한 기준(benchmark)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발상의 근저에는 경영관행이나 투명성이 미국수준이 되면 우리 기업들도 미국기업들처럼 막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상당히 단순한 발상이라 생각된다. 만약 기업들이 정부나 시민단체가 원하는 대로 다하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 수준의 수익을 내도록 보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물론 부정적이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의 노동시장이 대표적으로 유연하다고 여겨지는 미국에 비해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히 반영미식 노동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외국, 특히 미국 기업인들이 우리의 노사문제에 대해 개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이다. 앞서 논의된 협소한 임금기반이 노동시장 경직화에 중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어떻게 경영

상의 이유로 인한 인력 조정은 불가능하다. 어떤 기업에게나 인건비는 가장 큰 비용이다. 그런데 인력 조정을 통해 이렇게 제일 큰 비용을 조정하는 경영상 결정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불황기를 넘길 수 있을까? 정부는 기업경영이 유리알처럼 되면 마치 구세주가 재림할 것처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의 투명도는 그기업의 고유분야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고 이윤을 내고 존속할 수 있는가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작다.

우리 기업부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균형감이 있는 정부의 노력은 외면한 채 지금같이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노동시장 유연화 노력이 철저히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기업경영만 유리알처럼 만들겠다는 접근은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모형을 시도하겠다는 무모한 모험이다. 전혀 하체운동은 하지 않고 죽어라고 상체근육운동만 한다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기괴한 괴물이 창조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연 어떤 일까지 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크다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경제회복 위해 획기적인 발상전환 필요

만약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아마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몇 개 남짓한 대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로 딱찬 경제가 될지도 모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못살게 되면 아마 평등에 대한 열화가 좀 가라앉을까?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되면 소득뿐만 아니라 정부세수도 줄텐데 늘어나는 공무원 급여나 연금은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다.

만약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없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의 모습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기업은 그나마 無籍이라 어디에선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기업의 종업원이나 주주는 꼭 한국사람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그 기업덕에 생계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경제규모에 비해 낮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전체 임금근로자 비중 등의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나 규모가 작는데 지금대로면 앞으로 더 줄어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의 모습은 공부 잘하게 한다고 먼 친척, 가까운 친지 모두 달려들어 달달 북아대고 있는데 어찌 된 것이 성적이 오르기보다는 기가 죽고 시들시들해져 있는 수험생 형국이라 하겠다.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수험생은 눈앞의 책이 보이는 게 아니라 힘껏 뛰어놀 수 있는 중국 놀이터가 아른거리고 다시 태어나면 죽어도 학생이 되지 않으리라 속으로 다짐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지도층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이는 참으로 신선하고 건설적인 발상의 전환이며 아울러 고용기반 확충이라는 목표를 향한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지혜로운 정책이 될 것이다. 이런 개혁은 경제사정이 좀 나아 때 가장 용이하다. 앞으로 수출호조세가 지속되며 그나마 거시경제상황은 미미하나마 호조세를 보일 전망이다. 벌써 우리 기업들은 풀죽은 학생처지이다. 새로운 정치권이 정치에서만 구태를 털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인력 개발이 성장엔진 형성의 핵심전략 돼야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nohojk@hanmail.net)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심에 둔 새로운 성장엔진 만들기에 집중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인력 개발이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제 현실화 등을 통해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내수기반의 확충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4. 15 총선 이후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정치’의 ‘삿바싸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탓만 하는 여론 물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류 중에는 개혁정치를 좌절시키기 위한 ‘음모’를 숨기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

참여정부는 ‘개방에의 성공적 대응’과 ‘권위주의로부터 자율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대한 화두를 틀어잡고 개혁을 하려 했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폐쇄경제적 사고와 특혜·부패사회로부터의 탈피와 능력 본위의 확립, 불필요한 정부규제 완화와 자율·자립체제 확립, 지속가능한 성장시스템의 구축 등 근본적 해결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뿌리깊은 기득권과 싸워야 하고,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기득권층의 저항과 사보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는 개방과 자율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범했고 정치적으로는 그런 기초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정치적 기반 및 현실적 추진력의 취약성, 거야와 재벌·언론 등 보수복합체로부터의 저항과 사보타주로 게도 구력도 다 놓치는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이 사실이다.

개혁적이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여정부는 정치적 불만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을 극복하지 못했고 정책역량이나 추진능력의 미약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는 여소야대의 정치지형과는 무관하고 또 개혁을 하다 보니까 발생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 정책의 비현실성이나 아마 추어적 접근 등이 커다란 문제로 작용했다. 참여정부 2년차에 들어서서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해소가 개혁성의 퇴조, 전통적인 보수회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4.15 총선은 여당의 정치적 안정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그러한 정치적 기반을 민생 강화로 연결시키는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책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 급하다고 단기적 과제·비전·목적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어느 순간도 '개혁'이라는 화두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이 또 하나의 '권위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의 부작용과 이전비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개혁이라는 것이 꺾테기를 바꿔내는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의 적절한 구사와 국민공감대라는 사회적 압력을 통해 자율적 선택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력 개발이 성장엔진 형성의 핵심전략 되어야

세계화시대의 개방경제에 있어 경제주권성을 견지하고 '사회통합성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의 엔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개방의 불가피성, 경제불안과 부정부성 강화, 저성장과 고실업시대 도래 등 새로운 도전이 우리 경제의 현실로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성장거점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 왔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10대 전략상품을 찾아내는 등의 노력을 경주했고 동북

아경제의 중심지로 만들어간다는 전략적 구상도 낸 바 있다.

이러한 전략 추진을 위해 외국자본 유인의 법·제도도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들은 구체화의 힘을 타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위의 주관주의적 전략이 그대로 먹힐 일은 없다.

필자 생각으로는 성장의 엔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를 위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인가를 공감대 있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지금까지 대체로 신자유주의적 접근, 즉 영미식 접근책을 구사해 왔다. 외국자본 유입을 통한 외국기술의 활용, 주주자본주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주요 키워드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 어느 것도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기존의 제도, 의식·관행과의 충돌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접근책의 시시비비를 떠나 공감대 미형성으로 인한 비용이 엄청나게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처럼 외국제도가 무비판적으로, 그것도 유행병 도치듯 도입된 결과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만들어나가거나 아니면 남의 것을 우리 것으로 토착화해내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잘 되지 않고 있다.

필자는 성장엔진 만들기는 박정희식 패러다임을 올바로 극복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자들도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박정희식 패러다임을 영미식 패러다임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의·주장에는 긍정할 만한 요소가 부분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주의를 관철하면 성장의 엔진이 자동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론상 시장주의 강화는 효율성 경쟁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성장의 엔진 형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독점의 존재 때문에 시장주의는 독점의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기 마련이며 사회적 불평등 초래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측



면들 동시에 갖고 있다. 성장의 엔진 형성으로 온전히 연계된다는 보장은 없다. 때문에 시장적 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런 전제가 있어야 시장주의를 펼쳐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할 인력 개발이 성장엔진 형성의 핵심적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인력은 기술 혁신을 가져오고 향상적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노동력이 국경을 넘나들고 인터넷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는 인력 개발은 노동력 및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한다.

그리고 노동력의 고가치화는 능력지향적 경쟁을 촉진하게 되어 노사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 미숙련을 기반으로 하는 대량생산체제 하에서는 분배 중심의 대립적 노동운동이 전개되지만 숙련 지향적 인재육성체제 하에서는 상생적·참여적 노사관계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인력 개발을 핵심요소로 하는 성장엔진 형성 전략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전략 하에서는 비정규직 위주의 저임금 전략이 추구하고 있다. 품질은 나중문제이고 노무비

삭감이 우선적 관심사가 된다. 주주자본주의 발전이 겹쳐 미래가치보다는 현재가치가 경영자의 주관심사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미래가치를 높게 될 인력 개발은 거의 관심 밖이다. 경력자를 외부에서 채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나름대로 미시적 차원의 경제 합리성은 있겠지만 거시적 차원의 합리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기업이 인력 개발을 하지 않으면 국가가 해야 하나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있다. 훈련은 현장의 요구와 괴리되어 있고 그 결과 자격은 능력의 척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측도 훈련을 받을 유인이 별로 없다. 그래서 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직업훈련 수요자측 메커니즘이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남용을 통한 경

쟁력 제고 체제하에서는 인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지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런 점에서 가까운 장래에 인력문제라는 애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소득격차 완화를 통한 내수 확충과 중소기업 육성 강화가 필요

우리 경제의 두 번째 취약성은 내수기반이 날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근래 들어 우리 경제가 수출호조에 힘입어 근근이 버티고는 있지만 내수는 계속해서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내수 문제는 경제불안애 따른 소비심리 위축, 신용불량자 축출 등에 기인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득격차 확대로부터 파생되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기업규모간 임금격차 확대, 중산층의 몰락 등이 근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력 개발과 기술투자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보다도 저임금화를 경쟁전략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핵심요인이다.

소득의 양극화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명품 취향의 외제 소비를 즐기고 저소득자들은 중국 등으로부터의 값싼 임금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나 임금격차 해소, 최저임금제 현실화 등을 통한 내수 확충 도모가 필요하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인력 개발을 통한 시장친화적 방책 강구가 더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정규직 직종은 단순 미숙련의 저임금 직종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경제규제의 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되 그 결과물인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재분배가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동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고 노동 불능자들에 대한 재활 실시와 복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술·인력 개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육성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청단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노력해 이룩한 성과물들이 중소기업에

귀속되어야 중소기업은 생산성 향상이나 기술 혁신을 위한 의욕을 내게 된다.

현재의 원하청 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의 노력 결과가 대부분 원청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투자를 위한 축적을 할 수 없게 되며 사기도 저하되게 된다. 대부분의 저임금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 임금격차 해소, 내수 확충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자리가 중소기업 부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업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우리 경제 앞에는 세계경제가 더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내수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등의 밝은 측면과 원자재가격 상승, 원화 강세 등의 어두운 측면이 동시에 가로놓여 있다. 우리 경제가 1997년 이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깨끗이 탈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통한 경제회복의 요구도 강한 것이 사실이다. 경기부양책이 부동산투기를 촉진하는 결과를 경험한 바도 있지만 마땅한 정책수단이 발견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기처방을 위해 근본적 처방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심에 둔 새로운 성장엔진 만들기에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 ■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주력



강호인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

정부는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민심인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중산층들이 생활에서 따뜻한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 동안 총선과정에서 많은 정치적인 변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지표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등 우리 경제는 정치상황 변동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 그동안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짐에 따라 국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욕도 차츰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 이후부터는 투자·소비·고용이 늘어나면서 경기 회복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과정의 민심에서 나타났듯이 현 단계에서 국민들의 가장 큰 바람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여 일반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

다. 또한 고용사정도 지난해 말 이후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완만하게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 충분한 상황은 아니며, 국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도 내수 중소기업들의 채산성과 소비자의 실질구매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총선 이후에도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두고 서민중산층들이 생활에서 따뜻한 온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기 회복·민생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

올해 정부 경제운영의 목표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므로 현재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으리라 본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속도를 빨리하여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준비하여 국회개원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각 정당과는 국회개원 전이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올해 들어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2.19),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3.10), '특별소비세율 인하'(3.23), '고용창출형 창업·분사 활성화대책'(3.24), '문화예술 지원정책'(4.16) 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서비스산업 관련 태스크 포스와 토지구제개혁 관련 태스크 포스 논의를 마무리하여 분야별 대책을 완료해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내수경기 회복지연과 국제 유가·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이다.

신용카드·신용불량자 문제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앞으로도 신용불량자 대책의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 불안의 가능성에 대처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기조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다. 물가는 국제유가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책을 취할 것이며, 물가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생활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주 40시간 근로제의 성공적인 정착, 비정규직 보호,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원만히 처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노사관계 개선을 이룩하고 산업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한편, 쌀 재협상, DDA, FTA, 한·미 투자협정 등 본격적인 대외개방 협상을 앞두고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이해집단을 설득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대외개방에 대한 국내 수용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정부는 당면 경제현안들을 해결하여 우리 경제를 정상적 성장궤도로 진입시켜 성장과 고용·물가 안정을 이룩하는 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신

성장산업의 육성, 동북아 경제중심 등 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한 경제과제들을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 계층간 이해상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발표해 온 각종 정부대책이 실천에 옮겨져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시킬 것이다. 시행령이나 규칙은 즉시 고치겠으며,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4~5월중 법령안 작성과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6월 국회 개원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개정안도 동시에 마련하여 최대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한 정책 수행으로 정책효과 조기 가시화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별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재정정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아직 내수경기가 부진하고 고용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거시정책기조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상반기중 연간 재정지출규모의 54%를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전년동기 대비 8.1%의 재정지출 증가를 달성할 것이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예산도 조기 집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5~10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분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완화·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고용창출형 창업에 대해, 한시직(2004.7~06.6)으로 법인세·소득세를 소득발생 후 5년간 50% 감면하고, 신산업분야에 대해 출자총액 제한제도 예외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장설립과정을 시·군·구에서 일괄하여 처리해주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윈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정책지원 체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종에 6개 업종을 추가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서비스업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각각 1조원)을 통해 유망 지식기반 서비스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산업에 적합한 용지공급 확대 및 지원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것이다(골프단지·영상문화단지·애니메이션 단지·출판단지 등). 또한 업종별로 물류·유통·비즈니스·환경·문화관광 등 21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대책을 상반기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토지규제를 합리화하여 가용토지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토지관련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개혁해 나갈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민관 합동의 '토지규제개혁 태스크 포스'를 구성한 바 있으며, 6월말까지 '토지규제개혁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SOC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자사업 시장 구조를 건설사에서 채무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다. SOC 투자펀드의 자산운용 규제와 상장요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 여유운용 자금의 SOC 투자비율을 확대할 것이다.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어 민간의 고용창출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간 시일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취업의사와 능력을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취업지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37만명에게 일자리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상반기중 예산의 70% 이상을 조기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관계 개선 및 금융시장 안정과 구조조정

올해 7월부터 실시하는 주5일 근무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적인 입단협 교섭을 타결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관한 법안을 마련하고 정규직 보호수준의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現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으나, 정책 추진속도를 빨리하여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 제·개정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완벽히 준비하여 국회 개원 즉시 제출토록 하고, 각 정당과는 국회 개원 전이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상반기중으로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17대 국회)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방안과 공권력 투입기준 매뉴얼을 상반기중 마련할 것이다. 또한 춘투시 노사분규 우려 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근로손실일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지난 3월에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용불량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신용정보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계대출의 원활한 만기연장과 적정수준 증가를 유도하고,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3년 위주의 주택대출이 장기대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내수부진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우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경쟁적으로 회수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39조원에서 42조원으로 확대하고,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원자재난을 겪고 있는 업체 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지방기업·무역금융에 대한 총액한도대출을 각각 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벤처 프라이머리 CBO(P-CBO)의 보증지원

연장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편 금융구조조정은 정해진 일정대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카드는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방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지주의 ADR(해외주식예약증서) 발행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가급적 조기에 마무리해 나갈 것이다. 한투·대투증권은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사 등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는 등 조속한 매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연기금·금융기관·일반법인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자본(사모펀드)의 출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증시내 기관투자자의 비중을 제고하는 한편 연기금의 적정수익률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등 증권·선물시장 체제 개편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부동산시장 안정과 대외개방 수용여건 조성

물가는 올해중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유의 경우 유가상승 정도와 수급상황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하여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며, 국제원자재는 위기단계별 종합대응체계 수립, 철근 부족물량 긴급수입, 할당관세 추가적용 검토 등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상반기중에는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할 것이다. 부동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10.29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동산가격 안정도도 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에 앞서 국민적 합의와 이해집단 설득, 취약산업 구조조정 등 국내 수용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쌀시장 개방문제는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 쌀 수출국과의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나, 이에 대한 국

민들의 공감대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쌀협상의 정확한 의미 등을 홍보하는 한편, 국내 농업 구조조정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DDA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화하면서 이미 추진중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본·싱가포르 등과의 FTA 추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기술격차가 큰 부품·소재산업 등 민감분야의 관세인하 유예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투자 확대와 첨단기술 이전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에 최선 다할 터

우리 경제는 시민사회의 성숙과 경제체질의 개선으로 정치적인 격변기였던 총선의 와중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총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바람이나 각 당의 공약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만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형성된 정책의 공감대를 어떻게 조속히 실천하여 국민들이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올해는 주5일제 협상 등 노사관계의 쟁점이 잠복해 있으며 이라크상황 등 대외여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추격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만들어진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대내외의 도전 속에서 우리의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기회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총선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청년실업, 해법 없나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두 배 이상
높고, 전체실업자 중 청년층의 비중이 50%에
이르는 등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구조적 차원의 고용·산업·교육 연계정책 필요

지 난 2월 청년실업률은 9.1%에 달하여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공식적인 실업자 46만명 외에도 취업을 위해 학원·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개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한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가 29만7천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별한 활동 없이 놓고 있다고 응답한 비경제활동인구 또한 29만 6천명에 달한다. 이는 청년 인구 10명 가운데 1명이 취업 애로를 겪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유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 문제는 지표상의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은 노동수요 변화와 인력수급 불일치에 따른 구조적 문제

근로생애 초기에 경험하는 실업은 청년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의 결정적인 실패를 초래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이 긴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고령화의 급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lbh@kli.re.kr)

속한 진전에 대비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 문제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병존한다는 사실은 청년실업이 단순히 경기 회복의 지연에 따른 일차리의 부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경제위기 이후 경력 중시형 노동

력 수요로의 변화와 교육·노동시장간 괴리에 의한 인력수급의 불일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우선,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의 감소가 전반적으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의 고임금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다. 기업이 상시적인 고용조정을 추진하면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도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처럼 노동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인 지체가 발생하고 있다. 고등교육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5~2003년간 대졸자수가 18만명이나 증가하였으나,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학교교육을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인력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요와 괴리된 고학력화 추세는 구인과 구직의 눈높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의 양극화 또한 청년실업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불능력의 격차가 임금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업별 격차의 확대는 청년층의 대기업 선호 현상을 부추겨, 대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대기 실업을 야기하고 있다.

경기 회복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만,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청년실업을 수준에 따라 일자리·연수·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으로 구조적이고 예방적인 관점에서 고용정책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교육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력개발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필요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에 치중하였던 청년실업대책은 경력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경력직 채용 추세에 맞추어 다양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제뿐만 아니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장체험은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력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직장체험이 경력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공·적성에 적합한 연수 기업을 선정하고, 교육과 관련된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점 인정 등을 통하여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고졸 이하의 저학력 실업자가 청년실업자의 과반수를 상회하므로, 대졸자에 편중된 청년실업대책을 저학력 실업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정보통신 등 취업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고졸 미취업자에게는 조선·자동차 등 인력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과 연계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저학력 미취업자에게는 사회적 효용은 높으나 수익성이 낮은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나이가 청년 구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는 가족·친지의 소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며, 직업안정기관이나 학교내 취업정보실 등 제도적인 기능에 의한 취업이 극히 낮기 때문에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청년실업대책의 효과성 또한 낮은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내 학교·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지원서비스 공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한 체계화하여 ‘한국형 뉴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심층 상담을 통해 구직능력의 정도에 따라 중점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이들에게는 취업알선·일자리제공·직장체험·직업훈련 등을 하나의 서비스 패키지로 만들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청년실업을 수준에 따라 일자리·연수·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실업대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구조적·예방적 관점에서 고용정책만이 아니라 산업정책·교육정책과 연계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청년층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과 연계한 교육은 청년실업을 예방하는 사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국가들은 학교-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청년층 고실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예방적인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학교-직업세계 이행 기회법 등).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

기업 역동성 높여 고용창출기반 구축해야

청년층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동성을 높여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한편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화의 진전에 대응하여 제조업에 치중된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능력이 뛰어난 중소기업의 육성에 역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고용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에 기피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발전전망이 낮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나친 생산성 격차를 해소하는 적극적인 정책만

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개하여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학과정원·교육과정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교육이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은 물론 학생들이 직업전망에 기초하여 진학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공분야별 취업실태를 공표하는 제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대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전공분야별 평균 취업실태를 함께 공표하며,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및 학문 후속세대에 대한 지원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포스트 산업사회에 걸맞는 교육·노동시장 연계를

청년실업에는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연계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포스트 산업사회에서의 일의 세계의 변화를 인식하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과제들을 검토한다.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wchang@yonsei.ac.kr)

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것으로부터 네트워크형의 유연한 조직으로 변화한다. 대량 생산을 위한 기계적인 노동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더욱 더 강조한다.

새로운 일의 세계는 체계적으로 세분화되고 강하게 분리된 전문성보다는 빠른 변화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전문화’를 요구한다. 지식과 기술의 다양성·지역성·특수성 및 유연성을 강조하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되고 절충된 형태의 새로운 관계와 탈경계화가 부상한다.

포스트 산업사회는 ‘유연한 전문화’를 요구

산업사회는 선형적 연속성과 안정성, 질서정연함과 예측 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닫힌 체계였다. 이에 반해, 포스트 산업사회는 불규칙하고 혼돈스러우며 끊임없이 변형되는 열린 네트워크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하나의 최선의 길’(one best way)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이든 좋다’(anything goes)는 자세로 끊임없이 제3의 새로운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산업사회의 정신이며 삶의 모습이다.

포스트 산업사회의 일의 세계는 탈표준화·다양화·개체화·개별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인다. 개인의 다양한 요구와 창의적 정신을 강조하는 서비스업과 지식 산업이 주요한 산업으로 발달한다. 기업 조직은 위계

학교교육의 유연화·탈경계화·다양화가 필요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의 포스트 모던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교육은 유연화·탈경계화·다양화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포스트 산업사회에서는 학교를 마치고 안정적인 평생직장으로 이동하던 질서정연하고 정형화된 노동시장 이행 패턴이 사라진다. 그 대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리고 비정형화된 학교-노동시장 이행 모형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산업사회로의 전환기에서 교육은 더욱더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는 학생들이 폭넓게 학습할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 직업세계의 유연화는 학생들로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여금 단일전공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학습을 요청한다. 또한 일에 대한 유연한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복잡한 세계에서 현실을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의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경력 지능’(career intelligence)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사 운영이 더 유연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 현장근로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서라도 학기제와 방학기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행 2학기제를 3학기 또는 4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경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포스트 산업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부문들 상호간의 융합이 중요하다.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 학교와 학교 그리고 학교 내 기관들 사이의 탈경계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산학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육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사내대학 또는 기술대학은 기업 중심의 산학연계의 예이며, 학교기업(SBE)은 학교 중심 산학협동에 해당한다.

다른 한편, 대학과 대학 사이의 탈경계화도 추진되어야 한다. 대학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공유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개별 대학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대학 간의 학점교류는 그 대표적인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교육이 더욱더 다양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비슷비슷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특성화와 다양화의 원리에 기초한 학교교육구조

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다선형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이 될 필요도 없다. 개별 대학들은 각자의 특성에 맞추어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성화하여야 한다. 직업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들도 대학 나름의 독특한 산업분야를 고려하여 특성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내에서의 트랙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대학 내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이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진로에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

기업은 학교의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야

산학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단순히 교육의 수혜자, 즉 학교졸업자를 골라 채용만 하면 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교와의 협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가 육성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도 경쟁력을 잃게 되어 공멸할 수밖에 없다.

먼저, 기업은 다양한 능력을 중시하는 채용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바깥으로부터 올 수 있으며, 다양한 능력들 사이의 ‘이종교배’(hybrid)가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 자체에서 여성, 지방대학 출신자, 순수학문 전공자 등을 일정비율 선발하도록 내규를 정할 필요도 있다. 그럼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창조적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은 학교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교졸업자들의 직무능력을

교육과 노동시장 사이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학교교육의 유연화·
탈경계화·다양화 등 교육의 포스트
모던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산학
연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가 육성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높이는 데 일정한 책임을 분담하여야 한다. 대학생 인턴십, 중소기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현장 실용능력 제고 프로그램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현장 실습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기업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기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기업은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획득할 수 방안을 강구하여 상생(win-win)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아이디어 또는 프로젝트 공모전 같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넷째, 기업은 정규직 직원에게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직원들에게도 '건강한 작업환경'(healthy work)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들이 일을 통해 지적인 자극을 받고,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일을 통해 다른 사람과 사회에 기여하고, 경력 상승 이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학교-직업 이행망' 구축을

청년실업의 문제는 '학교-직업 이행망'(school-to-work nets)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행망은 학생들이 알아서 하던(Do-It-Yourself) 노동시장 준비와 구직으로부터, 교육과 사회, 국가가 총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누구나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정보와 학습의 그물망에 걸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짜여진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서 일의 세계로 이행하는 전과정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교졸업자가 노동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일을 준비하고 직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기업 역시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통해 사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보 인프라의 구축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그 정보가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은 시대 변화에 맞게 새로운 물질을 터주는 제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직·일용직 등 비정형 근로의 증가가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추세라면, 그러한 일자리들이 새로운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과거의 안정된 직장뿐만 아니라 비정형 일자리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 또는 비정형 근로 형태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개발과 산학협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기금을 통해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는 능력개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포스트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개인의 지속적인 직장과 경력개발의 문제에 대응하여야 한다. 개인개발과 산학협력을 위한 기금은 학교교육의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지역 중심의 산학연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학교·기업 그리고 연구소 등이 함께 모여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학교·기업·연구소 사이의 인적·물적·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전망과 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창출과 산학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상설기구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효과성을 높이고 인력수급상의 불일치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제고 시급

청년실업이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고 전체 실업자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업률 지표만 보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 최근 2~3년간 청년실업률(15~29세 실업률)은 6~9% 수준으로 1990년대 초중반에 비해 약 2%p 정도 올라갔을 뿐이다. 청년실업률이 보통 10%대에 이르고 심지어 20%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십대 청년의 태반이 백수'라는 뜻의 '이태백'이라는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청년층의 경제적 고통이 크게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학설립 자율화 이후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간 데 반해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가 충분히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괴리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청년실업 그 자체보다도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뜻이다.



김석진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sjkim@lgeri.com)

비정규직 증가 등 청년층 일자리의 질 저하

먼저, 청년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을 졸업 후 진로현황을 통해 살펴 보자. 우선,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졸 취업자의 진로 비중에서 관리·전문직과 기술직 등 소위 괜찮은 직종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신 서비스·판매직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표〉 참조).

이와 비슷한 현상은 고졸 취업자의 진로 비중 추이에서 먼저 나타난 바 있다. 외환위기 직후에 고졸 취업자의 사무직 취업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서비스·판매직과 단순 노무직 비중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진로 비중의 변화는 곧 청년층 일자리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년층의 취업 비중이 늘고 있는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및 단순 노무직 종사자의 월급여총액은 전직종 평균에 비해 20~60만원 정도 적다. 또한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이 평균보다 16시간이나 많고 단순 노무직의 경우에는 무려 36시간이나 많다. 즉, 요즘의 청년층은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취업을 한 경우에도 급여는 줄고 근로시간은 많아지는 등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입지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밀접히 관련된 현상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비정규화 경향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서, KDI의 공식견해나 「나라경제」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서 비정규직 비중 증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청년층의 경우에는 그 속도가 훨씬 빨랐다. 20대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은 과거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낮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상승해 중장년층을 앞질렀다(〈그림〉 참조). 최근에는 외환위기 직후보다 다소 비정규직 비중이 떨어졌으나 여전히 중장년층보다 높은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한 중장년층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았던 데 반해 신규 채용대상인 청년층은 비정규직화하기가 쉬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취업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로, 쉼없는 일자리로 분류되는 대기업의 채용 비중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자수는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들의 신규 채용자수는 늘어났다.

고용의 질 저하는 상대적 임금수준 저하 초래

이 같은 현상은 앞서 말한 서비스·판매직 비중의 증가 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잘 알

려져 있듯이 대기업들은 대체로 제조업 부문에 많은데, 우리나라 제조업에서는 자본집약 또는 기술집약 쪽으로 꾸준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신규 채용자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들에서 신규 채용자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산업구조의 변화는 인력수급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상승 추세를 보였고 대기업과의 부족률 격차도 점차 확대되어 왔다. 즉, 중소기업에서는 신규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자리로 취업하려는 사람이 부족해 일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에서는 비어 있는 일자리가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근로환경 격차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져 2003년말 현재 (300인 이하)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은 (500인 이상)대기업의 6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밖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근로시간 그리고 학력과 기대수준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 등도 청년층으로 하여금 취업을 기피하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청년층 고용의 질 저하는 상대적 임금수준의 저하로 귀결되고 있다. 1997년 평균 월급여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의 2002년 월급여총액을 연령별로 나타내 보면,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 3~40대의 월

청년층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공급체계를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한편,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표〉대졸 및 고졸 취업자 진로 비중

	1997		1999		2001		2003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대졸	고졸
관리·전문직	26.2	0.2	28.6	0.3	30.1	0.5	27.5	0.0
기술직	22.8	6.0	20.1	8.6	20.4	9.7	19.6	8.3
사무직	32.2	36.8	29.6	33.1	28.1	31.1	27.8	30.8
서비스·판매 관련직	10.4	13.2	10.2	19.0	10.9	18.1	15.7	19.6
생산 관련직	4.7	38.8	7.6	29.2	7.5	31.6	6.4	31.6
단순 노무직	0.7	3.5	1.0	8.3	0.8	7.9	1.0	9.0
기 타	3.0	1.4	3.0	1.5	2.1	1.1	2.1	0.8

주: 1) 관리·전문직 = 입법공무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2) 생산 관련직 = 기능원 및 관련기능 근로자 + 장차,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3) 기타 = 농업 및 어업 근로자 + 군인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호.

급여총액은 연평균 5.8~6.5% 증가해 130을 상회하고 있으나 20대 청년층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5%대 초반에 불과하여 120대 후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청년층의 임금 상승률이 장년층에 비해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취업이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및 판매 관련직,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등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연령대별 상대적 소득격차가 확대됨으로써 청년세대의 경제적 위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불리해졌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 모색해야

이처럼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진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다.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인사관리를 유연하게 하려는 기업층의 대응이 결과적으로 청년층 일자리의 상대적 악화로 나타난 것이다. 언뜻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히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노동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제도적인 보호(정규직 중심의 노조, 고용보호 법제,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감으로써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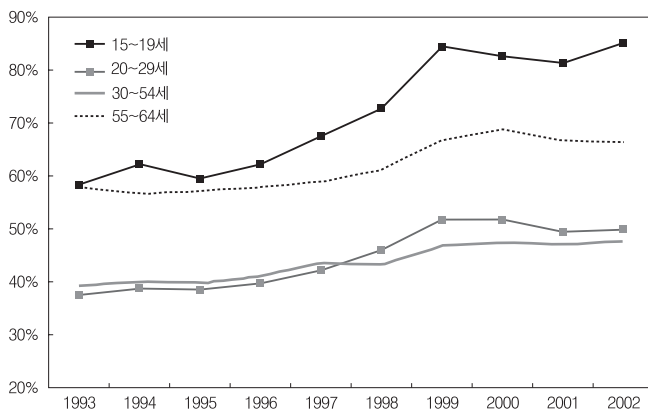
둘째, 교육시스템이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따라 산업구조와 직업구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반면,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력구성은 훨씬 느리게 변하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급속히 상승함에 따라 '과잉교육'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층의 취업 만족도도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년층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공급체계를 목표로 교육시스템을 개혁해 나가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 정부가 각종 대책을 통해 강조하고 있듯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부문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다. 지금까지 대체로 기피대상이었던 이들 부문에 청년들이 활발하게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 및 임금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에 따른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효율적 작동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 마련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법이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실행해 나간다면, 청년실업은 장기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5]

〈그림〉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중 추이



주: 비정규직 = 임시직 + 일용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호

‘청년실업 탈출 십계명’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과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사실 청년실업 해소에 왕도는 없다. 경제 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지름길이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십계명을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작은 희망에서 대원칙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청년실업 탈출을 위한 십계명을 소개한다.

① ‘끼’ 있는 창의성을 키워야 한다. 기업은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조직이다. 기업들이 다양한 심층면접을 하는 것은 결국 지원자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창의성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과정이다.

② 전략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항상 자기 개발에 소홀하지 않는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소극적 접근법보다 전략적(목표지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품성을 가져야 한다. 기업은 기업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다.

③ 직무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한다. 목표의식 없는 구직활동을 통한 입사는 반드시 빠른 기간내 이직을 초래하며, 이는 본인과 기업 모두에게 손실이다. 자신의 능력·스타일·동기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어떤 직장·직무가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한다.

④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고 어학능력을 키워야 한다. FTA가 확산되면서 국가간 경제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다. 과거 대규모 기업이나 일부 업종만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국가간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이다. 글로벌 마인드와 어학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⑤ 지식사회에 걸맞는 학습능력을 가져야 한다. 급변하는 지식정보시대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에 대

한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한다. 지식과 정보의 역할이 글로벌 네트워크 화를 통해 강화되는 지식사회에서는 끊임없는 학습능력을 겸비한 지식근로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은 전공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영어 구사능력을 높이고 회계학, 토론방법, 프리젠테이션 방법 등 기업이 원하는 기초소양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⑥ 경력관리를 중요시해야 한다. 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을 중심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보다는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 위주로 채용하는 관행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이 목표하는 구직을 한번에 이루려 하지 말고 계약직이라도 전문성 확보차원에서 경력을 쌓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⑦ 기업 가치를 보는 혜안(慧眼)을 길러야 한다. 지리적 위치, 금전적 보상(급여)보다 기업이 가지는 내적가치(기술·제품, 경영자 기업 이념, 기업의 건전성·성장성 등) 등을 보고 기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가 이 기업을 키운다는 의지, 기업이 나와 함께 커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망 중소기업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⑧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조직 중심의 사고를 가져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더라도 기업문화, 기업의 경영철학에 맞지 않는다면 채용이 어려운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기업조직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겠다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⑨ 해외시장의 취업기회도 알아보아야 한다. 최근 일본 등 주요 나라에서는 IT산업이 잘 발달된 한국기업과 일해 보고 싶어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어학 등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이공계 인력이라면 해외시장의 취업기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⑩ 창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창업은 스스로 고용의 기회를 만드는 동시에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신석호 대한상공회의소 차장

구조조정기금 (CRF : Corporate Restructuring Fund)

자산 중 50% 이상을 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유상증자나 사채발행 등 신규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는 기금이다. 뮤추얼펀드 형태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로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강구조조정기금 등 4개의 CRF가 설립·운영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기술적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였다.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차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투자은행들로부터 차입하여 마련한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지원자금은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팔아서 마련한다.

투자 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가 2,500억원을 넘는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며 부도가 있거나 화의·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기업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

크게 '부채구조조정기금'과 '주식투자기금'으로 나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기업에 장기자금을 대출해 주어 단기채무를 장기채무로 전환해 주는 것이고, 주식투자기

금은 기업 주식을 기금으로 사들여 신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부채구조조정기금은, 지금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덜어주면 빠른 시일 안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1~3년 만기)과, 시설자금(3~7년 만기)을 빌려준다.

이들 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CB)를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인 장기 대출과 같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일정한 비율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

주식투자기금은 회생 가능성이 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배당과 투자수익을 얻는다. 주식매입을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회사를 일정기간 소유하면서 자금지원 등을 통해 회생시킨 후 높은 가격에 매각하기도 한다.

경제정책해설



54 >> 국가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김재홍

57 >>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 김성하

62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방안 / 서석주

66 >>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 도모 / 고철진

70 >> 국가 원자력방재체제 구축 / 이인일

74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 임종규

국가 균형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김재홍
산업자원부 균형발전정책과장

참여정부는 최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을 설정하고 ‘3분(분업·분권·분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증진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끌고루 잘사는 사회의 건설’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형 성장’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간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어 왔다. 2001년 기준으로 볼 때 1970년대에 28.3%에 불과했던 수도권 인구는 47.2%로 증가하였고, 지역 총생산은 46.5%, 대기업 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산업혁

신을 뒷받침하는 R&D·연구인력·연구개발기관 등의 수도권 비율이 60% 내외 수준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어 왔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그간 추진해 왔던 규제 중심의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과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지역 개발정책이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또한 균형발전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추진체계가 없어 여러 부처에서 단편적·분산적으로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법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대내외 여건변동에 따라 정책이 수시로 변동했던 것도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형 성장’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의 기반 마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전략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며, 이와 조화된 SOC투자를 통해 기업의 지역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수도권 기업의 해외이전을 지방으로 유인하는 것이 현충 용이하게 되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역특성화 발전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지역기업이 혁신주도형 기업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토양을 조성하는 것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형 성장'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제시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지난해 12월 제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수도권도 입지규제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을 추진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중추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최근 투자 활성화,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행한 수도권 첨단업종 대기업에 대한 일부 입지규제 완화조치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화된 전략산업에 대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 신발, 대구 섬유, 광주 光, 경남 기계 등 기존의 4대 지역산업 진흥사업과 대전·전북·강원·제주 등에 대한 9대 지역산업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권역별로 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지역별 산업단지가 산업클러스터의 혁신거점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 등 소프트웨어사업과 연구센터 건설 등 하드웨어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기업 등의 지방이전 추진

지방의 혁신역량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방이전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업 등으로 하되,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 소재가 불가피한 기관인 경우는 이전대상 공공기

관에서 제외하였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올해 동안 부지매입비·고용보조금 등으로 3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지원으로 발전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고용창출이 가능한 地緣산업에 대한 R&D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낙후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이미 EU 등 선진국에서도 1인당 소득수준 등의 지표로 활용하여 낙후지역을 지정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재정자립도·인구변화율 등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오지·접경지역 등 기존 낙후지역 이외에 추가로 낙후지역을 지정하고, 낙후지역 지원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갈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하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추진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관리하고, 회계예산은 소관 부처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주세·일반회계 전입금 등 약 5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2004년중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2005회계연도부터 시행되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

로 정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 및 전용 범위의 확대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운영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체계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으로서 로드맵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과거 지역정책과 같이 단순히 수도권 집중억제가 아니라, 지역의 내생적 혁신역량의 확보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 시정과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한 '자립형 지방화' 달성을 위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참여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표명하며,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대한 정책수단을 제시한다. 또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역정책의 준거가 되고, 시도별로는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내 '지속가능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지난해 12월 중간보고회 개최 등 여러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마련된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은 최종확정 단계에 있다.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부문별 계획은 올해 3월까지 최종 시안이 마련되어 4월중에 시·도별 계획과 중앙부처 계획간의 정합성 검토과정을 거친 바 있으며,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5월중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미국의 '실리콘벨리', 이탈리아 북부의 '제3이테리', 영국의 '캠브리지 과학단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그', 일본 오이타현의 '1촌1품운동', 오스트리아의 '그라츠' 등과 같이 선진 각국은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

해 다양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혁신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 수준에서 혁신체계를 구성하고 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시·도 수준에서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자체·대학·기업·연구소 등 지역혁신 주체들이 긴밀한 협력과 공동학습을 통해 혁신을 창출·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전문가들 간의 '교류와 미팅의 장'을 만들어 혁신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지원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의 혁신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고용 흡수력 둔화, 원천기술의 부족 등을 극복하고 투자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잡힌 성장' 궤도에 다시 진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성장구도는 혁신주도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국가균형발전시책에 의해서 뒷받침되어 나갈 것이다.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등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 성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집적(clustering)의 이익을 유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의 수도권 규제, SOC 등 물적 인프라 중심의 정책 틀에서 벗어나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지역정책의 근본 틀 속에서 30년 내리막의 지방을 반전시키는 것이 바로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역할이 될 것이다. ■

시장경쟁 활성화를 위한 기업결합심사



김성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초국경적(cross-border) 대형합병(Mega-Merger)이 증가하고, 기업인수권 시장의 활성화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가 확대되고 있으며, 적대적 기업결합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한편 주요국 경쟁당국은 자국국경 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해 역외적용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경쟁네트워크(IC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제도에 관한 국제표준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용하고 있는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정책목적과 주요 내용 및 국제표준화 논의동향 등을 살펴보는 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기업들의 국내외 사업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기업결합은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정착되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

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경제질서가 태동하면서, 과거 국내시장이 해외로부터 보호받던 시대에 덩치 불리기 및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두었던 기업결합과는 달리, 이제는 전략적 차원에서 경쟁력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떼어내고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결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과점 방지로 경쟁 유지·촉진을 유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2000년에 700건을 상회하는 기업결합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었으며, 이후에도 연간 600여건에 달하는 등 기업결합이 주요 구조조정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기업결합은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기업단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해당시장 측면에서는 경쟁자의 수가 감소되어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접근을 막게 되거나, 경쟁사업자간 담합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연합(EU)·독일·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결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국내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매각·주식

기업결합심사제도는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경쟁제한효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을 유지·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기업결합 신고단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단계, 시정조치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처분 등 독과점의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임원겸임 및 새로운 회사설립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7월부터는 해외로부터의 반경쟁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국내법을 역외적용하고 있다.

기업결합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이유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구조가 형성된 뒤에는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며, 왜곡된 시장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효과는 가격인상·출고조절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 외에 포착하기 어려운 담합 가능성의 증가,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효과 등이 있다.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거나, 핵심원자재를 독점하게 되거나 시장내 경쟁자수가 급격히 줄게 될 경우에는 독과점의 성격상 가격인상이나 담합의 유인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우 기업결합 이후 구체적 행위발생 시 사후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개별적인 반경쟁적 행위 발생시 우선 이를 포착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과징금 부과나 시정조치를 한다고 해도 이러한 경쟁제한행위를 할 유인 자체를 제거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법률관계도 수립되므로 기업결합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쟁법을 운용하는 모든 나라들은 기

업결합심사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법 집행에 있어서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즉, 기업결합심사제도는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경쟁제한효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경쟁을 유지·촉진시키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라고 하겠다.

기업결합심사제도는 신고·심사·시정조치의 단계로 구성돼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크게 단계별로 분류해 보면 기업결합 신고단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독과점 폐해 우려 등) 심사단계, 시정조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신고제도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업결합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한다면, 기업·행정 부담이 막대할 것이며 심사 측면에서도 실익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5천만 원의 매출액을 보유한 회사가 매출액 1천만원의 회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관련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상장·등록법인은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임원 또는 중



▲지난 4월 21~22일간 서울에서 제3차 ICN 연차총회가 개최되었다.

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구체적인 기업결합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임의적 사전심사요청제도가 있다.

기업결합의 심사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예비적 검토를 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심사대상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고 있다. 간이심사대상은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에게 특수관계인 경우,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 간에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기업결합,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하는 혼합결합 등으로 분류한다.

이외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품·서비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경쟁제한성을 집중 검토하게 된다. 경쟁제한성 여부의 판단은 결합유형(수평결합·수직결합·혼합결합)에 따라 시장점유율, 시장봉쇄효과, 신규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해외수입상황, 결합당사회사의 원재료 조달능력·기술력·판매력·자금력, 잠재적 경쟁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다만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규정(법 제7조 제4항)을 두고 있다. 동 규정에서는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1사업자 50% 이상, 3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에 해당되고,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며, 제2위 회사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시장점유율 합계의 25%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시정조치 및 벌칙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일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M&A심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제한성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중이며,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등에 대하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부과하게 되며,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쟁을 제한하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라 밖에서 발생한 기업결합 신고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7월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자국시장 외에서의 기업결합이 자국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면서, 미국·유럽연합·일본·독일 등을 비롯한 전세계 수십여개 국이 자국국경 외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외에서의 기업결합도 공정거래법 신고 및 규제대상이 된다고 해석해 왔으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이 미비하여 신고 및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도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심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로 국내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고 있는 외국기업간 또는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으로는 ① 당해 외국기업이 국내 계열회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

는 경우 ②당해 외국기업이 국내 수출 등 매출액이 있는 경우 ③당해 외국기업이 국내 매출액이 없더라도 당해 외국기업의 계열회사가 국내 수출 등 매출액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쟁적 영향을 차단하여 국내시장의 경쟁 및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간 기업결합' 및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에 대한 세부 신고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국에서 발생한 기업결합이라는 점에서 국내시장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새로이 국내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국내시장에 아무런 매출이 없는 외국기업간 기업결합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시행된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3월 현재까지 영국의 WPP Group plc.의 Cordiant Communications Group plc. 주식취득, 독일의 P&G Germany사의 Wella AG 주식취득 등 총 25건이 신고되었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제도 시행후 최초로 외국기업간 기업결합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도운영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도입 수개월 전부터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WTO·OECD 등 국제경쟁정책 논의에서 우리 경쟁정책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OECD·ICN의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세계화의 영향으로 초국경적 합병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필요성은 급증하는 반면,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제도가 상이한 다

수의 경쟁당국에의 신고의무 발생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적절히 조화하기 위해 각국 제도의 표준화 논의가 OECD 및 ICN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OECD에서는 산하 경쟁위원회(Competition Committee)를 중심으로 경쟁당국간 협력, 구체적 정책이슈 및 합병신고·심사기준 등 광범위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한편 ICN(2001. 10 출범)에서는 기업결합신고제도·심사제도·조사기법 등 제한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즉, ‘모범관행’(best practice) 도출을 목표로 한정된 주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ICN에서의 논의는 OECD 등의 논의보다 강한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경쟁위원회의 부의장직 및 ICN 가입작업반 의장직 수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4년 4월 21~23일 간에는 서울에서 전세계 공정거래위원장 및 경쟁법전문가들의 참석하에 제3차 ICN 연차총회 및 국제변호사협회(IBA) 글로벌포럼을 개최하였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기업결합심사로

경쟁촉진·소비자후생 제고에 주력

공정거래위원회는 M&A심사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큰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진행중이다.

경쟁제한성 발생빈도가 높은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을 현행 완료후 신고에서 완료전 신고로 전환하여 경쟁제한성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또한 현행 완료후 신고제하에 있어서는 주식취득 완료후 신고만 심사하게 됨에 따라 시정조치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완료전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주식취득신고시 지배관계가 없어 신고수리 되었으나 이후 추가 지분취득으로 최대출자자가 되

는 경우 재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기업결합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다. 현행 제도에 의하면 지배력이 없어 경쟁제한성심사를 면제받은 자가 후에 지배력을 취득하였음에도 심사가 면제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향후 이러한 방식의 지분취득을 통해 신고의무를 회피하면서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재신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절차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경쟁제한성 발생 가능성이 적은 소규모 기업결합(취득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규모가 일정기준 미만 등) 및 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기업결합 심사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내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후생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기업결합을 중점 심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다. 한편 ICN 및 OECD 등의 기업결합심사제도 국제표준화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한편, 선진경제 분석기법을 습득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끝으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개선뿐만 아니라, 제도 운용의 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산업별 민간전문가와와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중요이슈별 팀제 구성 등 경제분석능력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무한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은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독과점형성 등을 위한 기업결합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여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입장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독과점 지위에 안주하여 기술개발·경영개선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또한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도입 방안



서석주
노동부 여성고용과장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 차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성 고용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소폭의 등락세를 보이며 정체되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6%로서 OECD 회원국(평균 78.4%)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비정규직화로 인하여 여성근로자는 저임금 영세사업장 종사비율이 높고,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도 임신·출산 등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많고, 관리직으로 진입하는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해 노동시장에서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

여성인력의 이러한 저활용 문제 및 내부노동시장 차별문제에 대해 정부는 그간 모집·채용 등 고용차별 행

위 등에 대한 근로감독 및 근로자들이 제기하는 진정서 등 신고사건 처리를 통하여 해소하고 있었으나, 기업내 성차별이 직접차별보다는 간접차별 형태로 깊이 내재되어 있어 법적 제재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이러한 구조적·관행적 고용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아주 유효한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간 여러 해 동안 적극적 조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 다방면의 검토를 통하여 미국과 같이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즉, 기업은 채용·승진·배치 등에 있어 남녀 인력상황을 분석하여 여성이 적게 고용된 분야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목표와 이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노동부는 매년 고용평등계획의 적정성과 고용평등계획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조달계약과 연계하여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미국의 ‘계약준수제’를 벤치마킹하여 설계하였는데, 미국에서는 고용평등계획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정부조달계약을 해지·중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부진기업에 대한 제재는 최소한으로 하고 우수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도입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제도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2005년에는 1천인 이상 기업, 2006년부터는 300인 이상 정부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제도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2005년에는 1천인 이상 기업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2006년부터 300인 이상 정부조달기업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 도입을 위하여 2006년까지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평등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인력 통계자료 체계화 및 매뉴얼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의 여성고용에 따른 부담완화 조치로서, 앞으로 산전후 휴가급여의 사회보험 부담 수준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월 10~15만원)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인종차별 불식을 목적으로 시작된

미국의 적극적 조치

적극적 조치는 원래 미국사회에서 인종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작된 반차별 정책(anti-discrimination policy)의 하나이다. 그러나 반차별만으로는 인종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룩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반차별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의 조건을 같이해 주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서 적극적 조치가 시작되었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이러한 과거 차별에 대한 보상과 현재의 왜곡된 불평등 상황을 고치기 위한 치료책으로, 흑인과 여성에게 채용·승진·훈련 등에서 백인과 남성보다 우선적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1941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인종에 근거한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었다.

이후, 1964년 '민권법' 제7편이 통과되면서 인종·피부색·종교·성·국적 등에 근거한 차별금지가 명문화되었고, 특히 25명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및 공공사업장에서의 고용평등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원은 적극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극적 조치의 발전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보완한 행정명령 제11246호를 공포하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즉,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주 및 연방정부와 5만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인종·피부·종교·국적 등에 의해 차별을 해서는 아니되며, 이들이 신분에서 상관이 없이 고용되고 처우 받도록 적극적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으며(이 조치는 우리나라에 '계약준수제'로 소개된 정책이다), 이 명령을 시행하고 감독할 권한을 노동성 연방계약준수국(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에 부여하였다.

역차별 논쟁을 딛고

사회정의에 부합된 정책으로 평가받아

처음에는 적극적 조치의 차별대상에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1967년에 여성을 적극적 조치에 포함하였다.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채용에 있어 후보자의 조건이 동등하다면 여성 또는 소수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무자격자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베푸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미국내 일부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여성과 소수민이 더 많은 몫을 차지하면 백인인 남성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백인 남성 등 다수집단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쟁도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오랜 차별관행으로 인하여 경제적 구조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여성과 소수민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역시 사회 정의에 부합되는 정책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의 이익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전체사회가 얻는 이익과 비교 형량하면 적극적 조치는 시행 타당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적극적 조치는 소극적 차별금지부터 소수민 특별우대, 할당(quotas)에 이르기까지 그 방법도 다양하며, 대학입학에서 소수민을 우대하거나 채용·승진·배

치·훈련·노동조합가입·해직·해고 등에서 여성 및 소수민을 배려하는 정책 등 여러 형태가 있다.

기업가들에 대한 배려로는 여성이나 흑인과 같은 소수민이 소유한 기업은 공공사업 계약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도록 하거나, 은행에서도 우대조치를 해주는 것 등이 있다. 미국도 적극적 조치 시행초기에는 구체적 지침이 없이 시행되고 법원에 제소된 소송에서 결정된 사법적 명령이 시행지침의 역할을 하였다.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1974년에 대략의 지침서가 마련되었으며, 사업주가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

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여성과 소수민이 과소 고용되어 있는 직무와 직위를 찾아내고, 여성과 소수민을 적정활용 수준만큼 충원할 목표인원 및 목표달성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매년 얼마만큼 소수민을 충원할 것인지 시간표를 짜고, 목표와 일정표에 따라 여성과 소수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가면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진척정도를 점검한다.

차별에 대한 판단은 인구통계, 노동력통계, 특정직위에 자격을 갖춘 여성비율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예: 의과대학에 여성의 비율이 20%라면 의료기관의 의사 충원에서 여성을 적어도 20% 충원하도록 하는 것)에 의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5분의 4 규칙(four-fifth rule)'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적극적 조치는 여성고용비율 증가, 사무관리직 여

‘고용평등프로그램’이 도입·정착되면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며,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비율 향상 등에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1984년 발표된 보고서(Citizen’s Commission on Civil Rights)에도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즉, 계약준수제 적용기업)에서는 여성의 고용비율이 15.2%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는 2.2%에 불과하였고, 중간급 이상 관리직도 여성의 수가 조달 계약 기업의 경우 더 많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연방계약준수국도 계약준수제로 인하여 1970년에 단지 10%에 불과했던 관리직 여성비율이 1993년에는 29%로 증가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여성뿐 아니라 고령자·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해소도 기대돼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노예제와 인종차별이라는 특이한 역사의 산물로 이러한 차별에 대한 보상과 차별의 결과로 유발된 왜곡된 구조를 치유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고안된 제도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적극적 조치는 무엇보다도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프로그램으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흑인들이 족쇄에서 해방되었다 하더라도 취약해진 경쟁기반으로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차별 고용관행 정착과 우대적 대우 양축(兩軸)으로 고용평등을 이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 적절한 역할모델과 네트워크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만큼 여성의 고용평등이 확보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다.

물론 반차별 정책으로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제정하고 1989년 제2차 개정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여성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다. 그리고 제한된 의미의 적극적 조치로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정책과 선언적 의미의 법적 근거로는 실효성 및 파급력이 미미한 실정인어서, 민간부문에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평등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적극적 조치는 기존 보수세력이 구축한 사회구조의 틀을 깨는 가장 효과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이다.

고용평등프로그램이 도입·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정착될 경우, 전반적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의 고용관리 개선을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증가에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고,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인사제도가 구축되어 각종 고용지표상 남녀간 격차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은 비록 여성과 같이 명백하고 주된 차별대상에 한정되어 실시한다 하여도 궁극적으로 인적자원 관리의 합리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고령자, 장애인, 학벌·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역시 추가적으로 시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 도모



고철진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장

화물자동차운송산업은 그동안 국가경제의 대동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운임하락, 경유가 인상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되고 지입제로 인한 차량재산권 제한, 단단계 운송거래 구조로 인한 수입감소 등으로 운송 종사자들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불만은 급기야 지난해와 같은 화물운송 집단 거부 사태로 폭발함에 따라 국가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등을 개선하여 화물운송 집단 거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물운송산업을 선진화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개선대책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화물운송산업의 조기 선진화 유도

화물운송업계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을 적극 해소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화물운송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화물운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단계 거래구조로 인한 물류구조의 왜곡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발굴하여 물류비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화물운송 집단 거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수립하여 화물운송시장이 조기에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중인 정책대안에 대해 현재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해소

1997년 7월 화물운송 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최근 5년(1997~2002)간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64.9%가 증가하였으나, 물동량은 17%밖에 늘어나지 않아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이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화물운송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 화물차주의 실질소득 증대,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제도 시행,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집단 운송거부 행위 방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 2/4분기부터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발생하였다. 특히, 5t 미만 중 소형 차량이 140% 증가(7만8천대→18만8천대)한 반면 5t 이상 대형 차량은 17.6%(12만5천대→14만7천대)가 증가하여 5t 미만의 중 소형 차량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화물운송업계는 2002년 기준으로 전체 물동량과 수송능력을 감안할 때 약 7만대 정도가 공급과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99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차량당 평균 수송량도 28.9% 감소하였고 운송료도 10% 내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고 화물운송 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운송 사업의 진입 제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업종(차종)별 차량 대수, 물동량, 운송료 수준 등 시장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마련한 ‘차량공급 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신규 허가 및 증차를 허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신규 진입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문

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였다.

또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매 3년마다 차고지·차본금 등 허가기준의 준수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는 ‘허가사항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화물차 운전기사의 타산업으로의 직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차주의 실질소득 증대

정부의 유가 합리화 계획에 따른 경유가 인상(376.2→766.4원/ℓ) 및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운송량 감소 등으로 화물차주의 월평균 소득이 1997년 202만원에서 2002년에는 165만원으로 감소하여 화물차주의 사업여건이 악화된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할인 시간대를 2003년 5월부터 2시간(24:00~06:00→22:00~06:00)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고, 2004년 3월부터는 대형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하였다.

그리고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운임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시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적정운임이 형성될 수 있도록 운임인상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주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이 수령 절차의 번잡 등으로 약 50%가

〈표 1〉 화물자동차 수급균형 변동

	1997	2002	연평균증가율(%)	누적증가율(%)
전체 영업용 화물자동차(대)→공급	202,783	338,240	10.8	65.0
영업용 물동량(100만t)→수요	499	585	3.2	17.0

주: 2003년에는 10월까지 3.8%(1만2,690대) 증가로 둔화 추세

〈표 2〉 화물차량 운임 변동 추세

	1997	2002	증감(%)	
연간 차량당 물동량(t)	2,460	1,730	-29.7	
운임	철강(서울-부산)	23천원/t	20천원/t	-13
	컨테이너(40ft)	450천원	400천원	-11

주: GDP에서의 물류비 비중은 1999년 12.9%에서 2001년 12.4%로 감소

수령을 포기하고 있어 2004년 1월부터 '유가 보조금 카드'를 도입하여 본인의 청구 없이도 유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 차량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조세(등록세·취득세·환경부담금 등)의 감면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제도 시행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운송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화물운송의 서비스 개선 및 운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을 공포 당시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기사에게는 소정의 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아도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 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첫 번째 시험은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올해 7~8월 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시험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 서비스 및 교통안전과 관련되는 과목으로 할 계획이다. 참고로 필기시험은 교통 및 화물운수 사업 관련 법규, 안전운행, 화물 취급요령 및 운송서비스가 주로 출제될 전망이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한 수준의 운전기사만이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화물운송 서비스가 향상되고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의 자긍심과 직업관도 많이 제고되리라 본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2004. 3. 3 시행)〉

- 4종(10~20t) : 71.0원→55.5원/km(-22%)
 - 서울-부산 : 30,600원→25,700원, 서울-광주 : 23,400원→18,700원
- 5종(20t 이상) : 72.4원→65.7원/km(-9%)
 - 서울-부산 : 31,200원→30,300원, 서울-광주 : 23,900원→22,000원
- ※ 4종은 월 7만원, 5종은 월 3만원 내외 절감 효과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

화물운송 시스템은 화물운송업체가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하고 물동량도 계절적 변동이 심하여 다단계 거래가 불가피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업 등 화주들이 신뢰가 없는 개별 차주보다는 신용이 확인된 주선 또는 운송 업체에 관행적으로 화물을 일괄하여 위탁하는 시장 구조여서 2~3단계의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물류 기능을 아웃소싱(outsourcing)하면서 (제3자 물류)거래 단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일부 물류 자회사는 퇴직 임원이나 친척 등이 운영하면서 단순 채주선이 주선수수로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물류비 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소규모 주선(운송사 포함)사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화물운송 정보를 상호 공유하지 못해 주선·운송업체간 다단계 거래가 일반적이며, 일부 주선사의 경우 10~15%의 과도한 주선수수를 공제하고 있다. 그리고 2~4단계의 다단계 거래시 차주는 운송료의 70~80%만을 운임으로 수령하게 되고, 일부 화주 또는 운송사는 3~4개월 만기어음을 운송대금으로 지급하여 실질 운송수입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가맹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가맹본부가 화주로부터 물량을 확보하여 전산망을 통해 개별 운송사업자(가맹자)에게 직접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단계를 단축하고, 주선 업체간 차량 및 물량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주선단체의 화물 정보망 구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화물운송 정보망을 통한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화주가 화물 정보를 공개하도록 화물 정보망을 이용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인·양산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올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사업의 진입제도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차주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해 고속도로 심야할인 시간대를 2시간 확대하였다.

에 진출하는 차량·컨테이너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공용 시스템을 개발하여 확산시키고, 단단계 운송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기업의 편법거래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2003년에는 총 1,762건을 적발하여 311개 업체에 대하여 주선업 등록을 취소하였고, 167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6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다. 과도한 주선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아울러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집단 운송거부 행위 방지

지나해 발생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하여 11억4천만달러의 손실 및 해외신인도 하락, 주요 제조업의 일부 조업 중단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노동관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조정이 불가하여 국가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불법적이고 집단적인 운송 거부 행위를 하여 국가의 물류망을 마비시키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였다.

본 제도는 도입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 준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가 물류망의 마비로 인한 국가경제 파국도 결과적으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 직업 자유 등 기본권 실현 수단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이 인정되어 도입하게 된 것이다.

집단 운송 거부에 대비한 정부 종합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기 징후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하였고, 비상시 수송능력 확보를 위하여 컨테이너차량 100대를 구입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컨테이너차량 운전요원 900명도 연내에 양성할 계획이다.

그 밖에 화물운송산업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시도별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005년까지 10개소의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운송시장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화물운송시장 및 차주 동향 등을 조사·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견시 즉각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물운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부터 ‘화물운송산업 육성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된 발전방안을 포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동 종합대책이 확정되면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및 단체 등과 추가 협의를 하여 올해 2/4분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동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기간 전근대적인 시장구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에 시달리던 화물운송업계의 조기 선진화가 달성되어 우리나라 물류의 근간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가 원자력방재체제 구축



이인일
과학기술부 원자력방재과장

우 리나라는 원자력발전량 기준으로 세계 6위의 원자력 이용국가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관련 핵심기술의 보유,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의료계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 6위권의 원자력강국이라 할 수 있다.

원자력 방재 강화 필요성 증대

원자력발전으로 국내 전력의 약 40%를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국민생활에 있어서 전력사용 증가 및 산업계 활동의 증가에 따라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므로 원자력의 중요성도 더욱 증대할 것이다.

2003년도 원자력발전량을 화석연료로 대체 발전하였을 경우 유연탄 4,694만t(1조6,073억원), 중유 1억 9,164만배럴(6조4,645억원), LNG 2,049만t(7조 9,682억원)이 소요되므로 총 16조원에 해당하는 수입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으며, 총 7,925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저감효과를 거두었다.

원자력발전은 발전단가 구성에서 화력발전에 비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연료의 비중이 매우 낮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고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토목건설공사비와 주요기기 비용의 비중이 크며, 토목 건설공사비와 주요기기 제작비의 대부분은 외국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그대로 국내에 남아 선순환된다는 이점이 있다.

원자력발전은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 197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TMI원전 사고와 1986년 8월 구소련 체르노빌(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원자로사고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재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표〉 세계 원전 보유국 비교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국가명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독일	한국	영국	우크라이나	캐나다	스웨덴
가동기수	103	59	53	30	19	18	31	13	14	11
설비용량(100만kW)	101	66	46	23	22	16	13	12	11	10
발전량(억kWh)	8,120	4,347	3,135	1,648	1,398	1,191	896	779	759	685

정부는 원자력 재해의 특수성과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원자력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국가 방사능방재체제를 구축하며, 원자력시설에 대한 대테러·사보타주 방지 등 시설방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1999년 일본 토카이무라 JCO 핵연료가공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원자력발전소 내의 사고는 아니지만 현장 작업시 2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 대피령이 발동되는 등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원자력 재해와 같은 특수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상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제 확보 및 신속한 대응조치체제를 구축하며, 원자력 재해를 방지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재해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9월 11일 미국 테러 등 각종 사고로 전세계는 원자력시설 등의 보호 및 사고시 비상대응조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원자력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의 강화를 권고하였다.

방사능 재해는 일반재해와 달리 일반인의 오감으로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탐지시 전문지식·특별훈련·특수장비가 필요하며, 피해가 광범위할 수 있고 막대할 수 있다(체르노빌 사고시 인근 유럽국가에 파급). 특히 사고영향의 장기화 및 정신적 공황유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예방이 최선이며 초기의 신속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원자력방재체제 구축 위해 「원자력방재대책법」 제정

정부는 원자력 재해의 특수성과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완벽한 국가 방사능방재체제를 구축하며, 원자력 시설에 대한 대테러·사보타주 방지 등 시설방호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재난관리법을 기반으로 한 국가 재난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방사능 재난의 특수성과 그 간의 운영경험을 반영하여 재난관리법의 미비점을 추가로 보완한 방사능 재난관리 특별법 성격의 법률이다. 국가 원자력방재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국가 방사능방재체제 구축

방사선 비상은 사고의 정도 및 상황에 따라 백색비상, 청색비상 및 적색비상으로 구분한다. 비상등급의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은 과학기술부가 고시할 예정인바, 크게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때가 백색비상, 원자력시설 부지 내 국한될 때가 청색비상 그리고 원자력시설 밖으로 미칠 것이 예상되는 때가 적색비상이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청색비상 중 방사선 비상은 사고 정도와 상황이 방사능 재난의 선포기준에 해당하여 방사능 재난을 선포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방사능중앙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방사능 방재를 총괄 조정하는 방사능중앙대책본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11개 부처 차관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원자력의학원장 등을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사능중앙대책본부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구성되어 방사능으로부터 주변지역 주민 보호와 환경보전 등 방사능 재해 대책을 조정한다. 방사능중앙대책본부장은 현장지휘센터, 기술지원본부, 의료지원본부를 지휘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지역 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구성된다. 즉 지자체장은 방사능 재난의 통보를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시·도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게 되며 본부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방사능 재난의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소속하에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를 둔다.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는 방사능 재난의 수습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지원하게 되는데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군부대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한다.

방사능 재난시 원자력의학원 내에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가 구성·운영된다.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는 현장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휘하게 된다.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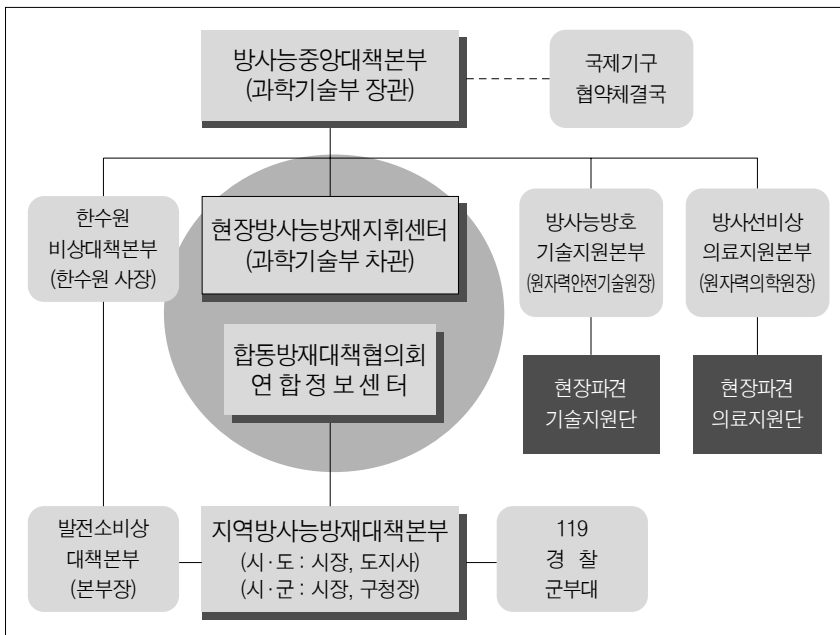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다. 평소에 잘 준비하고 대비

하면 미래에 우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사능 방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법에서도 평소에 잘 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사업자가 미리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방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사업자·정부·주민·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을 재난관리법상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을 해당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게 10월 15일까지 시달하며, 지자체장은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에 따라 해당지역의 방사능 재난 등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도 방사능방재계획과 시·군·구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원자력사업자는 자체 방사선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림> 국가 방사능방재 조직도



또한 평상시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여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방사능 방재훈련은 관계 중앙행정기·지자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연합훈련(매 5년) 지자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훈련(매 4년), 발전소 비상조직이 참여하는 전체훈련(매 1회) 등이 있다. 훈련을 실시한 후 자체평가 결과와 시정 조치계획을 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방재대책법은 국가 방사능방재체제 구축,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법령 제정과 아울러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기관·지자체·사업자·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 구축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로 인하여 방사능이 누출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방사성동위원소 업체의 작업중 방사선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사선 환자의 경우 여타 환자와는 달리 방사선 오염 부위를 씻는 것 등 특별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방사선 사고 환자에 대한 전문 진료,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의학원에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2002년에 설립하였다.

방사선비상진료센터는 전국에 권역별 10개 대형 병원을 2차방사선비상진료병원으로 지정하고, 시·도립 병원 및 원자력발전소 주변 보건소, 방사성동위원소 산업체 밀집지역의 보건소 등 약 50개 병원을 1차방사선비상진료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사선비상진료병원에 대해서는 응급대응능력과 진료수준 제고를 위한 필요 시설 및 장비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적극 지원 육성할 계획이다.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 건설

방사능 사고시 초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 주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사태의 적절한 해결을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원자력시설이 인접한 지역(8~10km)에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하고 방사능 재난시 과학기술부와 행정자치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에서 관계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방재지휘센터장은 방사능 재난 수습의 책임을 지며 관계부처

과건관과 협의하여 주민 대피, 소개, 음식물 섭취 제한,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등 긴급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방사능 재난 등이 발생한 지역 안의 식품품과 음료품, 농·축·수산물의 반출 또는 소비통제 등을 결정한다. 특히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에는 방사능 재난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필요한 보도자료의 제공 및 주민홍보를 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4곳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건설중에 있다. 2004년 월성 방재지휘센터, 2005년 울진 방재지휘센터 그리고 2006년에 고리·영광 방재지휘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다. 방재지휘센터에는 방사능 사고시 효율적인 지휘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최첨단 통신시설뿐만 아니라 관련 재난장비도 갖추고 또 사업자의 재난대비 시설이 함께 소재하도록 하여 유기적으로 사고에 대처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원자력분야가 아닌 곳에서의 대형사고와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국가 재난관리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 방사능방재체제의 구축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법령 제정과 아울러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사업자·주민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상에 있는 국가 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 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연차적 건설, 방재 훈련의 내실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이다. ■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



임종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보건산업은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 5개 분야를 통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국가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산업 중 하나였지만 그동안 산업으로서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바이오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면서 정보화혁명 이후 바이오혁명이 차세대 산업의 주류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들이 보편화되면서, 보건산업이 그 중심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규모는 2002년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 분야가 38조원, 가공식품 분야가 35조원, 의약품 분야가 9조원을 포함하여 약 88조원 정도로 GDP의 14.8%에 이른다. 이들 산업 분야의 매출액이 1억원 증가시 고용유발효과는 의료기기산업이 4.5명, 식품산업이 3.6명, 의료서비스산업이 2.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2.2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용유발효과가 큰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보건산업, 전반적으로 영세해

우리나라는 2003년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신약을 개발하여 세계에서 11번째로 신약개발국가로 등록을 하는 등 일부 기술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대표기업 매출액이 세계일류기업 매출액의 1~8% 수준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2년 한 해 동안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수출규모는 31억5천만달러였으나, 수입은 65억 달러로 연간 33억5천만달러의 무역역조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보건산업의 영세성과 무역역조현상은 연구개발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은 제품 개발을 위한 R&D비용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 1개 기업의 R&D비용이 40억달러(4조8천억원)에 이르는 반면, 보건산업과 관련해 국가가 투자하는 R&D비용이 5,126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 우리 보건산업의 현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은 물론 새로운 개념의 질병치료방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될수록 각종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보건산업의 성장 가능

정부는 5대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 단체장 및 산업계 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보건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각 산업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은 매우 높다.

또한 보건산업 분야는 BT·IT·NT 등 새로운 융합 기술이 출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벤처형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산업이다. 의약품의 경우 기존의 화합합성을 통한 신약 개발에서 BT기술을 활용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개발로 전환되고 있으며, 각종 생체계측기와 진단용 바이오칩의 개발 등이 새로운 기술개발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인간의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성공하면서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우리나라로 집중되었듯이, 보건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인력의 지적능력 및 창의성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선도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미 2003년에 정부가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면서 ‘바이오신약·장기’ 분야가 만장일치로 선정된 점에서 보건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할 수 있다.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건의료정책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인체에 문제가 없다는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규제가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간주되어 왔다. 사실, 아직까지도 각종 먹거리와 의약품의 부작용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규제 중심의 정책과 법 집행의 기본방향이 쉽게 포기될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안전성 확보와 보건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을 분리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이제는 국가경제 수준과 국민개인의 위생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규제 중심으로 집행되고 있는 법령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문제와 산업육성을 위한 법령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산업육성 분야에서는 기업체와 보건의료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보건산업이 국민건강 수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규제의 합리화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국민건강권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다는 점은 전제하면서도 산업체에서는 현행 법령체계가 이러한 분야에 한정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항상 제기하고 있다. 즉, 위생수준과 안전문제는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어야 되겠지만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문제까지도 규제함으로써 기업측에서는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는 제품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안전문제와 품질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는 없겠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관련법령을 재검토하여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는 보다 철저하게 규제하되 규제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 된다

고 판단하고, 정부는 규제를 보다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선진국은 식품과 화장품 등의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기업이 생존할 수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전략제품의 육성

어떤 산업 분야에서 모든 제품이 우위를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며 보건산업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보건산업의 기술수준이 많은 부분 선진국에 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제품을 개발해내는 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되며 정부는 기업이 전략제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제품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2004년부터 연구개발비 지원방식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제품화와 실용화를 위한 분야만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되며, 그 규모도 과제당 연간 5억원 내지 10억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R&D비용의 총규모가 작기 때문에 산업체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총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식품과 화장품 분야의 신제품 개발시에는 그 효능을 증명할 수 있는 임상시험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주는 기관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산업체에서는 임상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정부도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해외시장정보 제공

보건산업체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 공통

적으로 호소하는 점은 해외시장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해외시장에서의 각 국가별 규제내용의 파악이나 인·허가업무의 대행, 수출대상 국가의 국민들이 선호하는 제품유형 등 각종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는 각 개별기업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하여 수출진흥 및 통상협력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9명의 인력으로 이러한 요구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업무 분야를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체가 요구하는 해외시장에 관한 종합정보제공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정부는 5대 보건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산업 발전협의회'를 관련 단체장 및 산업계 대표로 구성하였으며, 그 산하에 5개의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각 산업별로 일선현장을 중심으로 대상과제 선정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을 가졌으며, 산업별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선정된 대상과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고,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개괄적인 정책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마친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각 산업별로 대상과제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그 중요 분야는 앞서 제기한 규제의 합리화방안, 전략제품의 육성방안, 효율적인 해외시장정보 제공방안 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이러한 계획을 부분적으로 마련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만큼 대대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적은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보건산업 육성대책 마련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OECD 농업정책 논의 동향

- 농업정책의 생산비연계성 분석을 중심으로 -

OECD에서 농업에 관한 논의의 큰 방향은 각국의 농업정책결정자가 당면하는 관심사항을 반영하는 농업각료회의에서 정해지며, 현재의 농업논의는 1998년 3월에 개최된 농업각료회의에서 합의한 각료선언문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각료선언문에서는 농식품산업이 시장신호에 반응하면서 다자무역체제에 더욱 통합이 되어야 하며, 아울러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을 통해 농촌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을 각국 농업이 지향해야 할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김대근
駐OECD대표부 1등서기관

농업정책의 생산비연계성 분석의 의의

OECD에서 농업정책의 생산비연계(decoupling) 정도에 대한 논의는 전자의 다자무역체제에 통합을 강조하는 유형 중 하나로 1999년부터 작업을 시작

하여 2000년에 생산비연계의 개념분석, 2001~2003년 생산비연계 관련 실증분석, 잠정적 정책합의를 도출한 데 이어, 2004년에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추진중에 있다.

농업정책의 생산비연계성에 대한 연구는 각국이 실행중인 각종 농업정책이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작업으

로서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이 증대되고, 회원국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선, 회원국의 장기적인 농업정책 개혁을 위한 각종 농업정책 수단 선택에 관한 지침 제공 필요성이다. 1998년 각료선언문에서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수단은 목표지향적(targeting)으로 이루어지고 가능한 한 생산과 교역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UR협상 이후 각국이 도입한 생산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직접지불정책을 포함하여 정책유형별 생산비연계 정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견이며, 駐OECD대표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의 생산비면계성에 대한 연구는 각국이 실행중인 각종 농업정책이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작업이다.

여 회원국들에게 바람직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한편,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기여라는 OECD 역할 측면에서 현재 진행중인 농업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허용보조(Green Box)에 대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공 필요성이다. 즉, UR협상 이후 대부분의 나라가 감축대상보조(Amber Box)에서 허용보조로 전환해 나가는 추세이나, WTO 규정상의 허용보조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왜곡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농산물수출국의 비판이 심하게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서 OECD가 선행연구를 함으로써 DDA 협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OECD에서 분석한 각종 농업정책의 잠재적 생산영향 메커니즘, 주요국 농업정책의 생산비면계 정도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농업위원회에서의 논의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농업정책의 생산·교역 영향 메커니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농업정책의 개념은 UR협상이 진행될 때 논의된 바 있으며, 주로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농가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정책수단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개념은 정부의 농업보조로 생산요소가격이나 생산물의 상대적 가격에 변화를 가져와 생산에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도 생산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바, OECD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잠재적 경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상대가격의 변화가 생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상대가격효과) 외에 농가가 직면하는 소득 또는 가격 불안정 등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경우의 생산효과(위험관련 효과), 미래에 대한 정책기대 등이 현재의 생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경우의 생산효과(동태적 효과)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기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동시에 누적적으로 일어난다.

먼저, 상대가격효과에 의한 생산영향(Relative Price Effect)은 시행된 정책이 대상품목의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쳐 생산과 무역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입재사용기준 지불(Payment based on input)과 경작면적기준 지불(Payment based on area)은 투입재 및 농지의 가격 변화를 초래하여 생산과 교역에 영향을 초래한다.

둘째, 위험관련 효과에 의한 생산영향(Risk-Related Effect)은 농민은 기상여건 등에 따른 농가의 소득 및 가격 불안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생산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민은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적(Risk-Averse)인 행위를 하므로, 농업지원정책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위험수준(소득·가격 불안정)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생산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보험효과(Insurance Effect)와 부의효과(Wealth Effect)가 있다.

정부지원으로 농가의 부(Wealth)가 증대되고 부의 증가에 따라 위험에 대한 선호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부의 증가에 따라 위험회피 정도가 감소하는 농민의 경우(DARA : Decreasing Absolute Risk Aversion), 즉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생산을 하게 되므로 정부지원정책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생산증가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동태적 효과에 의한 생산영향(Dynamic Effect)은 현실세계에서 농민들의 생산결정은 현재의 생산결정이 미래의 생산결정이나 이익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를 고려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투자증가나 미래에 대한 정책의 기대로 현재의 생산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농민은 자본시장이 불안전경쟁시장일 때, 즉 자본투입재를 다른 곳에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농업정책으로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농업에 재투자하여 다음해에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투자효과).

정부의 농업지원정책은 특정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몇 년 주기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정책설계·조정방식이 향후 정책변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농민의 기대에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기대효과).

주요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OECD는 주요 회원국이 실행하고 있는 현행 농업정책의 생산 및 교역 영향에 대해 2001~03년에 걸쳐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회원국 농업분야 대표가 참석하는 농업위원회(Committee for Agriculture) 및 산하 각종 작업반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고서로 공개했다.

지금까지 작업한 실증분석 보고서는 ① PEM(Policy Evaluation Matrix : 정책평가행렬) 모델을 통한 작물지원정책의 상대가격 변화 ②주요 OECD 회원국 대상 생산자 지지추정치(PSE)에 포함된 곡물정책의 위험관련 효과 ③공동농업정책(CAP)상의 곡물정책의 위험관련 효과 ④생산제한하의 EU 곡물정책의 상대가격 변화 ⑤미국 농업법상의 농업정책이 생산면적에 미치는 영향 ⑥스페인 작물보험보조가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6가지이다.

OECD는 이상의 6가지의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정책의 생산영향에 대한 잠정적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농가가 직면하는 수입변동성(Revenue Variability)과 같은 위험을 줄이는 대부분의 농업정책은 생산을 증대시키고 제3국 생산자에게는 위

험을 증대시키므로, 생산비연계정책 설계시 그 정책이 가져다주는 위험관련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격안정효과가 큰 경기상쇄적인 정책조치(Counter-Cyclical Measures)는 농가의 소득불안정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켜 생산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고, 현재 시장조건에 기초한 지원정책은 수입변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생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임시방편적인 정책지원(Ad Hoc Policy)은 미래의 정책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여 잠재적인 생산증가를 초래한다.

④모든 농업특정적 지원정책은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며, 영향 정도는 생산자의 생산과 생산품목에 대한 선택의 폭이 클 경우 일반적으로 작아지며,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정책일수록 소득이전 효율성이 높아진다.

⑤생산효과의 크기는 정책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비록 생산과 연계가 덜 되었다더라도 지원규모가 클 경우 생산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으며, 초기지원이 낮은 상태에서 지원규모를 높일 경우가 현재의 높은 수준의 지원에서 지원규모를 높인 것보다 생산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시장가격지지에서 경작면적기준 지불(특히, 경작지 사용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지원)로 전환하는 것이 소득의 이전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무역왜곡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재확인되었으며, 단순한 상대가격효과만을 비교했을 때보다는 위험관련 효과와 투자 및 미래기대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경우 서로 다른 정책수단 간의 생산비연계 정도의 차이는 더 작아진다고 볼 수 있다.

OECD 분석결과에 대한 회원국 반응

이상의 제시결과는, 그동안 WTO에서 허용보조로 분류되었던 대부분의 정책조치가 사실상 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시되고,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 허용보조의 기준강화 수단 등으로 제

OECD의 농업정책의 생산비연계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우리의 농업정책 수단 선택시 가급적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목표지향성을 강화하는 등 이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허용보조로 농업정책을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 국가의 농업정책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국내보조를 허용보조로 전환하고 있는 미국·EU 등과 시장가격지지가 상대적으로 큰 농산물수입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 분석결과 보고서의 공개승인을 반대하는 반면, 국내보조가 적은 호주·뉴질랜드 등 일부국가는 공개승인을 지지하는 등 국내보조가 많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분석결과 보고서의 공개승인을 놓고 격심하게 대립하였다.

사무국은 2002년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APM)에서 공개목표로 추진하였나 회원국들의 반대로 두 차례의 보고서 수정을 거쳐 논의하다가, 결국 지난해 12월 농업위원회에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추가수렴 후 보고서를 재수정, 올해 5월 작업반회의에서 공개승인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농업정책 추진관련 시사점

WTO 농업협정은 농업여건과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광범위한 이해관계국간의 타협의 산물이고 OECD의 분석결과도 대부분이 무수한 가정을 토대로 한 제한적 사례 분석결과를 일반화한 점을 고려할 때, OECD에서의 생산비연계(decoupling)에 대한 분석결과가 WTO 규정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업지원의 소득이전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과 교역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지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농업정책 수단의 개발적용이 장기적인 농업정책 개혁방향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분석결과는 장기적인 우리 농업정책 수립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고 WTO 농업협상에서 국내보조 개혁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의 현재까지 연구결과는 DDA 농업협상의 국내보조 개혁논의에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먼저,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지원이라도 지원규모가 커질 경우 생산왜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보조에 해당하는 지원정책의 상한규모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시켜 주고, 허용보조 대상정책의 기본요건인 최소한의 왜곡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로 많은 나라가 실제로 생산과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허용보조를 통보하고 있으므로 허용보조의 개념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며, 각종 지원이 정책목적에 맞게 목표지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이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지원 목적에 맞게 지원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등 목적에 상응한 정책수단(targeting)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한편, 우리 농업정책 개혁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가격지지에서 다양한 직접지불체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농정전환과정에서 각종 농업정책 수단 선택시 좀더 우리의 농업여건을 고려하면서 가급적 생산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목표지향성을 강화하는 등 이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아울러 OECD 논의에서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 등의 노력으로 인식이 확산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추가작업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정책수단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싱가포르 이슈 논의 동향

싱가포르 이슈 (Singapore Issues)란 투자·경쟁정책·무역원활화·정부조달투명성 등 4개 이슈를 지칭한다. 이러한 싱가포르 이슈 4개 모두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어, 이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의 필요성이 집중하고 있다.



박종한
駐제네바대표부 2등서기관

싱가포르 이슈 논의 배경

투자의 경우 FDI 통계(유입기준)를 참고하면, 1990년 전세계적으로 2,030억달러이던 것이 2001년에는 이의 3배가 넘는 7,350억달러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재 양자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숫자도 2,100여 개에 이른다.

경쟁정책 분야에서도 국제규범의 필요성이 여러 차원에서 확인되고 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탄

소전극봉·라이신·비타민 등 분야에서 국제적인 카르텔이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은 공정한 경쟁이 확보되었을 경우보다 20~40% 높은 가격을 지불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의 주요 대상인 세관행정분야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1회의 무역행위에는 20~30명의

당사자, 40개의 문서, 200여건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 정보 중 30여건은 최소한 30여회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각국 GDP의 10%를 다소 상회한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GATT의 내국민 대우원칙 제외 대상이어서 국제무역의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어떤 이슈들은 이미 WTO 체제 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투자와 같은 경우는 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에 대한 별도 협정이

◇이 글은 필자의 개인 의견이며, 駐제네바대표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이슈란 투자, 경쟁 정책, 무역원활화 그리고 정부조달 투명성 등 4개 이슈를 지칭한다.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이견 대립으로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고, 현재도 협상전망은 불투명하다.

있다. 무역원활화는 GATT 5조·8조·10조에 기본적인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조달은 정부조달 협정이라는 일부 WTO 회원국만 참여하는 복수국 간 협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재 무역현실을 가능하면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어 이들 분야에 대한 무역규범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WTO 회원국들은 1996년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WTO 의제로서 이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는 2001년 11월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제5차 각료회의시 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자는 약속으로 이어졌다.

칸쿤 각료회의까지의 논의 동향

2002년 3월부터 이미 싱가포르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작업반 및 WTO 해당기구에서 제5차 각료회의인 칸쿤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각 의제별로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과 선진국들은 각 분야의 협상이 5차 각료회의 이후 개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전제에 대해서부터 의견이 달랐으며,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이러한 이견이 해소되지는 못했다. 즉 개도국들은 아직 이러한 분야에서 개도국의 이행능력이 부족하고 이러한 이슈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므로 DDA 협상에서 다자적 규

범이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협상세부원칙에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국은 1996년부터 이슈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도하 각료회의에서 5차 각료회의 이후 협상을 개시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투자는 칸쿤 각료회의 전까지 6차의 공식회의를 갖고 투자의 정의 및 범위, 설립前 단계에서의 양허 방식, 개발목적의 예외, 분쟁해결절차의 도입 등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도국들은 투자와 관련된 개도국 정책수단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범위한 개도국 우대를 요구하였으며, 선진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위반 여부를 제기할 수 있는 협정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은 2003년 상반기까지 5차례의 공식회의를 갖고 경성카르텔, 무차별원칙,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투자와 마찬가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로 실질 의제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보다는 협상개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정부조달투명성도 2003년 상반기까지 5차례의 공식회의를 통해 정부조달의 정의 및 범위, 주요 원칙 그리고 WTO 분쟁해결절차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선진국이 일부 시장접근 의제를 제외한 광범위한 이슈에 대한 규범을 요구한 반면, 개도국은 극소수 투명성 관련 제안만 포함하는 느슨한 형태의 선언을 선호하여 이견이 지속되었다.

무역원활화는 그 기본원칙이 GATT 5조·8조·10조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중심으로 개선사항 및 추가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제안한 다양한 세관행정 간소화 방안에 대해 대폭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고, 이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구속적인 규범 도입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3년 6월경부터는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을

출범시키기 위한 세부원칙을 작성하기 위해 작업반 논의를 마치고 고위급에서 비공식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협상개시에 반대하는 개도국들과 협상개시를 주장하는 선진국 및 일부 개도국들의 입장차로 인해 칸쿤 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다. 농업이나 비농산물 등 DDA 여타 이슈에 대해서도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칸쿤 각료회의는 2003년 12월 15일 WTO 일반이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 다라고만 정하고 종료하고 말았다.

칸쿤 각료회의시 각료선언문 최종안은 각료회의 의장이었던 멕시코 통상장관의 이름을 따 데르베즈 텍스트(Derbez Text)라고 불리는데, 결국 이 안도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 안에는 ①개도국의 협상개시에 대한 반발이 가장 작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무역원활화와 정부조달투명성은 협상을 개시하고 ②개도국의 반발이 가장 강했던 투자는 농업·비농산물 등의 협상세부원칙 채택시점과 같은 시점에 협상 세부원칙을 결정하며 ③경쟁은 농업, 비농산물 협상세부원칙 채택시점과 같은 시점에 WTO 일반이사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칸쿤 회의 최종말미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라미(Lamy) 집행위원이 싱가포르 이슈 중 일부(투자 및 경쟁)를 의제에서 '제외(drop)'할 것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최근 논의 동향

칸쿤 각료회의 이후 두 달여간 DDA 논의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이슈 작업반도 활동을 멈추고 있었다. 칸쿤 각료회의 종료시 새로 설정한 합의시한인 2003년 12월 15일이 다가오자 일반이사회 의장(Perez del Castillo)은 회원국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하였다. 카스띠요 의장의 안은 2+2 방식으로 무역원활화와 정부조달투명성은 협상을 개시하고, 투자 및 경쟁은 작업반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었다. 하

우리는 對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규범 확보 차원에서 싱가포르 이슈의 다자규범화를 지지해 왔다. 협상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프렌즈 국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만 싱가포르 이슈를 포함한 전체 DDA 협상 패키지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1월 쥘릭(Zoellick) 미국무역대표(USTR)는 WTO 회원국 통상장관에게 서한을 송부하여, 향후 DDA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서 쥘릭은 무역원활화만 협상을 추진하고, 정부조달투명성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며, 투자와 경쟁은 논의에서 제외하거나 연구계획을 수립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쥘릭의 서한으로 다시 논의가 촉발되었고, 유럽연합의 라미 집행위원과 쥘릭도 다양한 양자활동 등을 통해 DDA 협상의 모멘텀을 다시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재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여 제네바에서는 2004년 7월말까지 DDA 협상의 진전에 필요한 중요한 기본골격(Framework)을 합의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유럽연합의 라미 집행위원은 미국과는 달리 무역원활화뿐 아니라 정부조달투명성도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투자와 경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국가끼리 협상을 추진하여 일부 WTO 회원국만 참여하는 복수국간 협정으로 WTO 협정에 편입시키자는 제안을 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국가 및 일부 개도국(인도와 말레이시아 등)은 무역원활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의제를 WTO 의제에서 완전히 삭제하자는 주장을 2003년 12월 15일 일반이사회에서 밝힌 바 있는데, 이후 비

공식 협의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당초 싱가포르 이슈의 다자규범화를 지지하던 국가 그룹인 싱가포르 이슈 프렌즈(Friends) 국가들(일본·스위스·노르웨이·한국·대만·코스타리카)은 개도국들의 우려를 감안하여 싱가포르 이슈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협상을 개시하는 것(unbundling)을 고려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으며, 필요한 신축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협상 전망 및 우리 입장

결국 다양한 움직임과 입장이 협상무대에 등장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그룹과 인도 및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은 아무런 입장변화 없이 싱가포르 이슈의 협상개시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싱가포르 이슈와 관련해서 협상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우선 올해 7월말까지 DDA 전체 패키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 싱가포르 이슈 논의 진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얼마나 신축성을 발휘할지 그리고 싱가포르 이슈 프렌즈 국가들이 어떤 전략으로 어떤 안을 가지고 대응할지, 유럽연합은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등도 큰 변수이다. 따라서 결국 협상의 최종단계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기업의 대외 진출, 특히 對개도국 시장 진출을 위한 안정적인 국제규범 확보라는 대전제 하에 싱가포르 이슈의 다자규범화를 지지해 왔다. 하지만 싱가포르 이슈의 미래가 불투명한 지금 자칫하면 이를 강하게 주장할 경우 DDA 전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으며, 싱가포르 이슈를 영원히 WTO 의제에서 제외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프렌즈 국가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용 어 해 설

헤지펀드(hedge fund)

'헤지펀드'라는 말은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위험을 회피하는 펀드'라는 의미로, '고위험=고수익' 원칙에 따라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를 통해 자금을 투기적으로 운용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들은 막강한 정보 수집력을 바탕으로 주로 파산 직전의 기업이나 금융시장이 불안한 개도국 시장을 투자대상으로 삼는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거액 투자자들에 의해 투기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자산증식을 원하는 대다수

소액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수단으로 활용하는 뮤추얼 펀드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지 소로스의 퀴텀펀드나 줄리안 로버트슨의 타이거펀드 등이 대표적인 헤지펀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9월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남아메리카와 동유럽 등 투자 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신흥시장에 집중 투자하는 헤지펀드가 최초로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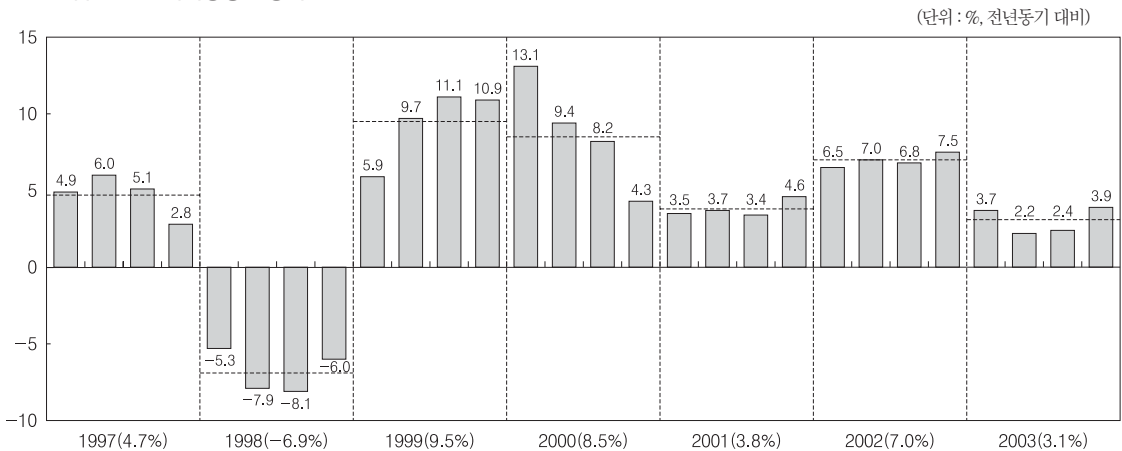
수출급증과 내수부진 양극화 속 물가불안 보이는 국내경기

지 난해 우리 경제는 2002년 7.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중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수출이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설비투자 등 내수 부문이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내수의 성장 기여율이 2002년의 57.3%에서 지난해에는 1.8%로 크게 낮아진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빨라

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중국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수출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사정도 점차 나아지는 모습으로 취업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관련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내수는 당초 예상보다는 지극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그림 1〉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주: 그림의 가로축 점선과 괄호 안은 각 연도의 평균 GDP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4. 3. 23

최근 우리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빨라진 세계경제의 회복세와 중국경제의 호황에 힘입어 수출급증세가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고용사정도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내수가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를 보여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주 느리면서도 완만한 정도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 내수업종으로 구성된 서비스업 활동도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이처럼 수출산업 주도의 산업활동은 활기를 띠는 반면에 내수는 회복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대규모의 흑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9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매월 20~30억달러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급증 및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온 세계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달러화 가치하락이 달러화로 표시된 국제 원자재가격의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점차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대세 상승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및 외국인 주식자금의 꾸준한 유입으로 원/달러환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금리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국내외 정책금리의 변동이 없음에 따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소 비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소비는 1.4%의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소비는 2002년에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2년 4/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을 크게 밀돌고 있다.

지난해 민간소비의 부진은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하락과 2002년 이후 발생한 신용불량자의 급증에 따른 정부의 가계신용부실 억제대책으로 그동안 소비에 큰 힘이 되어오던 신용카드사용 및 가

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가계의 구매능력이 떨어지고 국제정세 불안이 가중되어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 원인이 있었다. 지난해 민간소비는 2/4분기 이후 감소 폭이 확대되어 왔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을 통해 소비를 주도해온 청년층과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 정책으로 50대 이상의 이자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이들을 중심으로 소비위축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비와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도소매판매와 내수용소비재출하 등 월별 소비동향관련 지표들의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미약하나마 개선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소비를 잘 반영하는 도소매판매지수의 경우 올해 1~2월중 아직 마이너스이기는 하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고 내수용소비재출하도 지난해 1/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 폭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소비증가율이 지난해의 감소세를 벗어나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부진의 주요 요인이었던 가계신용의 조정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으로 고용사정이 개선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반기에는 완만하게 하반기에는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 자

최근 설비투자는 설비투자관련 지표들의 감소세가 둔화되거나 증가로 반전하는 등 설비투자가 극심한 부

진에서는 완만하게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건설투자는 건설기성액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선행지표들의 감소세도 확대되고 있어 건설경기의 둔화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

건설투자는 지난해 연간 7.6% 증가하면서 수출과 더불어 극심한 내수부진을 상쇄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특히 저금리와 증시불안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풍부한 시중자금들이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던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건설경기의 호황을 이끌었다.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투기과열을 우려한 9.5 재건축안정대책과 10.29 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으로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어 따라 4/4분기 이후 건설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올해 1~2월중에는 건설투자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설기성액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선행지표들도 감소세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건설경기의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1~2월중 민간부문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9.4% 감소하여 2001년 1/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하였고, 건축허가면적 또한 상업용 및 주거용의 감소로 지난 4/4분기에 비해 감소세가 확대되었다.

올해 건설투자는 부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급증세를 보여 왔던 민간건설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정부의 SOC 관련 예산감소로 공공건설도 큰 기대를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3년의 건설투자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반락과 정부의 부동산관련 규제 강화의 영향 등으로 연간 1% 내외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의 건설투자는 가능할 전망이다.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고용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설비투자의 GDP 비중은 지난 1998년에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0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로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하여 왔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연간 1.5%의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데에 원인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4/4분기중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와 계절조정 전기비가 각각 -2.4%와 4.3%로 나타나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설비투자관련 지표들은 극심한 부진에서 완만하게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설비투자추계는 지난해 3/4분기(-7.0%)에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 후 4/4분기(-4.6%)에 감소세가 둔화되었고 올 1~2월중에는 0.4%의 감소로 하락 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또한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공공부문의 증가세가 확대되어 동 기간에 12.8% 증가하였다. 향후 설비투자의 진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설비투자압력의 추이(제조업생산지수 증가율-제조업생산능력지수 증가율)를 살펴보면 지난해 2/4분기를 저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설비투자가 상황조정 압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은 수출증가와 가동률 상승, 지난해에 중첩적으로 발생했던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에 따라 10% 내외의 증가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의 회복국면은 상반기에 완만히 진행되고, 하반기에 경기회복의 가시화로 인해 회복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

수출은 지난해 3/4분기 이후의 지속적인 증가세가

올 들어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1% 상승하여 동 기간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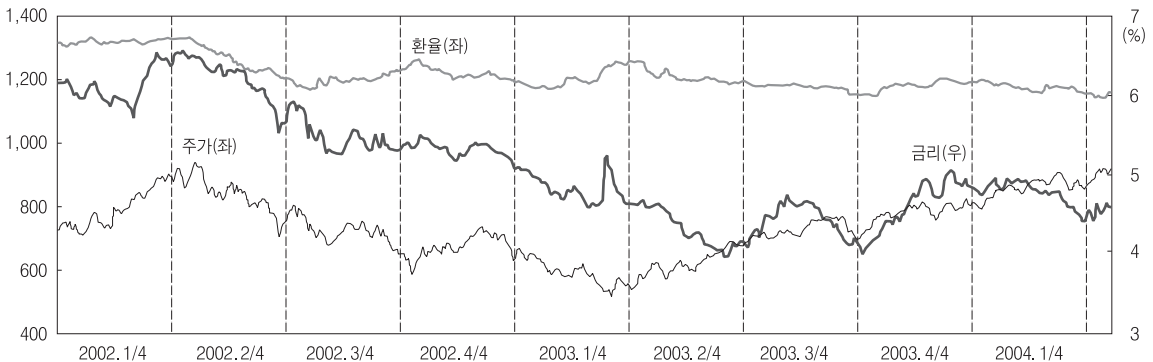
유지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더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25.6%에 이어 올해 들어 3월까지 38.9%의 급증세를 보이며 당초 전망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의 회복 및 중국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IT 관련 제품은 가격상승과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증가로 40% 이상 급신장세를 기록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도 對중국 수출이 전체 수출증가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일본·EU·ASEAN 등 모든 주요 수출시장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1/4분기 무역수지(통관기준)는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급증으로 매일 2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며 불과 3개월 만에 72.1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중이다. 여기에 국내수출에 선행성을 보이고 있는 OECD경기선행지수도 지난해 5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경기의 호조세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최근 국내 경제전망기관들도 잇달아 수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4년 1/4분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26% 내외, 수입은 수출호조·내수회복·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25%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의 222억달러에서 290억달러 내외로 크게 확대되고, 경상수지 흑자는 원/달러환율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123억달러를 오히려 상회하는 160억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에 위협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정세 불안이 지속되거나 국제테러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어 우리 경제의 수출호조세가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급등한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해 수출차질이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환율·금리·주가 추이



주: 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사용함.
자료: 한국은행

물 가

지난해 말부터 국제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국내수요 부진으로 수요측면보다는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비용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올 들어 국제 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4.1% 상승하여 동 기간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3.2%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물가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결국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수요 부진으로 당장은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은 무시될 수 있을지 모르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는 하반기에는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점차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물가안정 요인으로는 환율하락을 들 수 있다. 당초 예상대로 원/달러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원화로 표시한 수입원자재나 중간재 가격의 하락은 물가의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유가와 원자재가격이 안정된다면 연초의 일시적 물가상승 요인은 상당부분 해소될 여지도 남아 있다.

금융시장

주가는 수출호조세 및 경기회복 기대감, 외국인 주식순매수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며, 금리는 하향안정세, 원/달러환율은 대세 하락이 유지되었으나 미국의 정책금리 조기 인상론이 확산되면서 향후 금리와 환율의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주 가

주가는 연초 821선으로 출발하여 월평균 1월 845.5, 2월 867.4, 3월 875.5선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4월 20일 현재는 918선으로 지난 12월말(811) 대비 13.2% 상승한 상태다. 이

와 같이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세는 국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등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매수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외국인의 거래소 상장주식 보유비중은 지난해 말 40.1%에서 2004년 3월말 현재 시가총액 기준 168.6조원, 보유비중으로는 43.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의 증가는 우리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원화가치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기관 투자자와 개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 리

금리(3년만기 국고채)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6월 중순 사상최저 수준인 3.95%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국내 경기상황의 변동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며 12월에는 5%까지 상승하였다. 올해 들어 금리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미국의 저금리 기조 유지의 영향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 왔다.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1월말 4.94%, 2월말 4.78%, 3월말 4.50%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었다. 한편 국제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는 1958년 이후 가장 낮은 1%의 최저치를 기록중인데, 이는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고, 고용상황의 개선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지역의 부진한 경기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하였으나, 4월 1일 정책금리를 현행수준인 2%로 동결하였다.

그러나 4월 중순 이후 미국 중앙은행 Fed의 금리 조기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3월 들어 미국의 비농가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와 소매판매 등의 실적도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는 등 경기회복의 징후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 대비 0.5% 상승하여 경기·고용·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리변화에 대한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리는 4월 20일 현재 4.58%로 시중에서는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폭과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환 율

원/달러환율은 2003년에 연평균 1,191.6원을 기록하여 전년도에 비해 5% 원화 가치가 상승하였다.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와 재정수지 적자로 대변되는 쌍둥이 적자로 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기조와 함께 수출호조에 따른 국내로의 달러공급이 증가하고 국내 주식시장으로의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입에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원/달러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과 엔/달러환율의 변화에 따라 다소간의 등락은 있으나 추세적인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매월 2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들에 의한 주식순매수세가 지속되는 등 외환시장의 공급우위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환율은 1월 1,184원, 2월 1,167원, 3월중에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시적으로 1,180원까지 급등하기는 하였으나 월평균 1,167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4월 들어 원/달러환율은 더욱 하락하여 1,140원대에서 움직여 왔으나, 최근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확산되면서 4월 19일과 20일에는 다소 상승한 1,160.3원을 보였다. 이렇듯 미국의 잇따른 경제지표의 호전으로 정책금리의 조기 인상론이 확산되면서 일부 외환전문가들은 지난 2년 이상 이어져온 달러화 약세행진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이 더딘 EU지역의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공급 우위와 경제 펀더멘털의 개선이 지속되고 있어 원화 강세의 요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경 기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급증세 지속에 따라 생산·출하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등 경기관련 지표들 역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생산은 1~2월중 수출의 높은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0.5%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고, 제조업가동률도 82.0%를 기록하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생산·재고 순환을 통해 살펴보다라도 생산증가세가 확대되고 재고증가세가 둔화되는 전형적인 경기회복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및 IT산업이 경기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산증가로 1/4분기중 취업자수는 지난해의 정체수준에서 벗어나 크게 증가하고 실업률(계절조정)도 4/4분기 대비 소폭 하락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내수업종인 서비스생산은 1~2월중 전년동기 대비 0.0%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특히 서비스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의 부진이 두드러져 수출과 내수업종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수출호조와는 달리 내수부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국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3월중 소비자평가지수 및 소비자기대지수는 각각 68.5와 94.4로서 지난 1월 이후 감소세를 보여, 지난해 10월부터 개선되고 있던 소비심리가 최근 다시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급증세로 경상수지의 흑자 폭이 늘고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회복은 지극히 완만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세로 물가불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김윤기 KDI 거시경제팀 주임연구원〉

이 글은 정부 및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경제정책자료·통계자료·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회복세 심화되는 세계경기

올

해 들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심화 및 확산되면서 지난해 성장률인 3.9%보다 높은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지난해 9월의 전망치 4.0%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지난해 3.1% 성장한 미국경제는 현재 소비·수출·투자 등이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IMF는 올 미국경제가 4.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9월의 전망치보다 3.9%보다 높은 수준이다. Global Insight도 올 미국경제가 4.7%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본경제는 올해 들어 해외수요의 확대로 수출 및 생산 증가와 설비투자 회복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IMF는 올 일본경제가 지난해(2.7%)보다 높은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9월의 예상치 1.5%에서 큰 폭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한편, 유로지역은 지난해 0.4%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수출이 부진하고 소비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는 올 유로경제가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은 1.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여 회복세에 무게를 실었다. EU와 Global Insight도 올 유로

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경제는 현재 수출과 투자의 확대, 소비의 견실한 증가를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당국의 투자억제 정책으로 지난해 9.1%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MF는 올 중국경제를 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경기과열의 진정을 위하여 긴축적 거시경제 정책과 위안화 강제 허용을 권고하였다.

미국 달러화 강세

미국경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 달러화가는 올 2월 중순 이후 강세로 반전되었다. 이후 3월중 달러화가는 유로화에 대하여는 강세를 지속하였으나, 엔화에 대하여는 약세로 반전되어 다소 혼조된 모습이었다. 달러 대비 유로화가는 올 2월 12일 사상최고치인 0.78유로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약세를 지속하여 4월 21일 현재 0.845유로로 최고치 대비 8% 정도 하락하였다.

그러나 달러화 대비 엔화가는 일본의 외환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는 가운데 2월 12일 105.4엔에서 3월 5일 112.1엔으로 6% 하락하였으나 다시 강세로 반전되어 4월 1일 103.7엔까지 7% 상승하였다. 이는 일본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시장

최근 세계경기가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IMF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 세계경제가 지난해 성장률인 3.9%보다 높은 4.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는 IMF가 지난해 9월에 전망한 4.0%보다 상향조정된 것이다.

에서 인식되면서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유입이 확대 되어 엔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또한 일본 정부도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축소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데 영향을 받았다. 미국 중앙은행 Fed의 그린스핀 의장이 달러화가치의 하락은 재정적자 부담을 경감시키며 경상수지 적자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도 엔화상승의 또다른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 미국경제가 고용개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시장에서 평가되고, 또한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도 부각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로 반전되어 달러화 대비 엔화가치는 4월 21일 현재 109.5엔 까지 6% 정도 하락하였다(〈그림 1〉 참조).

유가는 상승세, 기타 원자재가격은 약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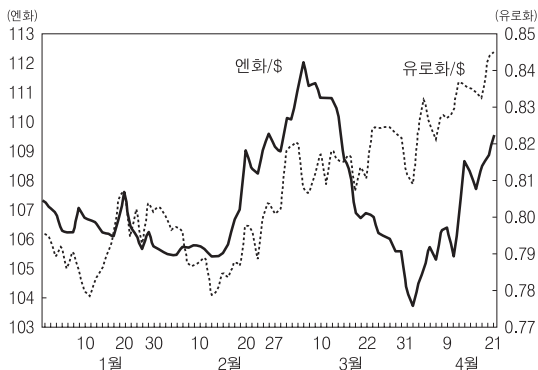
올 2월 10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임시총회는 회원국들의 현 생산쿼터를 준수하고 4월 1일부터 일일 생산량을 2,350만배럴로 100만배럴 감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영향을 받아 두바이유 가격은

2월 9일 배럴당 27.4달러에서 3월 24일 31.5달러까지 15% 상승하였다. 유가가 OPEC의 목표범위인 22~ 28달러를 크게 상회하면서 시장에서는 OPEC이 감산계획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유가와 낮은 재고수준 상황이 지속된다면 감산연기를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대산유국인 사우디 등 대다수 회원국들이 감산결정을 지지하였고, 일부에서는 유가의 목표범위를 상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3월 18일 OPEC 의장은 고유가가 세계경제에 부담되는 점은 우려스럽지만 OPEC은 쿼터량을 초과생산중이며 현재의 유가수준은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일부 회원국들의 정치적 불안에 따른 측면이 강하다고 발언하였으며, 결국 3월 31일 OPEC 정기총회는 생산쿼터 100만배럴 감축계획 이행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달러화가치가 강세로 진행되고, 원유에 대한 투기자금 중 일부가 빠져나가면서 유가는 하락세로 반전되었으며, 4월 5일 28.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고 이스라엘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다시 상승하여 4월 21일 현재 31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원유 이외 비철금속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은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따른 수요증가와 일부 공급차질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달러화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원자재가격지수인 로이터지수는 3월 24일 1747을 기록하여 2월 20일 1697 대비 3%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후 달러화가치가 강세로 진행되면서 국제 원자재가격도 약세로 반전

〈그림 1〉엔화와 유로화 추이



되었는데, 4월 20일 현재 로이터지수는 1730을 기록하여 지난 3월 24일 대비 1% 정도 하락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그림 2〉 참조).

주요 국가들의 경제동향

미국 : 견실한 회복세 지속

미국경제는 국내외 수요의 확대로 자본지출이 증가하고 산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동안 부진하였던 고용사정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고용부문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되었다. 올 4월초 발표된 고용시장 동향에서 3월중 비농업부문의 취업자수가 전월 대비 31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0월부터 경기가 침체에 접어들면서 지난해 8월까지 비농업부문의 일자리는 무려 140만개나 감소하였는데, 그 이후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 증가는 월평균 7만명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2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언한 바 있는 부시 정부로는 비현실적인 고용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비난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린스펀은 지난 2월 11일, 기업들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늘리지 않고 생산성 증대로 대처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향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으며, 4월 20일 스노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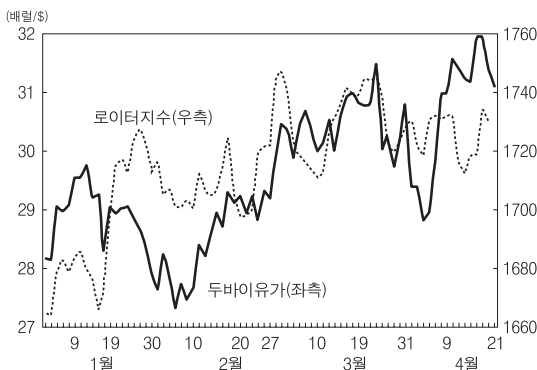
재무장관은 상원 증언에서 민간부문의 회복세로 향후 6개월 동안 월평균 1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비의 동행지표인 소매판매는 올 3월에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전월 대비로는 6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선행지표인 컨퍼런스 보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신뢰지수는 3월중 88.3을 기록하여 96.4를 기록했던 1월 이후 두 달 연속 감소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고용사정의 개선이 부진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최근 고용사정이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향후 소비여건도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비 및 건설 등 GDP의 16%를 차지하는 고정투자자는 지난해 4/4분기중 전기 대비 연율로 9.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올 1~2월중에는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비방위자본재 출하는 지난 하반기중 전기 대비 3% 내외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 1~2월중에는 전월 대비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외의 수요 확대로 생산활동이 활발하므로 기업들의 설비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중 저금리로 인한 주택수요의 확대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나 올해 들어와 조정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의 동행지표인 건설지출은 1~2월중 전월 대비로 두 달 연속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또한 주택건설의 선행지표인 신규주택 착공호수도 지난해 12월을 정점으로 올 1/4분기중에는 둔화되는 모습이였다. 현재 30년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중반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면서 Fed가 금리정책을 중립적으로 변경하고, 그린스펀 의장이 몇 차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함에 따라 하반기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주택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3〉 참조).

명목수출은 세계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수출

〈그림 2〉 유가와 로이터지수



미국경제는 국내외 수요의 확대로 자본지출이 증가하고 산업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그동안 부진하였던 고용사정도 뚜렷이 개선되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가치는 올 2월 중순 이후 강세로 반전되었다.

수요가 확대되면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중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축산물 수출이 부진하여 전월 대비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2월에는 다시 큰 폭 증가로 반전되었다. 수입 역시 미국경제의 회복세로 인한 수요 확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는 1~2월중 평균 430억달러 내외로 확대되었다. 한편 지난해 4/4분기중 경상수지 적자는 1,275억달러로 GDP 대비 4.5%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3/4분기(1,353억달러, GDP 대비 4.9%)보다 축소된 수치이다. 그러나 연간으로는 2003년 5,418억달러(GDP대비 4.9%)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년의 4,809억달러(4.6%)보다 확대되었다.

미국의 경제주체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자본지출 및 수출의 확대, 낮은 재고수준과 신규주문 증가로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공장가동률도 2월중 76.6%로 지난해 12월(75.6%)보다 상승하였다. 또한 생산의 선행지표인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지수도 3월중

62.5를 기록하여 증가세이며, 기준치(50)를 11개월 연속 상회하여 향후 제조업경기가 확장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더욱이 ISM 비제조업지수도 3월중 65.8로 상승세를 보여 비제조업부문도 확대를 시사하고 있는데, 비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은 제조업의 그것보다 월등히 크므로 향후 고용도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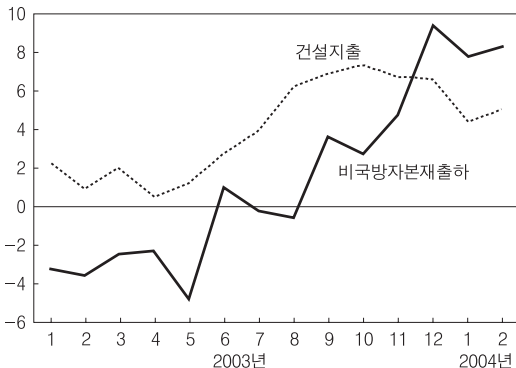
일본 : 해외수요 주도의 경기회복세 뚜렷하며, 소비도 회복 조짐

일본경제는 해외수요에 의존하여 수출 확대와 생산 증가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사정은 여전히 부진하다.

GDP의 13% 차지하는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세에 따른 수요확대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4분기중 명목수출은 경제회복의 속도가 빠른 아시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18%나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수출의 확대에 힘입어 산업생산과 출하가 1~2월중 전년동기 대비 6%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재고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시기의 전형적인 특징이다(<그림 4> 참조).

GDP의 17%를 차지하는 설비투자는 수출 및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건설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의 동행지표인 자본재출하(운송기계 제외)는 1~2월중 전년동기 대비 1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또한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선박·전력 제외)도 2월중 전년동월 대비 9.3% 증가하여 향후에도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3> 비국방자본재출하와 건설지출
(단위 :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GDP의 54%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그동안 부진하였으나 최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의 동행지표인 소매판매와 가계소비지출은 지난해 하반기중 감소세가 둔화되었으며, 올 1~2월중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질임금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자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서 소비가 회복세를 보인다기보다는 부진의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4월초 일본은행이 발표한 단기경제전망관측조사(단칸)에 따르면 업황지수가 -5였는데, 이는 지난 12월의 -11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대기업 제조업뿐만 아니라 비제조업 및 중소기업들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수출경기의 호조세가 내수경기의 회복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올 대형 제조업체들도 설비투자를 7.4%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로지역 : 경기부진 지속과 금리인하 기대 고조

유로경제는 유로화 강세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높은 실업률과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미국과 일본의 경기회복과는 차별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유로지역은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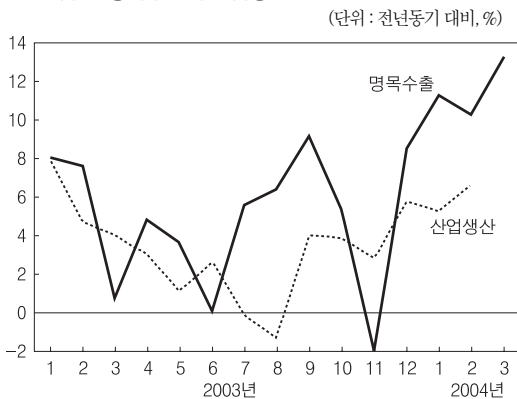
35%로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크므로 수출의 확대가 경기회복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현재 세계경기의 회복세에 힘입어 미국과 일본 및 아시아 등 여타 국가들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지역의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유로화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다.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치는 3월말 현재 0.812유로로,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1% 정도 상승한 수준이다. 한편 유로화의 강세는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유로지역은 현재 물가목표의 상한선을 2%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를 상회하였으나 올해에는 원자재가격의 급등세에도 불구하고 1.7% 내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지역의 경기가 부진한 또 하나의 요인은 소비침체의 지속이다. GDP의 57%를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지난해 4/4분기중 전기 대비 0.1% 증가에 머물렀으며, 소매판매도 올해 1~2월중 전년동기 대비 소폭의 증가세에 그치고 있다. 소비가 회복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고용사정 악화 지속으로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경기회복을 확신하지 못하여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데 있다. 실업률은 2월중에 높은 수준인 8.8%를 12개월 연속 유지하였고, 특히 지역경제의 두 축인 독일(9.3%)과 프랑스(9.4%)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산업활동도 침체된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물량기준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산업생산도 1~2월중 전년동기 대비 1% 미만의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기 회복세가 유럽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제조업체의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월 53.3을 기록하여 기준치(50)를 상회하고 있어서 제조업 생산이 완만하지만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로지역의 수출 부진과 소비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처방으로 환율 및 재정 정책보다는 금리정책에 대

〈그림 4〉 명목수출과 산업생산



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고평가된 유로화가치의 시정을 위하여 그동안 유럽중앙은행은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면서 주요 상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구하여 왔었는데, 2월말 이후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환율에 대한 논의는 잦아들고 있다. 두 번째로, 재정적자 확대정책은 EU의 '성장 및 안정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각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한계에 봉착하여 있다. 지난해 유로지역 경기의 부진으로 회원국들은 적자재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2.7%를 기록하여 전년(2.3%)보다 확대되었으며, 특히 경기가 부진한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3.9%와 4.1%로서 2년 연속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EU로부터 재정적자 감축 권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기준금리의 추가적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지역의 현 기준금리는 2%로서 미국의 1%나 일본의 체로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지난 3월중에는 소비침체가 지속되고,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의 투자 및 기업실패지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유럽의 경기회복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상이 확산되면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4월초 유로지역경제의 점진적 회복을 예상하면서 현재의 금리수준은 경기회복 지속을 위하여 충분한 저금리이며, 또한 중기적 물가안정 목표에 부합한다면서 금리수준의 동결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IMF도 이를 권고하고 있으나 유럽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 경기과열 및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감 증대

중국경제는 현재 수출과 생산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소비도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도 과잉투자와 경기과열을 우려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1/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9.7%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와 위안화의 약세로 수출 수요가 확대되면서 1/4분기중 1,160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34%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내수의 확대로 수입도 42%나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84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하였다. 수출과 내수의 확대에 힘입어 산업생산도 1/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하여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임금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도 견실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소매판매는 1/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기과열 논란 가운데 소비의 확대와 일부 농산물 공급의 차질은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하였는데, 특히 곡물(30%), 육류(15%), 수산물(19%) 등 식료품(8%)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투자는 주택 및 철강 등의 부문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1/4분기중 전년동기 대비 43%나 증가하여 지난해 4/4분기(28%)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중국 경제당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통화 공급 억제, 은행지급준비금 한도 상향조정 및 주택관련 대출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회간접자본 및 철강 등 일부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중에는 재할인율의 인상 및 부실금융기관의 대출여력 축소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억제 조치의 강화에 앞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면서, 과잉투자 및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설명기 KDI 계량모형팀 전문연구원〉

이 글은 IMF·OECD·세계은행 등 해외 주요기관들이 발표한 보고서·통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것으로서 정부나 KDI의 공식견해가 아님.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경쟁력 분석

외환위기 이후 5년이 넘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깊은 불안과 의구는 여전하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불안의 밑바탕에는 세계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기회는 이미 '잠재적' 요인이 아닌 구체적인 현실로서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즉, 저가 범용제품에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내수시장이 지속적으로 잠식되는 반면, 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선도기업들은 중국을 일종의 특수시장으로 삼아 세계적 일류기업으로서 새롭게 발돋움하고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의 산업은 산업구조·기업활동·경쟁환경 등 경쟁력에 관한 모든 면에서 급격하고 심층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새로운 세계 경제환경과 외환위기 이후의 새로운 국내 경제환경이 결합하여 국내 산업의 일대 구조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변혁기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위상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가? 경쟁력 강화 및 고용안정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역성과와 같은 경쟁력의 최종성과는 물론 생산성과 같은 경쟁력의 중간성과 그리고 연구개발·외국인직접투자와 같은 경쟁력

의 결정변수를 포괄하여, 통계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결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산업평균에 초점을 맞춘 종래의 총량적인 접근방식을 넘어, 생산연쇄(supply-chain)의 구성요소와 기업규모계층별로 산업을 세분화하여 분석하는 보다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국민경제적으로 중요성이 높으면서도 발전단계·시장환경·혁신유형에 있어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전기전자·자동차·화학·기계·섬유의류의 5개 제조업(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의 약 50%, 고용의 약 60%, 수출의 약 70%를 차지) 그리고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s) 등 총 6개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기·전자

한국의 전자산업은 짧은 기간에 조립생산 단계를 거쳐 일부 전자제품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선도기업을 보유하고는 대단히 역동적인 발전과정을 밟아 왔다. 금성사가 라디오 생산을 시작한 1959년부터 DRAM 및 TFT-LCD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

까지, 약 40여년의 기간에 ‘모방에서 혁신으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다.

성장과 수출을 주도해 온 전자산업은 각 부문별로 산업조직·성장패턴·무역구조·경쟁력패턴 등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선단형 산업조직을 가진 메모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 제품의 기반이 되는 부품·소재 부문은 취약한 실정이며, 반도체의 경우에도 메모리의 경쟁력이 강한 반면 비메모리 분야는 대단히 취약하다. 전자부품의 경우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자부품 시장이 제품과 기술에 따라 분절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컴퓨터·사무용기기 및 가전 부문은 낮은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품과 기술이 성숙단계에 있어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시장진입이 다른 전자산업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통신장비 및 기기 산업이 예외적으로 비교열위를 보이는 부문인데, 이동통신기기(휴대폰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품목에서만 경쟁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들 부문에서도 이미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쟁력패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산업 하위의 부문별 시장 및 산업 특성의 차이가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문으로서 이 같은 경제적·기술적 진입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반면에 전자부품의 경우 제품의 수평적 차별화가 가능하여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이 비교적 용이하고 또 각각의 제품 시장이 분절되어 있으므로 소규모기업이 틈새시장을 확보하기가 비교적 쉬운 특성이 있다.

통신장비 및 기기 부문에서는, 시스템장비의 경우 세계시장을 소수의 다국적기업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필적할 국내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반면, 통신기기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과 함께 틈새시장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용화 단계의 컴퓨터·사무용기기 및 성숙·표준화 단계의 가전에 있어서는 가격경쟁이 매우 심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는 낮은 수준이며,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일부 가전에 있어서는 국내 기업이 핵심부품·기술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으나, 디지털기술을 가전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는 일본·중국 등에 비해 열위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방문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선도 대기업이 존재하는 부문에서는 기술·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견·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부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자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컴퓨터·가전과 같이 경쟁요소로서의 가격요인 비중이 큰 부문에서는 중국이 급속하게 부상하고 있는 반면, 메모리반도체·디스플레이와 같이 기술, 대규모 투자 등 비가격요인의 비중이 큰 부문에서는 중국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점은 통신기기 부문에서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이는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하위부문 간의 차이 및 하위부문 내에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차이 등 전자산업 내부의 이중구조는 향후 한국 전자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위기업의 경쟁력이 체고되지 않고서는 산업 전체적인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측면에서도 전기부품과 같이 전기전자산업 내에서 그 고용비중이 높은 부문의 경쟁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반면, 반도체·IT가전과 같이 경쟁력이 높은 부문들은 그 고용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결국 전기전자산업 전체의 총량적 성장이 고용의 양적 팽창에는 별달리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이중구조의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

며, 동시에 특화된 전문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자동차

외환위기는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을 촉진하여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과잉투자 와 전근대적 경영구조의 문제를 단기간에 교정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종업원수 300인 이상 대기업이 1.6%에 불과한 반면, 중소기업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어 규모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의 영향으로 기술의 고급화와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합리화를 위한 인력재배치과정을 거쳤으나, 직종별 구성에 있어서는 생산직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반면 영업직의 비중은 감소하는 가운데 생산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세계적인 대규모 부품제조업체들의 국내진출로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완성차업체의 외부조달 비율은 일본과 비슷한 약 70% 수준이나, 미국이나 유럽기업의 40%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높은데, 이는 일본과 같이 국내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이 모기업의 계열사들이거나 하도급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모듈생산방식은 완성차업체의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생산원가의 절감효과가 있으나(약 20%) 부품업체의 기술력과 혁신역량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면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부품업체 중 단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48.1%를 차지하는 반면 모듈화 직전 단계인 유니트 부품업체가 51.9%에 이르고 있어 모듈화 초기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역성과의 경우, 수출급증과 수입감소로 인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품산업의 경우 1997년 이후 소폭이나마 흑자기로 반전되었다. 수입의 대부분은 부품이 차지하는바,

최대 부품수입국인 일본의 비중은 1992년 70%에서 2000년 53%까지 하락하여 부품수입의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반면에 NAFTA 및 EU국가들로 부터의 수입은 각각 18%→26% 및 10.8%→18.7%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완성차의 경우 NAFTA·EU 등 우리의 주요시장에서 일본·독일·이탈리아 등과 높은 경합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ASEAN에서는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으나, 중국과의 경합도는 점차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품시장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와 거의 완전하게 가까운 경합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완성차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외환위기 이후 가파른 상승추세로 전환한 반면, 부품산업은 여전히 1990년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 다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품산업과 완성차산업 간의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1980년대 중반에는 부품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에 역전되었으며 외환위기 이후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완성차산업이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부품업체의 영세성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자동차산업 전반의 경쟁력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 모듈화가 가장 핵심요인인 반면, 한국 자동차업체의 모듈화가 주로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 간의 임금격차(약 40%)를 이용한 부품원가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쟁력 제고에 있어 R&D가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요인으로 등장하여, 1차 업체는 물론 최근에는 많은 2, 3차 업체의 초보적인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업체의 경우 완성차업체와 40% 이상 되는 임금격차로 인한 생산직 구인난과 함께 인력의 질 저하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품업체의 독자적인 기술개발, 구매 및 판매, 세계시장 추세 등에 관한 정보수집능력은 취약하고 대부분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 자동차산업은 다국적기업의 진출에 힘입어 완성차를 생산하게 되었고 이를 통하여 생산경험을 축적하였으며 부품업체도 성장하였다. 중국 부품업체는 대체로 가격경쟁력은 매우 강한 반면 기술과 품질에서는 아직 뒤진다. 그러나 중국 부품업체들 역시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어 중국의 추격은 멀지 않아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급 R&D 역량을 갖춘 인력양성이 시급하며, 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 기업의 생산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기계

일반기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2001년 현재 8.4%(13조5천억원)이고, 제조업 총수출의 약 4.3%(8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현재 사업체수는 1만2,700개소로 제조업 내에서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약 25만명으로 9.4%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 중심 산업으로 2001년 현재 종사자수 100인 미만인 소기업이 전체의 약 9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 중·대기업은 2.1%에 불과하다. 업체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0인 미만의 소기업이 산업의 거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체수 비중은 약 2%에 불과한 중·대기업이 생산액 기준으로는 약 4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핵심부품·소재 전문 중소기업의 부족이 생산구조상 취약점이며, 국내 기계부품업체의 대다수는 매출구성이 단품위주로 영세하여 기술개발 동기가 부족하다.

일반기계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노동생산성을 보면, 외환위기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 부문에 걸쳐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엔진 및 터빈 제조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성장회계 방식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추정한 결과, 규모에 관계없이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기계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수출률은 정비례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가장 높은 수출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인 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7% 이하의 수출률을 보이고 있다. 세부산업별 수출률의 경우 2000년까지 약 20% 이내를 기록하였으나 2000년 이후 거의 모든 부문에서 수출률이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고, 특히 엔진 및 터빈은 50%에 가까운 수출률을 기록하였다.

수출성과 측면에 있어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적자폭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이며 적자의 대부분은 미국 및 일본과의 무역역조로 발생하고 있다. 주요 수출대상국은 미국·중국·일본·대만·독일의 순이며, 2001년의 경우 이들 5개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전체 일반기계 수출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 중국 수출비중의 경우 1991년 2.1%에서 2001년 12.6%로 크게 증가하여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일본·미국·대만 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중국경제의 고성장으로 중국에서 기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중국·일본의 3국 간에는 일본은 주요 핵심부품 개발에서, 한국은 제품개발 및 중위기술 제품의 생산에서 그리고 중국은 생산비용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범용기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계산업의 분업체계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기존의 범용기계 생산 중심에서 기반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특수기계 생산체제로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내 일반기계산업은 생산·조립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별 수준으로 보면 가공·조립기술 분야의 경쟁력은 강한 편이다. 반면, IT 등 신기술을 접목·응용하고 설계기술이 요구되는 전문기계 부문의 경쟁력은 약하다. 이러

한 배경에는 중소기업 중심인 기계산업의 산업구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계산업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9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대다수의 매출구성이 단품위주로 영세하며 기술개발 동기가 부족하여 기계산업 발전의 기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모자란다.

반면,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설비 합리화 및 산업구조 건전화 등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기계산업 전반의 발전을 주도할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따라서 산업 전체의 기업간 전문화 및 이에 기초한 유기적 연계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또한 선진국과의 격차가 매우 큰 설계기술·유공압기술 등에서의 기술능력 제고가 시급한데, 이를 위해서는 산·학 연계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부문에 잠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화 학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화학산업 세계시장의 변화는 선진 화학기업들의 현지화전략, 기업간 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확보, 신물질 및 신제품 개발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동·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과거의 범용제품 위주에서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다양화로의 산업구조 고도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화학산업에는 석유화학·정밀화학·플라스틱·고무제품 등 다양한 산업들이 포함되고 생산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생산구조는 산업별 차별성이 강한 편이다. 2002년 현재 화학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업체수 기준 10.6%, 생산액 기준 14.0%, 부가가치 기준 14.2%, 수출액 기준 13.5%로 나타나,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생산액, 수출액, 부가가치 비중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후 회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생산규모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석유화학제품의 주된 기초유분인 에

틸렌 생산은 세계 4위(연산 570만t)이며, 합성수지(범용수지)는 세계 3위(연산 902만t) 그리고 합성섬유 폴리에스터 주원료인 TPA는 세계 1위(435만t)의 생산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 화학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다양한 관련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먼저 생산성 관련지표 기준으로 살펴보면, 화학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부문에 걸쳐 계속 높아지고 있으나, 소부문별로는 생산성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에서는 기초유분과 합성고무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반면, 합성수지 및 합성섬유 부문은 상대적으로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밀화학산업에서는 화장품·치약·비누·세제부문의 생산성은 높으나, 염료·안료·유연제·도료·잉크는 매우 낮은 편이다. 한편 화학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유분과 합성수지의 경우 전기간(1985~200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플라스틱·고무제품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밀화학산업의 경우 비료·농약, 화장품·치약·비누·세제, 도료·잉크부문에서는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의약품은 1997년까지 증가하다가 1998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화학산업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수준을 몇 가지 주요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 화학산업의 수출률은 대체적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 이후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전부문에 걸쳐 수출률이 40%를 상회하는 반면, 정밀화학은 10%대에 그치고 있는바 전형적 내수 산업임을 보여준다. 플라스틱제품은 수출률이 낮으나 고무제품은 40%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현시비교우위(RCA)지수의 경우 석유화학은 전부문에 걸쳐 독일 다음으로 높은 비교우위 수준을 보여준다. 반면 정밀화학의 경우 대부분 RCA지수가 매우 낮으며 1997년 전후로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플라스틱제품은 RCA지수가 매우 낮으나, 합성고무는 독일 및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

다. 셋째, 무역특화지수 기준으로 보면 석유화학산업은 무역특화지수가 상당히 높으며, 특히 중국 및 ASEAN 시장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경쟁력 우위현상은 저부가가치 범용제품 수출(수출의 60% 차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밀화학의 경우 도료와 잉크를 제외하면 무역특화지수 기준 경쟁력이 매우 저조하며, 플라스틱·합성고무제품은 정밀화학에 비해 무역특화지수가 양호한 수준이다. 특히 합성고무제품의 경우 미국·NAFTA·EU 등의 시장에서 높은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넷째,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높은 편이나, 정밀화학산업은 대부분의 시장에서 매우 낮고 증가세가 미미하거나 하락세를 보여준다. 플라스틱제품·합성고무제품의 경우 1998년 이후 해외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거나 정체상태에 놓여 있지만, 아직까지 절대수준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세계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①국내업체간 사업분야 조정을 통한 전문화 및 신·증설 없는 규모의 경제 실현 ②생산공정 효율화 및 공동구매·물류시스템 구축으로 저비용구조 실현 ③유망분야 기술에 대해 국내업체간 전략적 제휴 강화를 통한 제품개발기간 단축, 연구개발비 절감 및 상업화기간 단축 ④범용제품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탈피, 제품차별화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 및 사업 포트폴리오(신소재·정밀화학·생명공학 등) 확대 등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정밀화학산업의 경우에는 ①중소기업간 활발한 M&A,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존 업체간 통합 유도, 정밀화학업체의 규모 확대 및 집약화 도모 ②대기업의 정밀화학 진출 유도를 통한 종합화학기업화 적극 모색,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조·협력체계 수립 ③핵심기술기반의 확충을 통한 범용제품 중심의 사업구조 탈피, 이를 위한 산·학·연 활성화 및 기업간 협동연구체계 구축 ④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제품의 안전

성·위해성·환경적합성 심사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

섬유·의류

섬유의류산업은 오랜 기간 수출·고용 등에서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중국 및 개도국의 급격한 생산 확대로 국내업체의 주력품인 범용저가제품의 경쟁력이 이미 위협받고 있는데, 다자간섬유협정(MFA)의 단계적 철폐, 중국의 WTO 가입 등이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경쟁력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비의류섬유제품 및 의류유통업체의 경쟁력은 높아지고 있으나, 섬유기계·염색가공 등은 정체상태에 있으며, 사·화섬직물·봉제의류 등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이다. 특히 봉제의류의 경우 그 하락 추세가 역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성과를 볼 때, 섬유·의류산업의 전체의 수출률은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섬유기계가 유일하게 수출률 증가세를 보였다. 무역특화지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지속적인 수출둔화 및 수입급증으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업종별로 볼 때 화섬직물이 아직도 수출특화 정도가 높은 반면 의류는 그 특화 정도가 크게 약화되었다. 지역적으로 아직 중국·NAFTA에 대해 수출특화 상태에 있지만 최근 그 특화 정도가 거의 소멸되는 양상이다.

섬유의류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체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아직 제조업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2001년 현재 반도체의 약 10분의 1)이다. 최근 들어 섬유·의류산업 내 상대적인 고생산성 부문(화섬사·직물, 비의류섬유제품 등)과 저생산성 부문(염색가공·봉제) 간에 일종의 생산성 수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타 제조업과 달리 총요소생산성은 1985년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8년 이후에는 업종간 양분화 현상을 보여 화섬사·천연직물·섬유제품 등은 상승세인 반면, 섬유기계·염색가공·의류·화섬직물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기업규모계층별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 추세를 보면 대기업은 급락하는 반면 20인 미만 소기업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업 방문조사 결과를 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직물 및 의류유통 부문에서 독자적인 기술이나 마케팅 능력을 갖춘 혁신 지향적 기업군이 새롭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숫자는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금융여건이 가장 큰 애로요인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인력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순생산인력은 물론 패턴전문가 등 중급기술인력 부족이 특히 심각한 상황이며, 과거 부족했던 디자인·패션인력은 양적으로는 크게 늘었으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후도가 심한 섬유기계 부문은 전문기술자와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교육인력 모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 및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유통·조달·섬유공학 등을 포괄하는 산·학·연 간의 새로운 혁신네트워크형성이 중요하나 현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섬유유통업계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미미한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다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진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결과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향후 중국진출 계획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섬유유통시장이 성장할 것은 분명하지만 복잡한 중국의 유통구조와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고 원가와 비용 측면에서도 중국진출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내 섬유유통업계는 대부분의 구조조정·워크아웃이 종료된 상태이며 1990년대에 무리한 사업다각화를 추진하였던 대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섬유유통의 핵심사업 외의 주변 사업을 정리하였다. 아직 극소수이지만 일부 선도 직물업체들도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특정지역에 생산시설상 연계가 높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집적되어 있

는 국내 섬유유통업계의 특성은 향후 섬유유통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산이다. 동대문혁명으로 대변되는 유통혁명은 국내특유의 섬유유통 생산유통체제의 잠재력을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소품종 다량생산체제의 직물업체와 디자인이나 품질이 아닌 가격경쟁력으로 시장에 남아 있는 업체가 대부분이어서, 이탈리아와 같은 고가 차별화제품 중심의 산업구조를 실현하기는 요원하다.

개도국으로부터의 거센 경쟁압력에 대응하여 국내 섬유유통산업의 급격한 쇠퇴를 회피하려면 직물·의류를 막론하고 다품종 소량, 고부가·차별화제품 중심의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직물 부문의 부실·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조조정과 함께, 다품종 소량 직물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및 경영안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국내 직물산업 체질전환의 가장 큰 애로부문이라 할 섬유기계·염색가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직물부문의 이러한 구조전환을 위해서는 현재 고가와 저가로 양분되어 있는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중간가격대 보급용 패션의류의 내수시장을 확장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내 직물업체가 다품종 소량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초기 시장 수요를 확충하고, 이 같은 내수기반을 바탕으로 한 직물업체의 학습 및 기술축적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중고가 제품시장에서 나름대로의 니치마켓을 확보하도록 하는 복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섬유기계-직물-유통을 잇는 섬유산업 가치연쇄 전반에 걸친 시스템 혁신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섬유산업의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세를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속도를 얼마만큼 둔화시킬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섬유유통산업이 일대 체질전환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위기와 당분간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제조업내 부가가치 비중 5~6%대의 안정적인 발전경로를 찾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업서비스

사업서비스(business service)는 “가치연쇄상에서 중간투입물로 활용되어 공급자와 수요기업,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에서 결과되는 품질과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최접경 부문으로서, 종래에는 제조업 부문 개별업체에 내부화되거나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점 더 독립된 성격의 서비스로서 시장에 의해 제공되게 되었다. 제조업 개별업체의 외부에서 제공되지만 제조업 가치사슬의 핵심 요소로서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서비스를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①가치연쇄상에서 서비스기능의 외부화가 실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②사업서비스가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혁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③만일 경쟁력 제고에 대한 기여도가 작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가 분석의 주된 관심이자 문제의식이다.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현재 3.78%로서, 영국 14.53%, 독일 12.55%, 일본 7.32%, 멕시코 5.76%와 비교하여 극히 낮은 수준이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과거 10년간 사업서비스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사업서비스산업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은 서비스기능의 아웃소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데 기인한다. 또한 아웃소싱 부문도 총무·홍보, 인사·교육훈련, 정보시스템, 물류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국내의 사업서비스 부문은 시장의 미발달로 인해 공공부문이 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에는 각종 인증·자격제도의 발전, 정보화의 진전, 수요의 확대 등에 힘입어 전문사업서비스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겪은 기계장비 및 용품 임대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 비중, 총산출 비중, 고용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취업자 1인당 산출과 부가가치(또는 GDP 비

중) 모두 다른 산업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사업서비스산업의 중간수요율과 감응도계수가 증가하였는데(공학서비스의 경우 1980년 0.87에서 2000년 2.92로 증가, 기계장비 및 용품임대의 경우 0.97에서 2.67로 증가), 이는 사업서비스산업의 전방과급효과가 상당히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 사업서비스가 중요한 중간투입물로 활용됨에 따라 사업서비스 부문에서의 규모의 경제, 혁신,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낮추게 될 경우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사업서비스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국내업체의 영세성 및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역량이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국내의 아웃소싱을 통한 사업서비스 활용의 경험은 활용 분야나 목적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일천한 수준이다. 또한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과 같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전문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국제법, FDI 유치, 상장관련 자문 등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서비스의 질이나 전문성·다양성·규모 등에 있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한편, 사업서비스를 아웃소싱함에 있어 적절한 사업서비스 제공업체의 선정 및 아웃소싱 관계의 지속적 관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서비스업체의 신뢰성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M&A를 통한 규모의 확대, 전문성 확보, 사업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최우선과제라 할 수 있다.

현재 선진국의 경험은 아웃소싱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기능의 아웃소싱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소싱이 목표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치연쇄 전반에

결친 가치의 제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의 핵심역량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는가, 사업에 있어 비핵심적인 기능이 제3자에 의해 더욱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외부 전문사업자의 핵심역량을 기업 내부의 핵심역량과 결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아웃소싱 관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서비스기능에 대한 아웃소싱이 실행방안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전략으로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시점 : 산업구조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 방향

기계·화학·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과 같은 중간재 및 자본재 산업은 전형적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새로운 시장창출과 기술혁신의 기회가 계속 확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우리나라의 성장주력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산업 중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반도체·디지털가전·이동통신기 등과 같은 대기업형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게 되었는데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이 이러한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의 매수, 중·고위 기술의 외주화, 선도적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적절히 구사하면, 특히 빠르게 팽창하는 중국시장을 배경으로 세계 경쟁에서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밀화학과 기계산업은 절대적인 고용비중이나 산업연관관계에서 그 중요성이 막대하나 아직 경쟁력이 취약하며 조만간 중국의 추격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 뚜렷한 선도기업이 없고, 기술적·경제적 장벽이 높은 부문이기 때문에 종래의 육성정책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차상위의 중·고위 기술 개발을 목표로 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외국 선도기업들의 중·고위 기술과 품목 개발을 위한 아시아 생산기지나 지역기술센터를 국내

에 유치할 수 있도록 입지조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전략은 첨단 신기술 분야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는 향후 몇 년간 선행투자 성격의 R&D에 주력하여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의 성과 확인 단계를 거쳐 이들 품목에 대한 세계 수요가 확대될 경우를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체적으로 현재 경쟁력 위기를 겪고 있는 많은 부문은 기술혁신 능력 결여라는 공급측면의 애로요인뿐 아니라 제품시장의 협소라는 수요측면의 애로요인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섬유·의류와 같은 산업이 대표적이며 기계공업 역시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 산·학·연 협력체제 정비, 외국인투자유치 등과 같이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의 정책에 더하여, 국내 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축적하고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하기까지 최소한의 내수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정책에도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우천식 KDI 지식경제팀 연구위원〉

알아두면 득이 되는 화폐의 시간가치-‘현재가치’

시 간이 지날수록 물가상승만큼 돈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면 20년 혹은 30년 후의 돈 가치는 지금 가치로 얼마나 될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떠나 장기적인 재무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이다.

예를 들어 보자. 노후대비를 위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려 한다고 하자. 가입하려는 보험상품은 앞으로 30년 후 60세가 될 때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한번쯤은 고민하게 된다. 지금 돈 1억원의 가치는 감이 오지만 30년 후에 받는 1억원은 그사이 물가만큼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연히 지금보다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30년 후의 1억원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못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가치에 대한 감을 갖고 있어야 보험금 1억원이 충분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가입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30년 후의 1억원은 지금가치로 얼마나 될지 계산해 보자. 미래금액의 현재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향후 물가상승률을 추정해야만 한다. 이는 과거 물가상승률 추세나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향후 상승률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참고로 통계청에서 조사 발표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는 2003년 현재 110.7(기준: 2000년=100)로서 지난 20년간 평균 약 4.6%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은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3%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근거로 30년 후 1억원의 가치를 추정해 보면,

향후 물가상승률이 평균 3%가 유지될 경우 지금 돈으로 4천 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된다 (환산표 참조). 지금 가치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막상 계산한 결과는 지금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것은 최근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가치가 더

〈현재가치 환산표(미래가치 1원에 대한 물가상승률별 현재가치)〉

	3%	4%	5%	6%	7%	8%	9%	10%
1년	0.9709	0.9615	0.9524	0.9434	0.9346	0.9259	0.9174	0.9091
2년	0.9426	0.9246	0.9070	0.8900	0.8734	0.8573	0.8417	0.8264
3년	0.9151	0.8890	0.8638	0.8396	0.8163	0.7938	0.7722	0.7513
4년	0.8885	0.8548	0.8227	0.7921	0.7629	0.7350	0.7084	0.6830
5년	0.8626	0.8219	0.7835	0.7473	0.7130	0.6806	0.6499	0.6209
7년	0.8131	0.7599	0.7107	0.6651	0.6227	0.5835	0.5470	0.5132
10년	0.7441	0.6756	0.6139	0.5584	0.5083	0.4632	0.4224	0.3855
15년	0.6419	0.5553	0.4810	0.4173	0.3624	0.3152	0.2745	0.2394
20년	0.5537	0.4564	0.3769	0.3118	0.2584	0.2145	0.1784	0.1486
30년	0.4120	0.3083	0.2314	0.1741	0.1314	0.0994	0.0754	0.0573

주: 현재가치(PV) = FV ÷ (1+i)^N (FV = 미래가치, i = 이율, N = 기간)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만일 예상 물가상승률이 4%인 경우라면 30년 후 1 억원은 지금 가치로 약 3천만원밖에 안 되며, 물가상승률이 5%로 높아진다면 이때는 지금 가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천300만원밖에 안 된다. 물론 이러한 일은 없어야겠지만 이쯤 되면 자칫 나이 들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따라서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한다”라는 말은 최소한 돈의 가치에 있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만큼 손해 볼 수밖에 없으며,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만큼의 수익을 올려 줘야만 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다. 예전에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야 크게 고민할 일이 없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판판이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는 말이 뜻하듯 지금의 금리 수준은 사상최저 수준으로서 이자소득세와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남는 게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런 까닭에 불리기는 고사하고 지키기도 쉽지 않은 것

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투자를 통해 물가상승률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다만, 투자가 항상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만큼 철저한 위험 관리와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이 따라야 한다. 최선의 방법은 자신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하는 분산투자전략이다. 좋은 상품, 유능한 관리자, 바른 안목을 지닌 투자자가 서로 합쳐질 때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물가상승의 벽을 뛰어넘어 자산을 불려나가는 해법이 될 것이다. ■

한상인 신한은행 PB사업부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공개시장조작이란 중앙은행이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공채 등 증권을 사고팔아 이들 기관의 자금사정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통화량과 단기시장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은 지급준비율정책 및 재할인정책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3대 간접통화관리수단의 하나로서 정책효과가 금융시장의 가격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고 중앙은행의 필요에 따라 조작시기 및 규모를 신속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정책은 가장 정통적인 통화신용조절수단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개시장조작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동성과 안전성을 갖춘 대상증권(주로 국채)의 충분한 공급과 발달된 유통시장의 존재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금리의 형성 등 금융시장의 제반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시장조작 수행방식은 채권의 단순매매(outright sales and purchases) 및 환매조건부매매(RP매매 : repurchase agreement) 두 가지가 있다. 단순매매는 시중유동성을 기초적으로 조절할 때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완전히 사거나 파는 것을 말하며, 환

매조건부매매는 일시적인 시중유동성 조절수단으로서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후 다시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보유채권을 매각하거나 반대로 일정기간 후 다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조작정책은 1961년 11월 통화안정증권이 발행되면서 시작하여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조작이 가능해진 이래 1977년에는 매매대상기관의 범위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로 구분하였다.

1986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전환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을 흡수하기 위해 공개시장조작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였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조작의 정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활용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즉, 1993년 3월에는 환매조건부 국공채매매조작에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였고 1997년 8월에는 한국은행금융결제망(BOK-wire)을 통한 전자입찰방식을 시행함으로써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정책 운용체계를 정착시켰다.

나라경제 정기구독 신청서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편집실 앞
FAX : (02) 3295-0744

아래 사항을 기입하신 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기간 : 2004년 __월호부터 200__년 __월호까지 (__년__간)

▶ 신청부수 : ____부

▶ 신청자 : 개인 기관

〈개인〉 성 명 : 전 화 :
직장명 : 직 위 :
우송처(주소) :
e-메일 :

〈기관〉 기관명 : 전 화 :
주 소 :
우송처(부서) :
신청자 성명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 원하시는 곳에서 편안히 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독료가 절약됩니다.
- 경제정책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정기구독료

- 1년 25,000원
- 2년 45,000원

구독 문의 : 전화 : (02)958-4656

(02)958-4326

e-메일 : nara@kdi.re.kr



경제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참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2003년판 45,000원

창간 이후 **나라경제**를
모두 영구보존판으로 묶었습니다.

나라경제 통합본은 경제사적 자료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중요한 지침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KDI경제정보센터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 (02)958-4326

팩스 : (02)3295-0748

경제정보의 세계로 오십시오

<http://epic.kdi.re.kr>



경제정책정보

경제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발표되는 모든 경제정책자료를 신속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외 언론 경제보도

국내 언론의 주요 경제논단과 세계 주요 외신의 경제관련 기사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멀티미디어 자료

경제이슈에 대한 설명자료를 동영상으로 제공합니다.

국내외 기관자료(infolink)

검색로봇이 매일 세계 주요 경제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분류합니다.

클릭 경제교육

중·고등학교 사회과 선생님들을 위한 경제관련 자료실입니다.